

Jeonbuk State Institute

정책연구

2026-13

전북 외국인정책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iagnosis and Improvement of Immigration Policy
in Jeonbuk State

박지애 전희진 최지훈



설립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 용역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연구진 소개

박지애

University of Florida 사회학 박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전희진

University of Michigan 사회학 박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21 사업단 박사후 연구원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지훈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
전북연구원 연구원

Jeonbuk State Institute

정책연구

2026-13

전북 외국인정책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iagnosis and Improvement of Immigration Policy
in Jeonbuk State

박지애 전희진 최지훈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박지애 | 연구위원 | 연구총괄, 제1장, 2장, 3장, 4장
공동연구 전희진 | 책임연구위원 | 제3장 3절, 4장 1절
최지훈 | 연구원 | 제2장(1절, 3절 일부, 4절), 3장 2절 일부

자문위원 고보혜 | 광주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박민정 |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설동훈 | 전북대학교 교수
송영호 |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이정민 |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진 |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연구관리 코드 : 26JU09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외국인정책 환경 급변과 전북의 외국인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의 추진 현황과 구조적 한계를 분석·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세부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의 비전과 전략체계를 변화된 정책환경에 부합되도록 재정립하고, 전략별로 기 추진사업을 재구조화하는 한편, 신규 발굴한 세부 과제(안)를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내용

- (1)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현황과 사례, 전북의 외국인정책 여건 및 추진사업을 검토하여 변화된 외국인정책 환경을 파악하고, 전북 외국인정책·추진사업의 현주소를 진단. (2)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 수요를 분석하여 기존 외국인정책·추진사업의 강점과 쟁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현장 의견을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 (3)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의 개선 방향과 세부 과제를 도출·제안

■ 연구 방법

- 중앙부처·지자체 정책자료, 선행연구와 행정자료를 검토하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외국인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
- 정책 수요자와 현장 전문가 총 22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과 FGI를 병행하여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정책 진단과 개선안의 타당성을 보완

2. 결론 및 정책제언

■ 정책적 함의

- 전북은 외국인의 유입과 초기 적응을 지원하는 기반을 일정 수준 갖추고 있으나, 유입 이후 성장·정주 경로와 가족 단위 생활 안전망, 상호문화 통합, 데이터 환류 체계 및 총괄 추진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북 외국인정책의 개선 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안)

- 전북 외국인정책의 비전은 “이민자와 지역의 성장·상생이 체감되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설정하고, 유입한 외국인이 전북에서 성장 기회를 확보하고 가족과 함께 정착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전북형 성장·상생 이민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함
- 데이터와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외국인의 유입·성장, 가족동반 정착, 상호문화 통합 및 글로벌 환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4대 추진 전략, 51개 세부 과제를 구성함

비전		이민자와 지역의 성장·상생이 체감되는 전북특별자치도			
목표		유입된 외국인이 전북에서 성장 기회를 얻고, 가족과 함께 정착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전북형 성장·상생 이민생태계 구축			
정책기조		단순 유입 확대에서 벗어나, ①데이터 기반 ②유입·성장·③정착·가족동반·④사회통합·환류로 이어지는 '성장 선순환형' 외국인정책 체계로의 전환			
4대 전략별 세부과제 (* 표시는 신규 사업)					
전략	I	II	III	IV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고도화	전북형 인재 유입·성장·산업활력 기반 강화	가족동반 생활정책과 안전망 강화	상호문화 통합과 글로벌 환류체계 구축	
전략별 목표	양적·질적 데이터 구축, 유입기관 협력체계 강화, 정책 총괄·조정 기능 고도화	외국인재·인력과 지역산업 연계, '취·창업·채류자격 전환·정착' 성장 경로 구축	가족동반 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보육/교육·의료·노동권·생활상당 정주 인프라 조성, 생활 안전망 강화	이민자·지역민 간 일상적 교류 및 수용성제고, 정착 성공사례·재외동포 네트워크 환류로 전북 이민브랜드 확산	
전략별 세부과제	양적데이터 - 외국인력 실태 및 수요 정기조사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외국인가족이주배경자녀생활실태조사★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참여자인식도 및 패널조사	인프라 - 전북특별법 출입국특례 - 계절근로자 기숙사 - 공공형 계절근로	한국어·KIIP - 전북 생활·직무 한국어 콘텐츠 개발 - 권역별·특성별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 법무부 지자체 연계 사회통합프로그램 - 이민자 사회통합 운영기관 확대	상호교류·수용성 - 세계전북도민의 날 - 도민 수용성·갈등예방 상시교육 -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사업 - 공익단체 활성화 지원 - 결혼이민자 365 연리 멘토링 -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 성장지원 사업★ - 채류 외국인 대상 전북 생활·문화교육★ - 외국인 인식개선 공익 캠페인★	
	질적데이터 -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 전북형 비자·정주제도 개선 협의체 - 전북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간담회	취·창업 - 영커(RISE) 연계 유학생 지역 취업·정착 - 유학생 직무 인턴 - 지역특화형 비자 취업·근속 지원 - 인박온도 창업 지원사업 - 지역산업맞춤 직무안전한국어 통합교육	근로자안전망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확대	환류체계 -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확대 - 고려인·아시아 교류지역 전통문화보급 - 전북 이민자 글로벌 엠베스터 네트워크 구축★ - 전북재외동포채류지원센터 운영/재외동포 유치·정착모델 발굴	
	추진체계 1시군1외국인센터 내실화 및 표준서비스 구축 - 지역정책을 맺음 고도화 -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협업 - 전북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지정운영★ - 전북도 외국인정책 전달부서 강화★	채류자격 - 지역기반비자 송급지원금 지원 - 국적 취득 지원 - 숙련기능인력(E-7/R) 추진제	가족동반정주지원 119 통역봉사단 - 외국인 주거개선 지원사업 - 긴급위기로 의료 지원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 외국인 임신부 안심출산조기양육지원사업★ - 가족동반 정착 패키지 시범사업★ - 외국인 운전면허증 취득 지원사업★		
			기업지원 - 외국인 고용기업 환경 개선 -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기업 선정 - 외국인 고용친화 우수기업 인증제★		

자료 : 연구진 작성

[그림 1] 전북 외국인정책 개선 방향 : 비전·목표·추진 전략·세부 과제(안)

차 례

CONTENTS

요약	i
----------	---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가. 연구 필요성	3
나. 연구 목적	6
2. 연구 범위 및 내용	8
가. 연구 범위	8
나. 주요 연구 내용	8
3. 연구 방법 및 추진 절차	11
가. 연구 방법	11
나. 연구 추진 절차	12

제2장 외국인정책 환경 변화 분석

1. 중앙부처 외국인정책 동향 분석	15
가. 법무부의 외국인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강화	15
나. 관계부처의 외국인정책 활용 확대	20
2. 타 지자체 외국인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22
가. 충청북도	22
나. 전라남도	24

다. 경상북도	28
3. 전북 외국인정책 여건 및 추진사업 분석	32
가. 전북 외국인인구 현황 및 특성	32
나. 전북 내·외국인 사회통합 현황	62
다. 전북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현황	63
라. 전북 외국인정책·지원사업 추진 현황	70
4. 요약 및 시사점	75

제3장 전북 외국인정책 수요 분석

1. 심층면접 조사 개요	83
가. 조사 개요 및 절차	83
나. 조사 참여자 특성	85
2. 분석 결과	87
가. 전북 정착 경험과 정주 의향 및 제약 요인	87
나. 외국인정책·지원기관 이용 경험	90
다. 일자리·교육·체류자격 관련 정책 수요와 사각지대	92
라. 가족동반 정착과 생활 안전망	100
마.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상호이해 기반 사회통합	103
바. 추진체계 및 정책 기반	104
3. 요약 및 시사점	108

제4장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 개선 방안

1. 전북 외국인정책 개선 방향	115
-------------------------	-----

가. 외국인정책 전환의 기본 방향	115
나. 외국인정책 추진사업의 재구조화 방향	122
2. 비전·목표 및 추진 전략	125
3. 전략별 세부 과제	129
가.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고도화	132
나. 전북형 인재 유입·성장·산업활력 기반 강화	144
다. 가족동반 생활정착과 안전망 강화	149
라. 상호문화 통합과 글로벌 환류체계 구축	160
참고문헌	169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 추진계획 사업 목록	4
[표 1-2]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종합지원 기관 운영 현황	6
[표 2-1] 외국인정책의 방향 전환	16
[표 2-2] 전북 외국인인구 규모	32
[표 2-3]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현황	33
[표 2-4] 광역자치단체별 등록·거소 외국인 현황	34
[표 2-5] 전국 및 전북 외국인인구 추이	35
[표 2-6]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유형별 분포 변화	37
[표 2-7] 전국 및 전북 등록·거소 외국인 체류자격별 분포	38
[표 2-8] 전국 시도별 외국인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40
[표 2-9]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주요 국적별 분포 변화	42
[표 2-10] 전국 및 전북 등록·거소 외국인 주요 국적별 분포 변화	43
[표 2-11]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자녀 연령대별 분포 변화	44
[표 2-12] 전국 및 전북 등록·거소 외국인 연령대별 분포 변화	44
[표 2-13]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체류기간별 분포 변화	45
[표 2-14] 시군별 외국인인구 현황	46
[표 2-15] 시군별 외국인주민 수×총인구 대비 비율 매트릭스	46
[표 2-16] 시군별 등록·거소 외국인 추이	47
[표 2-17] 시군별 외국인주민 추이	48
[표 2-18] 시군별 외국인주민 유형별 분포	51
[표 2-19] 전북 시군별 등록·거소 외국인 체류자격별 분포	52
[표 2-20] 시군별 외국인주민 주요 국적별 분포	54
[표 2-21] 시군별 등록·거소 외국인 주요 국적별 분포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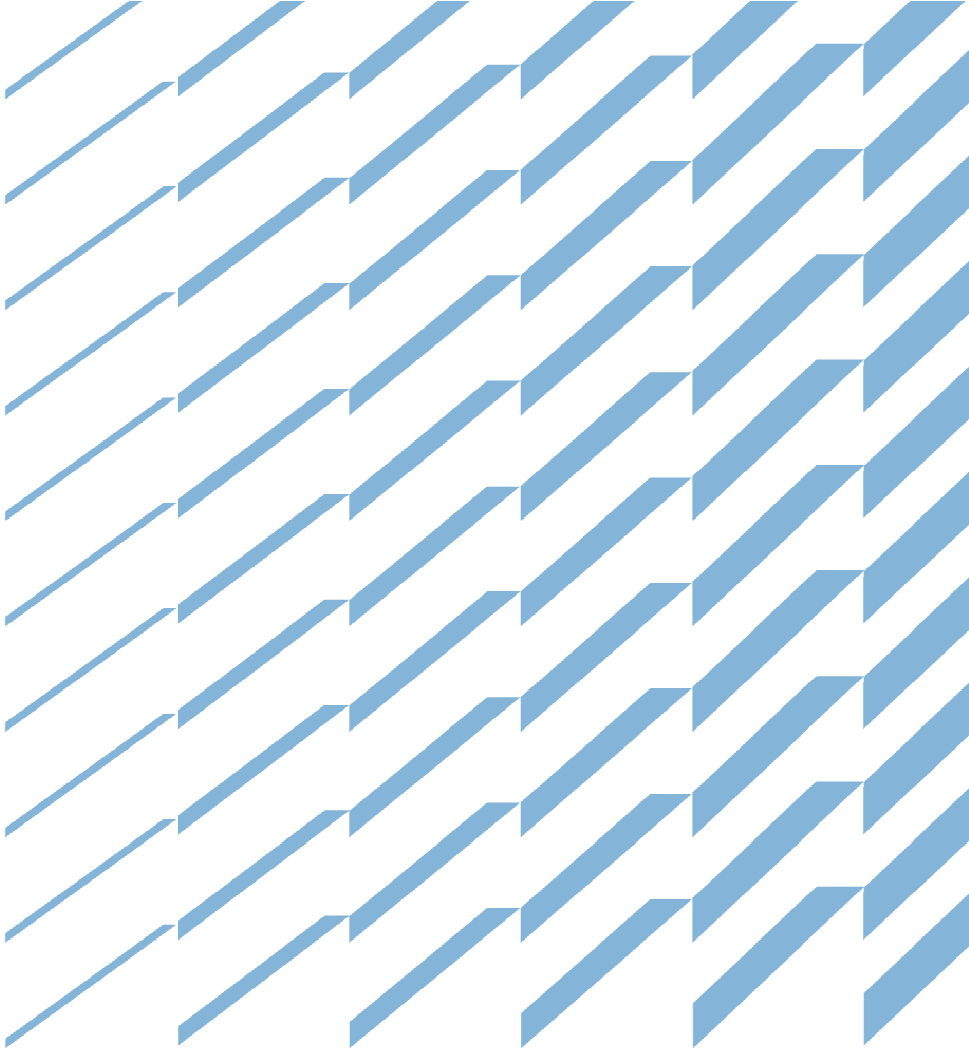
[표 2-22] 시군별 외국인주민·자녀 연령대별 분포 변화	58
[표 2-23] 시군별 등록·거소 외국인 연령대별 분포 변화	59
[표 2-24] 시군별 외국인주민 체류기간별 분포 변화	60
[표 2-25] 지역별 외국인 순이동 현황	61
[표 2-26] 전국 및 전북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63
[표 2-27] 전북자치도 외국인지원 관련 조례	64
[표 2-28] 시군별 외국인정책 담당 조직 및 인력 현황	66
[표 2-29]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사업 현황	67
[표 2-30] 전북도 내 외국인근로자 지원 종교기관 및 민간단체 현황	69
[표 2-31]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과제 현황	71
[표 2-32]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 추진계획 사업 목록	73
[표 3-1] 심층면접 조사 주요 영역 및 내용	84
[표 3-2] 심층면접 조사 참여자 특성 : 외국인	85
[표 3-3] 심층면접 조사 참여자 특성 : 현장 전문가	86
[표 4-1] 체류자격별 정착·정주 정책 대응 수준과 중점 보완 과제	124
[표 4-2] 세부 과제별 추진 시기 및 주요 성과지표(안)	131
[표 4-3]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고도화 관련 세부 과제(안)	132
[표 4-4]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고도화 관련 기존 사업 재구조화	135
[표 4-5] 전북형 인재 유입·성장·산업활력 기반 강화 관련 세부 과제(안)	145
[표 4-6] 전북형 인재 유입·성장·산업활력 기반 강화 관련 기존 사업 재구조화	147
[표 4-7] 가족동반 생활정착과 안전망 강화 관련 세부 과제(안)	150
[표 4-8] 가족동반 생활정착과 안전망 강화 관련 기존 사업 재구조화	153
[표 4-9] 상호문화 통합과 글로벌 환류체계 구축 관련 세부 과제(안)	161
[표 4-10] 상호문화 통합과 글로벌 환류체계 구축 관련 사업 재구조화	162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2-1]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향	17
[그림 2-2] 충청북도 외국인정책 담당 조직 및 인력 현황	24
[그림 2-3]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및 외국인주민통합지원 콜센터	25
[그림 2-4]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사업 개요	26
[그림 2-5] 전라남도 외국인정책 담당 조직 및 인력 현황	28
[그림 2-6] 경북글로벌학당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29
[그림 2-7] 경상북도 외국인정책 담당 조직 및 인력 현황	31
[그림 2-8]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현황	34
[그림 2-9] 전북 외국인주민 현황 및 추이('15~'24년)	36
[그림 2-10]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유형별 비중 변화	37
[그림 2-11] 전국 시도별 외국인 취업률	39
[그림 2-12] 전국 및 전북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별 분포	39
[그림 2-13] 전국 및 전북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	41
[그림 2-14] 전국 및 전북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별 분포	41
[그림 2-15] 전북 시군별 등록·거소 외국인 규모 추이	49
[그림 2-16] 전북 외국인주민의 시군별 분포 추이	49
[그림 2-17] 시군별 외국인주민 유형별 분포 변화	50
[그림 2-18] 시군별 등록·거소 외국인 주요 체류자격별 분포 변화	53
[그림 2-19] 시군별 외국인주민 주요 국적별 분포 변화	55
[그림 2-20] 시군별 등록·거소 외국인 주요 국적별 분포 변화	57
[그림 2-21]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 담당 조직 및 인력 현황	65
[그림 2-22] 전주시·익산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68
[그림 2-23] 전북자치도 외국인지원사업(일부) 연계·협력 구조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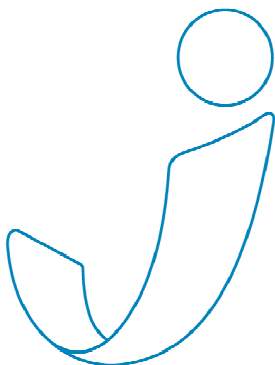
[그림 4-1] 전북 외국인정책 비전·목표·추진 전략 체계도	128
[그림 4-2] 전북 외국인정책 전략별 세부 과제(안)	129
[그림 4-3] 전북 외국인정책 체계도	130
[그림 4-4]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통합플랫폼 일자리공고 사례	134
[그림 4-5] 전북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조직도(안)	138
[그림 4-6]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사례	141
[그림 4-7] 전남외국인종합지원센터 사례	142
[그림 4-8]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 전담 조직(안)	143
[그림 4-9] 서울특별시 ‘비대면 출산교실’ 사례	156



제 1 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내용
3. 연구 방법 및 추진 절차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 최근 국가 차원의 외국인정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최근 중앙부처 외국인정책은 단순한 노동력 보충 차원의 외국인력 도입 중심에서 벗어나 외국인 유입 경로의 다변화, 사회통합 및 지역 정착·정주 촉진,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강화되고 있음
- 특히 우수인재 유치 확대, 지자체·경제계 수요의 선제적 반영, 사회통합 강화, 과학적·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24.9.26.)」의 후속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외국인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일례로, 톱티어 비자·광역형 비자·지역특화형 비자(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등 우수인재·인력 유치 확대와 지자체 수요 반영을 위한 다양한 비자 제도가 빠르게 신설·확대되고 있음
 - ’26.3.3에 발표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시범 도입·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 등이 포함되어 외국인정책 환경 변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저출생·고령화와 청년층의 수도권 편중 심화로 인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정책이 인구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외국인정책의 고도화를 통한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인구 확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제1기 인구정책 TF(2019)에서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우수인재 유치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제4기 인구정책 TF(2022)에서는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한 외국인·이민 유입 확대를 중점 과제로 다루는 등 외국인인구는 인구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부상함

■ 전북자치도 또한 인구위기 및 광역소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정책을 확대·강화하고 있음

- '24.5월, 전북자치도는 2033년까지 외국인인구를 도민의 10%(약 18.5만 명) 수준으로 확충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외국인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40개 지원사업을 발굴·시행 중임
- '23.8월, 「전라북도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경제·체류지원·지역통합·인권·협력/인프라 등 5개 분야 추진전략과 세부 과제를 도출함
- 이를 토대로 '24.5월에 ▲ 체계적 데이터 기반 외국인지원 및 정책 협력 강화, ▲ 지역 맞춤형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 ▲ 안정적인 지역정착 추진, ▲ 내·외국인 함께하는 사회통합 등 4개 분야 34개 세부 과제를 포함한 외국인정책 추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26.5월 현재 40개 세부 과제를 시행 중임

[표1-1]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 추진계획 사업 목록

추진 전략	사업명	사업유형
데이터 기반 및 정책 협력 강화	외국인 필요인력 실태조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지역특화형비자 만족도 조사,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전북형 비자 제안 협의체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정책 네트워크 구축·활용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	전북특별법 출입국특례,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RISE 연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해외 인재 유치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학업 및 생활 지원을 통한 인재 양성, 한국어 교재 고도화	현지 한국어교육, 유학생 유치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역특화형 비자 취업 지원, 재외동포 체류 지원 발굴, 숙련기능인력 추천제, 지역기반비자 발급지원금 지원, 지역현장 산업 교육,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법무부 지자체 연계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민자 사회통합 운영 기관 확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체류서비스기관 확대(1시군 1외국인센터), 지역장차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환경개선, 계절근로자 기숙사, 공공형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취업 지원, 외국인 안락사 방지사업, 유학생 공공기관 직무 연수 외국인 주거개선 지원사업,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3개 시군)	지역특화형 비자 활성화, 자격증·한국어교육·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원센터 확충, 계절근로자 지원, 유학생 취·창업 연계
내·외국인 함께하는 사회통합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협업, 세계전북도민의 날, 인식개선 교육,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사업, 고려인·아시아 교류지역 전통문화보급, 119 통역봉사단, 공익단체 활성화 지원,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링,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기업 선정, 국적 취득 지원, 국적취득 교재 개발	문화교류 프로그램, 생활지원, 결혼이민자구혼자 지원

- 이에 전북의 외국인인구 규모가 확대되는 등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전북의 외국인주민 수는 지난 10년간 약 82.3% 증가('15년 43,141명 → '24년 79,224명) 하여, 도내 인구의 4.5% 수준에 도달함

■ 그러나 유입 이후 정착-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기존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추진사업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상황임

- 전국 평균 대비 전북의 외국인 규모는 여전히 적은 수준이며, 더욱이 도외 지역으로의 순유출까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인구 비중 10%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 '24년 기준, 전북의 외국인주민 비중(4.5%)은 전국 평균(5.0%) 대비 0.5%p 낮은 수준임
 - '25년 기준, 강원·대전·전남·전북·부산·제주·경기·서울 등 7개 지자체에서 외국인인구 순유출이 발생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전북·대전은 모든 유형에서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북 외국인정책은 '유입-정착-정주'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표방하고 있으나, 기추진 중인 지원사업은 대상별·분야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함
 - 유입 분야는 유학생, 정착 분야는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계절근로자·유학생, 사회통합 분야는 결혼이민자·귀화자에 각각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업 간 연계성 미흡으로 정착·정주 유도 효과가 제약될 수 있음([표 1-1] 참고)

■ 또한, 급변하는 외국인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외국인정책·추진사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비자제도 신설·확대에 따라 새로운 정책 대상이 지속 등장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형의 다변화도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지원사업과 추진체계가 이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23.8월) 및 외국인정책 추진방안('24.5월)에 기반하고 있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전북 외국인의 유형별 구성 추이를 보면, 2020년~2024년에 근로자·유학생·외국국적동포·국적취득자의 비중은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기타 외국인* 비중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변동이 나타남
 - 결혼이민자·외국인주민 자녀의 비중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임
 - * 기타 외국인은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를 제외한 국적 미취득 외국인을 의미함
 - 외국인 유형별 규모와 추진사업 대상·예산 간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정책 체감도와 실효성이 저하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 공백이 나타날 수 있음

- 이에 국가 외국인정책 환경 변화와 전북의 외국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에 부합하도록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정책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 추진사업을 전략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정책 공백 영역에 대해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전반적인 재편이 요구됨
- 아울러, 향후 지속될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함
 - 특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강원·세종 등 3곳은 외국인 종합지원기관이 부재하므로, 외국인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외국인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충북은 '26년도 청주시에 개소 예정임

[표1-2]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종합지원 기관 운영 현황

운영 지역	서울(서울글로벌센터/서울외국인주민센터), 부산(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구(대구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인천(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광주(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대전(대전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울산(울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경기(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충남(충남외국인글로벌센터), 전남(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경북(K-드림외국인지원센터), 경남(경남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제주(제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예정 지역	충북(충북외국인통합지원센터)
미운영 지역	전북, 강원, 세종

나. 연구 목적

- **현행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추진사업 진단과 이를 토대로 한 개선 방안 마련**
 - 본 연구는 외국인정책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현행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을 진단하고,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안됨

-
- 이에 외국인정책 환경 급변과 전북의 외국인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지원사업의 추진 현황과 구조적 한계를 분석·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세부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먼저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현황과 사례, 전북의 외국인정책 여건 및 추진사업을 검토하여 변화된 외국인정책 환경을 파악하고, 전북 외국인정책·추진사업의 현주소를 진단함
 - 다음으로,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 수요를 분석하여 기존 외국인정책·추진사업의 강점과 쟁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현장 의견을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함
 - 이를 토대로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의 개선 방향과 세부 과제를 도출·제안함
 - 구체적으로,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의 비전과 전략체계를 변화된 정책환경에 부합되도록 재정립하고,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고도화, ▲전북형 인재 유입·성장·산업활력 기반 강화, ▲가족동반 생활정착과 안전망 강화, ▲상호문화 통합과 글로벌 환류체계 구축 등 전략별로 기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한편, 신규 발굴한 세부 과제(안)를 제시하고자 함
 - 한편, 본 연구는 기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전북 외국인정책을 재구조화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개별사업에 대한 세부 진단보다는 전반적인 구조와 방향에 대한 재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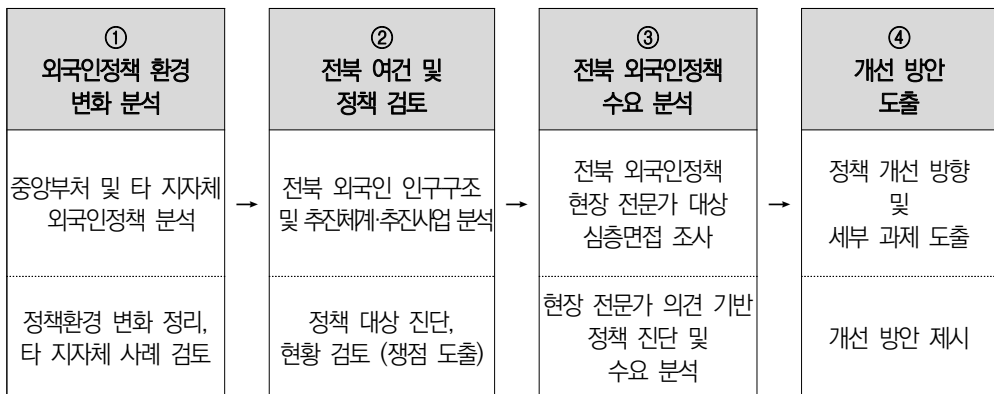
2. 연구 범위 및 내용

가.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전북자치도 14개 시군
- (시간적 범위)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문헌자료·행정자료·통계자료를 검토하되, 외국인 정책 환경 변화가 본격화된 최근('24년 이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
- (정책대상 범위) 외국인주민,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 전북자치도 내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지역특화형 비자 기반 외국인, 외국인주민 자녀 등이 포함됨
- (사업 검토 범위) 외국인정책 추진방안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40개 지원사업을 검토

나. 주요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외국인정책 환경 변화 및 전북 외국인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된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흐름으로 수행하고자 함



1) 외국인정책 환경 변화 분석

■ 중앙부처 외국인정책 동향

- 법무부의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방향,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향 및 후속 조치 내용(다양한 비자제도 신설·확대 등) 검토
- 고용노동부(고용허가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계절근로제), 교육부(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보건복지부(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 산업통상부(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사업) 등 관계부처 외국인력·유학생 관련 정책 동향 검토

■ 타 지자체 외국인정책 현황 및 정책환경 변화 대응 사례

- 타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내 추진사업 구조·내용 등 현황 검토
- 타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현황 검토
 - 전남·경북·충북 등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벤치마킹 요소 검토
- 외국인정책 환경 변화 및 타 지자체 사례 관련 시사점 도출

■ 전북 외국인정책 여건 및 추진사업 분석

- 외국인인구 현황 및 특성
 - 법무부·행정안전부 통계자료 기반 전북 외국인인구 규모 및 추이, 유형별/체류자격별·시군별·연도별·체류기간별 외국인인구 현황 및 분포, 전입·전출 현황, 인구사회학적 특성(국적·연령대 등) 분석
 - 외국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대상 설정 관련 주요 쟁점 도출
- 사회통합 현황 검토
 - 내·외국인 사회통합 관련 주요 쟁점 도출

-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현황

- ① (조직 및 인력 현황) 전북도 및 시군별 외국인정책 담당 조직 체계, ② (인프라 현황) 지원 시설·기관·센터 현황, ③ (연계·협력 현황)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현황 및 구조 분석
- 외국인인구 규모·유형별 분포 대비 추진체계 적정성 진단, 타 지자체 사례 비교·분석 기반 추진체계 개선 관련 시사점 도출

- 기존 외국인정책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구조적 한계

- 추진사업(40개) 분야·대상별 구성, 사업별 주요 내용·주요 실적 및 추진 현황 등 종합 검토
- 외국인정책 환경 및 인구구조 변화 대비 분야별·대상별 대응 수준(충분 대응/부분 대응/대응 공백 등) 진단 등 쟁점 도출
 - 정책 대상-사업 간 정합성, 추진 실적(성과) 등을 바탕으로 대응 수준 진단

2) 이해관계자 대상 전북 외국인정책 수요 분석

- 정책 수요자와 정책·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추진사업에 대한 정책 수요와 현장 의견을 심층적으로 조사
- (심층면접 주요 내용) 전북 외국인정책 전반에 대한 주관적 인식, 외국인정책·추진사업 활용 실태, 외국인정책 수요와 공백, 만족감, 애로사항/개선점, 추진체계, 개선 과제·신규 정책 제안 등 정책 수요자와 현장 실무자의 정성적 의견 수렴
- 정책 수요자 및 현장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현행 전북 외국인정책·추진사업 진단 및 주요 쟁점 도출

3)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의 개선 방안

- 외국인정책 환경 변화 및 전북 외국인정책 수요 분석 결과와 전문가 자문 내용을 토대로 변화된 외국인정책 환경에 부합하도록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의 개선 방향 도출
 - 정책 비전 및 전략체계를 재정립하고, 전략별 세부 과제(안)를 제시

3. 연구 방법 및 추진 절차

가. 연구 방법

1) 문헌자료 검토 및 행정·통계 자료 분석

- 문헌 연구 및 행정자료 검토
 - 법무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교육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의 외국인력·유학생 제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등 관련 정책 및 제도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 정책보고서, 행정자료, 학술논문, 보도자료·기사,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정책 환경 변화 분석
 - 선행연구(정책보고서)와 전북자치도 내부자료 및 유관기관 자료 등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전북자치도 사회통합 현황과 외국인정책·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
- 통계자료 분석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현황,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등 관련 행정통계자료 분석

2) 심층면접 조사

- (목적) 정책 수요자와 정책·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행 전북 외국인정책·추진사업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요구·애로사항·개선점 등을 도출하고자 함
- (조사 대상)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 수요자인 도내 거주 외국인 3인과 정책·실무를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 19인 등 총 22명을 대상으로 함
 - 구체적으로, 현장 전문가는 종합기관 성격(여러 유형의 외국인 대상)의 유관기관 실무자 4인,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 3인, 외국인 근로자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 8인, 결혼이민자 및 가족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 4인으로 구성됨
- (조사 방법) 전문가 자문을 반영한 반구조화된 면접질문지를 활용하여 개별 심층 인터

뷰 또는 FGI를 병행하여 시행함. 인터뷰는 1회당 약 1시간 30분~2시간이 소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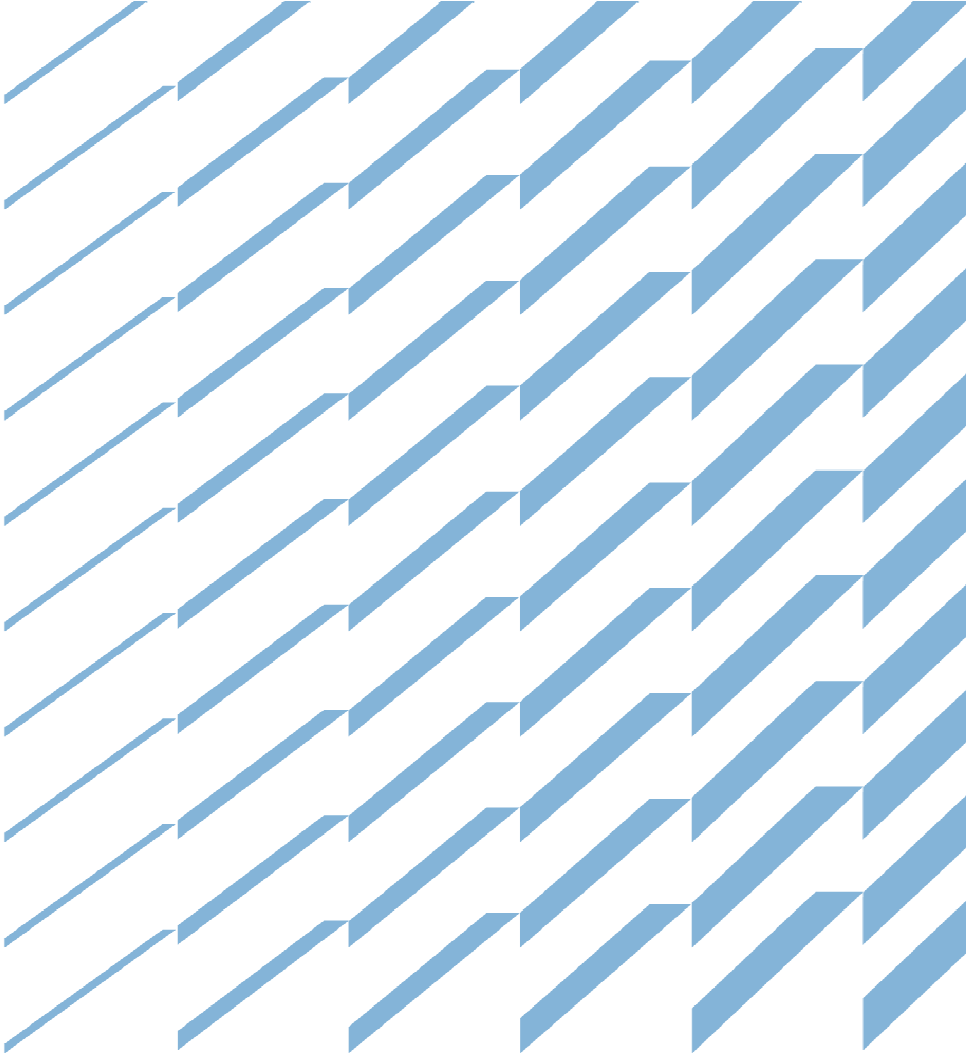
- (조사 내용) 현행 전북자치도 외국인 정책 전반에 대한 주관적 인식, 외국인정책·추진 사업 활용 실태, 외국인정책 수요와 공백, 만족감, 애로사항/개선점, 추진체계, 신규 정책·사업 제안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

3) 전문가 자문회의

- (대상 및 목적)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학계 전문가, 국가 연구기관 소속 관련 연구자, 타 지자체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연구의 완성도와 정책적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함
- (자문 내용)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추진사업 현황 및 구조적 한계 등 주요 쟁점, 심층 면접 조사 설계(면접대상 및 질문지 구성 등), 전북형 외국인정책의 개선 방향 및 세부 과제 설정의 적절성 검토 등

나. 연구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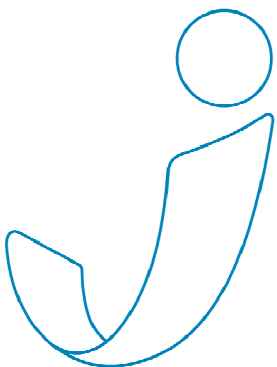
단계	연구 방법	연구 내용
1단계	•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연구 방향·범위·방법·내용 기획 • 최근 정책 동향 파악
2단계	• 문헌 연구 • 행정자료 분석 • 통계자료 분석	• 중앙부처 외국인정책 동향 분석 • 타 지자체 외국인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 전북 외국인정책 여건 및 추진사업 분석 (전국 및 전북 외국인인구 통계 현황, 추진체계 현황, 사회통합 현황, 지원사업 추진 현황) • 벤치마킹 시사점 및 주요 정책 대상·쟁점 도출
3단계	• 심층면접 조사 (1:1 또는 FGI)	• 심층면접 조사 반구조화 질문지 구성 • 심층면접 조사를 통한 정책 수요자 및 현장 전문가 대상 정책 수요 파악, 주요 쟁점 및 시사점 도출
4단계	• 전문가 자문회의	• 외국인정책의 개선 방향 제시 • 세부 과제(안) 도출



제2장

외국인정책 환경 변화 분석

1. 중앙부처 외국인정책 동향 분석
2. 타 지자체 외국인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3. 전북 외국인정책 여건 및 추진사업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2장 외국인정책 환경 변화 분석

1. 중앙부처 외국인정책 동향 분석

가. 법무부의 외국인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강화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의 방향 전환

- 법무부의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수립하고, 경제·안전·통합·인권·협력/인프라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함
- (경제 분야) 국익에 도움 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 등 4가지 중점 과제를 통해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을 달성하고자 함
- (안전 분야) 이민 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 환경 조성,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 관리 등 3가지 중점 과제를 통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민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통합 분야)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 정책 체계화,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등 4가지 중점 과제를 통해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을 달성하고자 함
- (인권 분야)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 보호 강화,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등 3가지 중점 과제를 통해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 (협력/인프라 분야)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국제사회와 공동 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등 4가지 중점 과제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특히 제4차 기본계획은 기존의 중앙부처 주도, 노동력 보충형, 단기 유입·관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숙련 인력과 유학생 등 다양한 외국인을 전략적으로 유치·육성하고, 이들의 사회 통합과 지역 정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외국인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앙-지방 협력 기반의 외국인·이민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외국인정책을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책 방향도 보여줌

[표 2-1] 외국인정책의 방향 전환

시점	유입 관점	정착 방식	추진체계
'22년 이전 (제1~3차 기본계획)	노동력 충원	적극적 정주 유도 미흡	단편적·분절적, 중앙 중심
'23년 이후 (제4차 기본계획)	사회 구성원, 전문·숙련인력 등 다변화	사회통합, 정착·정주 유도	종합적·체계적, 중앙-지방 협력 기반

■ 「신(新) 출입국·이민정책」과 후속 조치를 통한 외국인정책 환경 변화 본격화

- 법무부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24.9.26.)을 통해 외국인 유입 경로의 다변화, 사회통합 및 지역 정착 촉진,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 등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책 패러다임을 구체화함
- 중점 추진 과제는 우수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 지자체·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과학적·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등임
 - (우수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 톱티어(Top-Tier)·청년드림 비자 신설, 유학생 졸업 후 구직·취업 연계 강화, 전문인력 배우자 단순노무 취업 허용 등을 통해 외국인 우수인재 및 인력 유치·양성을 촉진
 - (지자체·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 비자 제안제 도입, 광역형 비자 신설,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계절근로자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민간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경제·인구 활력을 제고

-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외국인 청소년 자립 지원, 입국 전후 사회통합교육 강화, 사회통합기금 신설 중장기 검토 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촉진
- (과학적·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과학적 분석 기반 도입 규모 결정, 불법체류·범죄 발생 시 환류 강화, 해외인력 도입·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

비전	경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과 이민자의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입국·이민정책	
목표	- 외국인력·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 및 지역경쟁력 확보 - 선별 유입 및 사회통합 촉진으로 다가을 이민사회 선제적 대비	
주요 정책 과제	[1] 우수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	[3]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 “Top-Tier” 비자, “창년드림” 비자 신설 ✓ 유학생 졸업 후 구직·취업 연계 강화 ✓ 전문인력 배우자 단순노무 취업 허용	✓ 외국인 청소년 자립 지원 ✓ 입국 전·후 사회통합교육 강화 ✓ “사회통합기금” 신설 중장기 검토
	[2] 지자체·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	[4] 과학적·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 “비자 제안제” 도입 ✓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확대 ✓ 계절근로자 사업 지원	✓ 과학적 분석 기반 도입규모 결정 ✓ 불법체류·범죄 발생 시 환류 강화 ✓ 해외인력 도입·관리시스템 개선
주요 기대 효과	- 전문·기능인력 5년 내 10만 명 추가 확보 ⇨ 국가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 - 지역기반 비자(계절근로, 지역특화) 확대 ⇨ 지역상주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 유입 단계별 사회통합 강화 ⇨ 갈등 최소화, 이민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 외국인력 선별적 도입 및 체계적 규모 관리 ⇨ 국민 일자리 침해 방지	

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2024.9.26.)

[그림 2-1]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향

- 이후 일련의 후속 조치를 통해 외국인정책의 적용 대상과 제도가 점차 확대·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대표적으로, '24.11월에는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가 도입되고 숙련기능인력(E-7-4) 제도가 개선되었으며, '25.2월에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확대 시행됨
 -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 경제·산업계에서 제안한 비자·체류 정책을 법무부가 심의하여 제도를 개선
 -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 숙련기능인력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을 확인하도록 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 건설업계 허용 인원 산정 요건 재설정, 비수도권에서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체류 요건을 4년에서 3년으로 완화
 -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① (대상 지역) 인구감소지역 89개 → 인구감소(관심)지역 107개, ② (비자 유형)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자격 대상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신설, ③ (기존 요건 개편) 취업 가능 업종 제한 폐지, 외국인 고용인원 제한 최대 20명에서 50명으로 상향 등
- 이어 '25.4월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유학(D-2) 또는 특정활동(E-7) 비자 제도를 설계하는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사업이 시행되었고, 첨단산업 분야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도 도입됨. 또한, 일반기능인력(E-7-3)·전문인력(E-5)의 대상 직종 확대와 일부 주력산업에 대한 비자 요건 완화도 병행됨
 - (광역형 비자) 유학 유형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며, 특정활동 유형은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경북, 경남 등 6곳임
 - (톱티어 비자)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첨단산업 분야(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고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을 뒷받침하는 제도
 - (일반기능인력·전문인력 비자 개편) 자동차 부품제조원, 판금·도장 정비원(이상 E-7-3), 해기사(E-5) 등의 직종이 신설되었으며, 조선업 용접공(E-7-3) 경력 요건이 면제됨

■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과 그 밖의 제도 변화

- 법무부는 '26.3.3에 외국인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력 적정 임금요건 설정,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도입,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도입, 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 등이 포함됨

-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 K-CORE) 신설) 비전문인력을 해외에서 유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전문대학에서 제조업 분야 중간기술 수준의 외국인력을 육성하여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발급 예정, (토피어 비자 대상)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의 기업체 인력에서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예정,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도입)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제를 시범 도입 예정, (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 우수 계절근로자가 농·어업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 예정
 -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시범사업('26~'27년)에 지정된 16개교 중 전북지역은 군장대학교(스마트농식품과)·전주비전대학교(미래모빌리티학과) 등 2개교가 포함됨
- 이 밖에도 '유학생 사회통합·자립역량 우수학과 평가제'를 실시하는 한편, 광역지자체별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하고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임.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우수 외국인력·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계할 예정
- 한편, '25.10월에 구직(D-10) 비자의 체류 가능 기간이 기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체류 안정성과 취업 연계가 강화되었으며, '25.12월에는 기존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개편한 'K-STAR 비자 트랙'이 신설되어 총 32개 대학의 이공계 분야 우수 외국인 인재의 정착지원이 확대됨
 - (K-STAR 비자 트랙) 국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공계 유학생이 미취업 상태에서도 총장 추천으로 거주(F-2) 자격을 부여받고, 연구 성과에 따라 영주(F-5) 및 특별귀화까지 연계되는 고급 인재 정주 지원 제도로, 기존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5개교에서 일반대학을 포함한 총 32개교로 대상이 확대됨
 - 전북지역은 1개교(전북대학교)가 지정됨
- 아울러 '26.1월에는 지역 기반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지역특화형 비자, 광역형 비자, 계절근로제 등)을 담당하는 「지역체류지원과」와 동포 관련 체류 정책을 전담하는 「동포체류통합과」가 신설됨
-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정책이 우수 인재·인력의 유치·육성, 지역 수요 기반 정책 확대, 외국인·이민행정 체계의 고도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함

나. 관계부처의 외국인정책 활용 확대

■ (교육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 유학생 기반 외국인 인재 양성 및 취업·정착 연계

- 교육부는 「Study Korea 300K Project」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5년)·지역성장 인재 양성체계(앵커, '26년)를 통해 유학생 유치-양성-취업-지역 정착을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RISE(現 앵커)는 대학-기업-지자체가 연계하여 지역에서 양성한 인재(외국인 유학생 포함)가 해당 지역에 취·창업하여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추진하는 체계로, 특히 서울특별시에는 첨단·미래산업 외국인 인재 유치를 대표 과제로 선정함
- 단위 과제로는 '유학생 전주기 원스톱지원시스템 구축(대구)', '재외동포청 연계 외국유학생 정주 지원(인천)', '외국인 교육, 정주도시 구축(대전)', '외국인 유학생 정주 지원(경기)', '외국인 유학생 시티즌 프로젝트(강원)', '충북형 K-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충북)',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충남)', '해외 우수인재 원스톱 지원(전북)', '해외인재 유치(경북)', 'Study Jeju 지역정주 해외인재 유치·양성 사업(제주)' 등이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24.6.28.)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D-2)과 졸업생(D-10)이 취업 시 특정활동 비자(E-7)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함. 이후 '24.7월부터 2년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26년부터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이 개설되어 지역사회 돌봄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유학생 양성이 추진됨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25.8.25.~'27.12.31.)으로 명지전문대·삼육보건대(서울), 경남정보대·동의과학대(부산), 경인여자대(인천), 서영대·호남대(광주), 울산과학대·춘해보건대(울산), 서정대·동남보건대(경기), 충북보건과학대·강동대(충북), 신성대·백석대(충남), 원광보건대·군장대(전북), 목포과학대·청암대(전남), 호산대·경운대(경북), 마산대·창신대(경남), 제주관광대(제주) 등 전국 24개교가 선정됨
- 산업통상부는 '15년에 도입된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을 뿌리산업 분야 숙련기술인력으로 양성하고,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 '25.1월 기준, 거제대·동원과학기술대(경남), 경기과학기술대·서정대·부천대(경기), 계명문화대(대구), 군장대·전주비전대(전북), 아주자동차대(충남), 조선이공대(광주), 인하공업전문대(인천), 충북보건과학대(충북) 등 12개 대학이 운영 중임

■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지역 인력난 대응을 위한 고용허가제·계절근로제 확대

-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의 허용 업종을 '24.4월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 일부 서비스업까지 확대한 데 이어, '24.7월에는 임업·광업에도 적용하였으며, '25.12월에는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E-9 외국인고용 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역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보완하고 있음
-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경우 E-9 고용 한도가 수도권 대비 20%에서 30%로 확대되고, 비수도권 U턴 기업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E-9 외국인고용이 허용되며 고용 한도(50명) 제한도 면제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 외국인력 배정인원(고용허가 14,950명→16,000명, 계절근로 34,614명→45,631명) 및 공공형 계절근로센터(19개소→70개소) 확대를 추진함. 이후 '24.11월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의 업무 범위를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까지 확대하였으며, 계절근로 체류자격을 단일 체류자격으로 통합(C-4/E-8 → E-8)하는 한편, 체류기간도 기존 최대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함
- 한편, 해양수산부는 '25년 도입된 어업 분야 공공형 계절 근로 시범사업을 '26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공공형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아울러, '26년에 계절근로자가 약 10.9만명 배정되는 등 계절근로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2. 타 지자체 외국인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 급변하는 외국인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각 광역자치단체는 정책사업 확대 및 신규 발굴, 담당 조직 개편, 외국인종합지원 체계 구축·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며 외국인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담당 조직의 경우, '22.9월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외국인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지역은 경기도가 유일하였으나, 최근 여러 지역에서 과 단위 조직을 신설·개편하여 운영하는 등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추세임
 - '25년 기준, 전체 지자체의 64%가 이민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전북자치도와 도(道) 단위 행정 특성이 유사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주요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추진 사례를 검토·분석하여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가. 충청북도

■ 주요 추진사업

- 충청북도는 「외국인종합기본계획('26~'30년)」 수립을 통해 외국인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정책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음
- 또한, 유학생 유치 확대와 취업이민 허용 등 국가 외국인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유입 단계에서 '충북형 광역비자'와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충북형 광역비자(유학 유형)) 항공·화장품·식품·바이오, 뿌리산업, 복지인력,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 전략산업 관련 학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함. 충북형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참여 유학생에게 재정 요건을 50% 완화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최대 30시간까지 확대하여 졸업 후 취업 전환이 원활하도록 지원함
-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소상공인과 20~75세 유흥인력(외국인 포함)을 연계하여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일부와 교통비, 근속 인센티브가 지원됨

- 아울러,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 지원’,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근속장려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함
-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 지원)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을 대상으로 숙소·화장실·샤워실·휴게실·구내식당 등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함
-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청주시와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생활 지원·한국어교육·문화 프로그램·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함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유아(3~5세)를 대상으로 보육료 월 10만원을 지원하여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족단위 정주를 유도함
 - 이에 더하여, 청주·제천·증평·진천·음성·보은·충주·단양 등 8개 시군에서 보육료를 추가 지원함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근속장려금 지원)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연장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3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하여 비전문 외국인력의 숙련기능인력 전환과 장기근속을 유도함(’25년 종료)

■ 외국인정책 전담 조직 ‘외국인정책추진단’ 운영

-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외국인정책팀·외국인지원팀·K-유학생추진팀 등 3개 팀(총 11인)으로 구성된 외국인정책추진단을 신설(’24.7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외국인정책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지역특화형 비자, 재외동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팀장 1인·주무관 3인 등 총 4인으로 구성됨
- (외국인지원팀) 외국인근로자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팀장 1인·주무관 2인 등 총 3인으로 구성됨
- (K-유학생추진팀) 유학생 관련 제도 개선, 유학생 지원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함. 팀장 1인·주무관 2인 등 총 3인으로 구성됨
- 그간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추진되던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지원, K-유학생 관련 업무를 통합·이관하여 외국인지원 체계를 일원화한 점이 특징임

행정부지사 산하 외국인정책추진단

부서명	직위	업무내용
외국인정책추진단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외국인정책추진단 업무 총괄
외국인정책추진단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정책팀 업무 총괄
외국인정책추진단	주무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등
외국인정책추진단	주무관	지역특화비자, 재외동포 지원
외국인정책추진단	주무관	서무, 회계
외국인정책추진단	외국인지원팀장	외국인지원팀 업무 총괄
외국인정책추진단	주무관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
외국인정책추진단	주무관	다문화가정 지원
외국인정책추진단	K-유학생추진팀장	유학생 유치 및 지원 업무 총괄
외국인정책추진단	주무관	유학생 관련 제도개선, 유학생 지원사업 추진 등
외국인정책추진단	주무관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

자료 :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s://www.chungbuk.go.kr/www/index.do>)

[그림 2-2] 충청북도 외국인정책 담당 조직 및 인력 현황

나. 전라남도

■ 주요 추진사업

- 전라남도는 지자체 역할 확대 등 국가 외국인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전라남도 이민·외국인정책 기본계획」(‘24.10월)과 「외국인주민 종합지원계획」(‘26.上 예정) 수립을 통해 전남형 외국인정책 비전과 주요 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역 주도 외국인정책을 고도화하고 있음
- 특히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외국인주민통합지원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이민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이동상담소 운영’ 등 생활밀착형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음
-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한 플랫폼 형태의 지원기관 2개소를 구축하여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등 중앙부처 사업의 원

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주민의 지역 정착 및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비자, 교육프로그램, 노무, 세무, 일자리, 의료, 일상생활, 심리상담 등)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정책 관련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아울러 '26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임시보호 및 상담 기능까지 확대됨

- (전남 외국인주민통합지원 콜센터 운영) '25.1월에 개소한 외국인주민통합지원 콜센터를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와 통합·연계하여 통·번역, 생활·고충 상담, 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9개 국어(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태국)로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과 정착을 지원함



자료 :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jifsc.com/>)

[그림 2-3]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및 외국인주민통합지원 콜센터

-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지속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의 의료 접근성 제고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108개소 의료기관을 '외국인 안심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외국인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외국인주민 의료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전라남도·전라남도의회·의료기관(외국인 안심병원)·이주민지원 기관·전남 통합콜센터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 연계형 '전남 외국인주민 의료지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연 1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의료지원 협업 체계를 구축·운영 중임



- (이동상담소 운영) 외국인 정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확대 운영함(6→16개소)
- 또한, ‘산업·농공단지 연계 유학생 취업 지원’, ‘지역특화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전남형 광역형비자 도입’, ‘외국인력 통합공급관리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여 산업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외국인력 유치·양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남광주형 이민 비자’ 설계(‘26.下 예정)를 통해 안정적인 체류·정착을 지원할 예정임
- (산업·농공단지 연계 유학생 취업 지원) 전라남도(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와 전라남도농공단지협의회 간 MOU를 체결하고, 농공단지 인력 수요조사(‘26.上 예정)를 실시하여 참여 대학 4개교 소속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임(시범사업 추진 예정)
- (지역특화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지역특화형 비자 기반 외국인(본인/배우자)을 대상으로 용접기술 등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자격 취득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비자 전환 및 취업·지역정착을 유도함
- (전남형 광역형비자(유학 유형)) 바이오, 에너지, 조선, 화학, 철강, 복지, 관광 등 지역 핵심산업 관련 학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재정 요건을 50% 완화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최대 30시간까지 확대하며, 요양보호사·주방장·조리사 등 일부 전문 직종의 시간제 취업을 허용하여 졸업 후 취업 전환이 원활하도록 지원함
- (전남광주형 이민 비자) 농어업 숙련비자와 글로컬 창업·마케팅 우수인재 비자 모델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지역 특성과 산업수요를 반영한 통합특별시행 지역 기반 비자 체계 도입을 법무부에 제안·건의함으로써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장기 정주 기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외국인정책 전담 조직 ‘이민정책과’ 운영

- 인구청년이민국 내 이민정책팀·외국인지원팀·다문화지원팀·광역형비자TF팀 등 4개 팀(총 14인)으로 구성된 이민정책과를 신설(‘24.1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민정책팀) 이민정책,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총괄·관리,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통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팀장 1인·주무관 3인 등 총 4인으로 구성됨
- (외국인지원팀) 외국인정책, 시책위원회, 외국인 주민 지원, 한국어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함. 팀장 1인·주무관 2인 등 총 3인으로 구성됨
- (다문화정책팀) 다문화가족 시행계획,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다문화 가족센터, 결혼이주여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팀장 1인·주무관 3인 등 총 4인으로 구성됨

- (광역형비자TF팀) 광역형 비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팀장 1인·주무관 1인으로 구성됨

- 이민정책과를 인구청년이민국 산하에 설치하여 인구·청년·이민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조직 체계를 구축한 점이 특징임

인구청년이민국		인구정책과	청년희망과	이민정책과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이민정책과	이민정책과장	이민정책과 업무 총괄		
이민정책과	이민정책팀장	이민정책팀 업무 총괄		
이민정책과	주무관	이민정책,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총괄 관리		
이민정책과	주무관	지역특화비자, 기타 비자 업무 전반		
이민정책과	주무관	과 서무, 외국인 통계 관리		
이민정책과	외국인지원팀장	외국인지원팀 업무 총괄		
이민정책과	주무관	외국인 정책, 시책위원회		
이민정책과	주무관	외국인 주민 지원, 한국어교육		
이민정책과	다문화지원팀장	다문화지원팀 업무 총괄		
이민정책과	주무관	다문화 가족 시행계획, 특성화사업		
이민정책과	주무관	다문화 가족센터, 결혼이주여성 지원		
이민정책과	주무관	다문화 지원, 국제결혼중개업		
이민정책과	광역형비자TF팀장	광역형비자TF팀 업무 총괄		
이민정책과	주무관	광역형비자		

자료 :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s://www.jeonnam.go.kr/main.do?site=jeonnam>)

[그림 2-5] 전라남도 외국인정책 담당 조직 및 인력 현황

다. 경상북도

■ 주요 추진사업

- 경제·안전·통합·인권·협력/인프라 등 5대 분야 중 다수 지자체는 통합 분야 과제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은 반면, 경상북도는 경제와 통합 분야를 균형 있게 설정하여 이민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촉진에 주력하고 있음
- '26년 기준, 통합(47.8%)·경제(35.4%)·인권(13.3%)·안전(3.5%) 순으로 구성됨

- 특히 경상북도는 지역 수요 맞춤형 비자제도 확대 등 국가 외국인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경북 글로벌 학당 운영’, ‘경북형 초청장학제도 운영’, ‘지역기반비자(지역특화형·광역형비자) 희망이음사업’,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패널조사’ 등 관련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있음
- (경북 글로벌학당 운영)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산업·정책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경북학 프로그램과 한국어·법·제도 교육을 제공하여 높은 지역사회 이해도를 바탕으로 적응·정착을 유도함



자료 : 뉴시스(2026.03.08.)

[그림 2-6] 경북글로벌학당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경북형 초청장학제도/K-GKS) 이공계 외국인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석·박사과정 학비, 체류비 등을 지원하여 유치·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신산업·첨단산업 분야 전문 인력 확보를 도모함
- (지역기반비자 희망이음사업) 지역특화형·광역형 비자 기반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기관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 취업 연계 지원, 동반가족 역량 강화 교육, 통·번역 서비스(부동산 정보제공, 행정서비스 제공, 일상생활 안내 등), 문화·체육행사 지원, 비자 사업 홍보 등을 추진하여 전주기 원스톱 지원을 도모함
- 희망이음사업은 지역기반비자를 통해 유입된 이민자와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정주할 수 있도록 폭넓은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주거 및 행정서비스

정보제공, 한국어교육, 자녀 교육·보육 지원, 배우자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25년까지 지역특화형 비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6년부터 지역특화형 및 광역형 비자로 확대됨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패널조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경북에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정착 단계별 특성과 수요를 파악하고자 함. 주요 조사 항목은 경북에서의 삶(한국어 수준·만족도·어려움), 건강(건강상태·의료기관 이용·안전망), 사회적 교류(소속감·정기 참여 단체/모임·도움요청 대상), 서비스 이용(시설 이용 경험/만족도·행정서비스 이용 경험/만족도·교육 또는 서비스 경험/필요도), 주거(주거환경·거주), 사회적 배제(차별), 노동(직업/노동환경·만족도·이직의향), 소득과 소비(소득·소비·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가족구성·자녀 양육, 가족 초청) 등 9개 분야로 구성됨. 또한, '외국인 우수인재 커뮤니티 구축 워크숍'과 연계하여 희망이음담당자를 통해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조사 참여도와 신뢰성을 제고함
- 한편, 'Work in Gumi 취업매칭 연계 지원'과 같이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공공 차원에서 외국인 구직자(유학생, 결혼이민자)와 지역 기업 간 취업 연계를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Work in Gumi 취업매칭 연계 지원) 구미시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를 조사하여 관내 대학 유학생 및 결혼이민자와 연계함으로써 외국인 구직자의 취업을 통한 지역 정착을 지원함

■ 외국인정책 전담 조직 '외국인공동체과' 운영

- 지방시대정책국 내 외국인정책팀·외국인지원팀·다문화정책팀 등 3개 팀(총 12인, 휴직·교육 제외)으로 구성된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23.1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외국인정책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우수시군 평가, 광역형·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 팀장 1인·주무관 4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됨
- (외국인지원팀) 외국인지원 시책 개발, 외국인 정착지원, 사회통합 관련 사업 지원, 근로자 상담센터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팀장 1인·주무관 2인 등 총 3인으로 구성됨
- (다문화정책팀) 가족센터 운영·관리,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다문화가족 도(道) 자체 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함. 팀장 1인·주무관 2인 등 총 3인으로 구성됨
-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 광역형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 등 지역 주도형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한 점이 특징임

소속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외국인공동체과장	외국인공동체과 업무 총괄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팀장	외국인정책 총괄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주무관	광역비자 추진, 의회 업무보고 등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주무관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 외국인 통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및 우수시군 평가 등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주무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 등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주무관	서무, 예산, 회계 등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팀장	외국인 지원 시책 개발, 외국인지원팀 업무 총괄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주무관	외국인 정착 지원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주무관	외국인 사회통합 관련 사업 지원,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활성화 지원 등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팀장	다문화정책 업무 총괄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주무관	경상북도 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주무관	다문화가족 도 자체사업 추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운용, 국제결혼 건전화 추진,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주무관	휴직('25.7.29.~'26.9.16.)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주무관	장기교육('26.1.~12.)

자료 :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s://www.gb.go.kr/Main/index.html>)

[그림 2-7] 경상북도 외국인정책 담당 조직 및 인력 현황

3. 전북 외국인정책 여건 및 추진사업 분석

가. 전북 외국인인구 현황 및 특성

1) 전북 외국인인구 현황

가. 외국인주민/등록·거소 외국인¹⁾ 규모 및 추이

■ 전북 외국인인구 규모

- '24.11월 기준, 전북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은 79,224명으로, 전북 총인구(1,758,836명)의 4.5% 수준임
- 외국인주민 79,224명 중 외국인 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동포·기타 외국인 등 한국 국적 미취득자가 72.8%(57,688명)이고, 국적 취득자와 외국인주민 자녀가 27.2%(21,536명)임
- '25.12월 기준, 전북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는 53,284명으로, 전북 총인구(1,724,856명)의 3.1% 수준임
- 이 중, 등록외국인이 92.1%(49,077명)이고,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가 7.9%(4,207명)임

[표 2-2] 전북 외국인인구 규모

(단위 : 명)

구분	총계	국적미취득 / 장기체류						국적취득		
		소계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소계	국적 취득자	국내 출생자녀
외국인주민	79,224	57,688	14,956	5,936	10,198	2,768	23,830	21,536	7,540	13,996
등록·거소외국인		53,284	18,569	5,305	12,935	4,730	11,745			

자료 : 행정안전부(2025),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6),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현황(2025년 12월말 기준)

1)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은 매년 11월 1일 전후 3개월 이상 거주한 국적미취득자(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동포·기타외국인)·국적취득자·외국인주민 자녀(출생)를 일컫고, 법무부의 '등록·거소 외국인'은 입국 후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등록번호 또는 거소증을 발급받은 일반 외국인 및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를 일컫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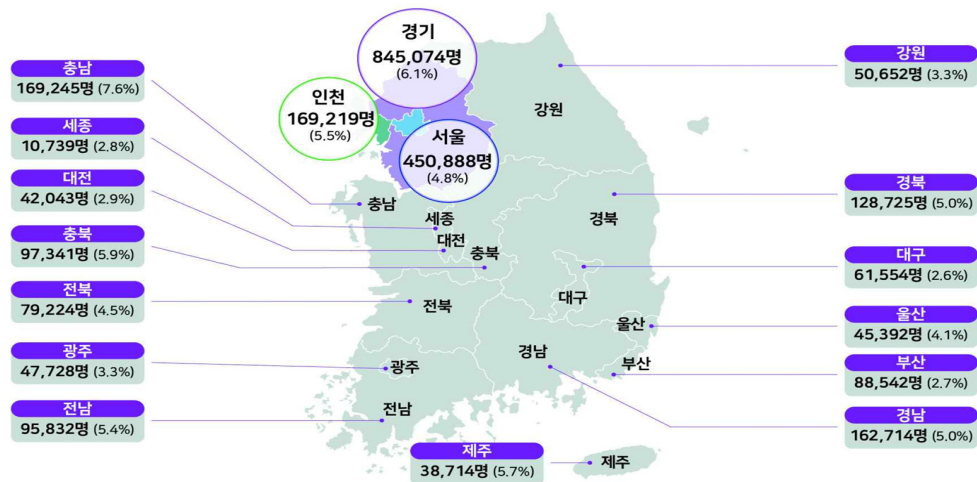
- 전북 외국인주민의 절대 규모는 크지 않은 편임. 전국 외국인주민 2,583,626명의 3.0%(79,224명) 수준으로, 경기(33.7%), 서울(14.5%), 경남(7.4%), 충남(6.9%), 인천(6.3%), 경북(5.3%), 전남(4.2%), 충북(4.1%), 부산(3.3%)에 이어 전국 10위임
-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중 또한 약 4.5%로, 충남(7.6%), 경기(6.1%), 충북(5.9%), 제주(5.7%), 인천(5.5%), 전남(5.4%), 경북·경남(각 5.0%), 서울(4.8%)에 이어 전국 10위임. 이는 전국 평균(5.0%)보다 0.5%p 낮은 수치임

[표 2-3]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 명, %)

광역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수	광역자치단체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중
전국	2,583,626 (100.0)	전국	5.0
경기도	845,074 (33.7)	충청남도	7.6
서울특별시	450,888 (14.5)	경기도	6.1
경상남도	162,714 (7.4)	충청북도	5.9
충청남도	169,245 (6.9)	제주특별자치도	5.7
인천광역시	169,219 (6.3)	인천광역시	5.5
경상북도	128,725 (5.3)	전라남도	5.4
전라남도	95,832 (4.2)	경상북도	5.0
충청북도	97,341 (4.1)	경상남도	5.0
부산광역시	88,542 (3.3)	서울특별시	4.8
전북특별자치도	79,224 (3.0)	전북특별자치도	4.5
대구광역시	61,554 (2.2)	울산광역시	4.1
울산광역시	45,392 (2.0)	강원특별자치도	3.3
강원특별자치도	50,652 (1.9)	광주광역시	3.3
광주광역시	47,728 (1.8)	대전광역시	2.9
제주특별자치도	38,714 (1.6)	세종특별자치시	2.8
대전광역시	42,043 (1.3)	부산광역시	2.7
세종특별자치시	10,739 (0.4)	대구광역시	2.6

자료 : 행정안전부(2025),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 : 행정안전부(2025),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그림 2-8]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현황

- 이와 유사하게, 전북 등록·거소 외국인 규모도 전국 2,159,052명의 2.5%(53,284명) 수준으로, 경기(34.0%), 서울(19.7%), 충남·인천(각 6.5%), 경남(5.9%), 경북(4.6%), 충북(3.6%), 전남·부산(각 3.2%)에 이어 10위임

[표 2-4] 광역자치단체별 등록·거소 외국인 현황

(단위 : 명, %)

광역자치단체	등록·거소 외국인	광역자치단체	등록·거소 외국인
전국	2,159,052 (100.0)	부산광역시	68,436 (3.2)
경기도	733,241 (34.0)	전북특별자치도	53,284 (2.5)
서울특별시	425,401 (19.7)	대구광역시	45,467 (2.1)
충청남도	141,188 (6.5)	울산광역시	36,542 (1.7)
인천광역시	140,513 (6.5)	광주광역시	34,528 (1.6)
경상남도	127,901 (5.9)	강원특별자치도	33,621 (1.6)
경상북도	98,904 (4.6)	제주특별자치도	32,038 (1.5)
충청북도	78,513 (3.6)	대전광역시	31,749 (1.5)
전라남도	69,749 (3.2)	세종특별자치시	7,977 (0.4)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6), 지역별 외국인(등록+거소) 현황(2025년 12월말 기준)

■ 전북 외국인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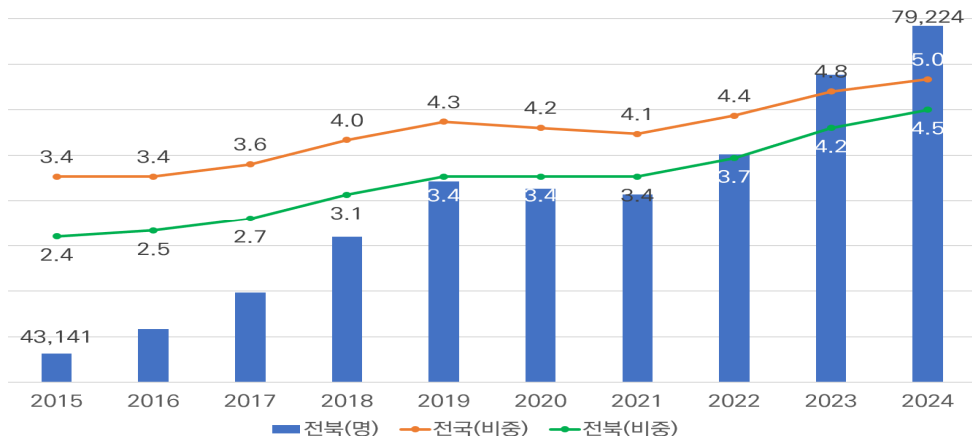
- 전북 외국인인구는 지난 10년간 COVID-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구체적으로, 외국인주민은 '15년 대비 '24년 약 83.6%(36,083명), 등록·거소 외국인은 '15년 대비 '25년 약 82.3%(24,053명) 증가함
- 이에 따라, 전북 총인구 중 외국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함. 외국인주민의 경우 '15년(2.3%) 대비 '24년(4.5%) 2.2%p, 등록·거소 외국인은 '15년(1.6%) 대비 '25년(3.1%) 1.5%p 증가함
- 이러한 증가 폭은 전국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국인주민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1.1%p → 0.5%p)
 - 동기간('15년~'24년) 전국 외국인주민의 규모는 48.3%(841,707명), 비중은 1.6%p 늘어난 수준에 그침. 이와 유사하게, 전국 등록·거소 외국인도 동기간('15년~'25년) 규모는 47.1%(691,179명), 비중은 1.4%p만 증가함
 - 다만, 등록·거소 외국인의 경우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1.1~1.4%p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표 2-5] 전국 및 전북 외국인인구 추이

(단위 : 명, %, %p)

구분			2015	2017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외국인주민	전국	규모	1,741,919	1,861,084	2,216,612	2,134,569	2,258,248	2,459,542	2,583,626	
		비중	3.4	3.6	4.3	4.1	4.4	4.8	5.0	
	전북	규모	43,141	49,840	62,151	60,684	65,119	73,802	79,224	
		비중	2.3	2.7	3.4	3.4	3.7	4.2	4.5	
	비중(전국-전북)		1.1	0.9	0.9	0.7	0.7	0.6	0.5	
등록·거소 외국인	전국	규모	1,467,873	1,583,099	1,731,803	1,569,836	1,688,855	1,881,921	2,042,017	2,159,062
		비중	2.8	3.1	3.3	3.0	3.3	3.7	4.0	4.2
	전북	규모	29,231	32,001	36,638	33,843	38,658	44,334	48,090	53,284
		비중	1.6	1.7	2.0	1.9	2.2	2.5	2.8	3.1
	비중(전국-전북)		1.2	1.4	1.3	1.1	1.1	1.2	1.2	1.1

자료 : 행정안전부(각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각년도),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12월말 기준),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현황(12월말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2025),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그림 2-9] 전북 외국인주민 현황 및 추이('15~'24년)

나. 외국인인구 특성별 현황 및 최근 변화

■ 유형별·체류자격별 분포

- '24.11월 기준 전북 외국인주민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79,224명 중 국적 미취득자 72.8%, 국적 취득자 27.2%로, 대다수가 국적 미취득자임. 세부적으로는 기타 외국인을 제외하면, 외국인 근로자(18.9%), 국내 출생 자녀(17.7%), 유학생(12.9%), 국적 취득자(9.5%), 결혼이민자(7.5%), 외국국적동포(3.5%)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전국적으로 2,583,626명의 외국인주민 중 국적 미취득자가 79.1%이며, 세부 유형별로는 기타 외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근로자(19.5%), 외국국적동포(16.1%), 국내 출생 자녀(11.4%), 국적 취득자(9.5%), 유학생(9.0%), 결혼이민자(7.4%) 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북은 국적 취득자의 비중이 6.3%p 높은 편이며, 국내 출생 자녀와 유학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외국국적동포의 비중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23.11월 당시 현황과 비교해 보면, 전북은 외국인 근로자와 기타 외국인의 비중이 각각 0.6%p, 1.9%p 증가한 데 반해, 결혼이민자(-0.5%p), 유학생(-0.4%p), 외

국국적동포(-0.3%p), 국적 취득자(-0.1%p), 국내 출생 자녀(-1.1%p)는 소폭 감소하는 등 국적 취득자 비중이 줄어드는 변동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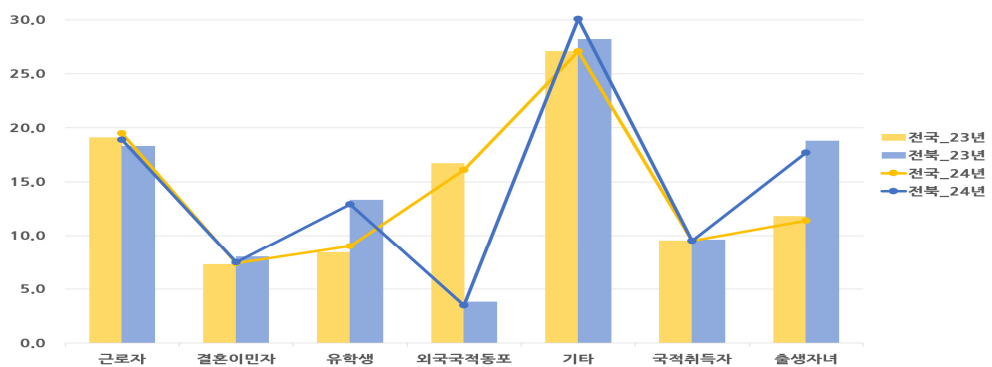
- 이와 같은 전북 외국인주민의 유형별 비중 변화는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두드러짐
 - 전국의 경우, '23년 대비 '24년 비중 변화는 외국인 근로자(+0.4%p), 결혼이민자(+0.1%p), 유학생(+0.6%p), 외국국적동포(-0.6%p), 국내 출생 자녀(-0.4%p)에 국한됨

[표 2-6]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유형별 분포 변화

(단위 : 명, %, %p)

구분	총계	소계	국적 미취득					기타	국적취득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소계	국적 취득자	국내 출생 자녀
2023	전국	2,459,542	1,935,150	470,250	180,072	206,329	410,972	667,527	524,392	234,506	289,886
		100.0	78.7	19.1	7.3	8.4	16.7	27.1	21.3	9.5	11.8
	전북	73,802	52,799	13,505	5,872	9,799	2,781	20,842	21,003	7,118	13,885
		100.0	71.5	18.3	8.0	13.3	3.8	28.2	28.5	9.6	18.8
	비중(전북-전국)	-7.1	-0.8	0.6	4.9	-12.9	1.1	7.1	0.1	7.0	
2024	전국	2,583,626	2,042,744	502,634	191,839	233,237	415,695	699,339	540,882	245,578	295,304
		100.0	79.1	19.5	7.4	9.0	16.1	27.1	20.9	9.5	11.4
	전북	79,224	57,688	14,956	5,936	10,198	2,768	23,830	21,536	7,540	13,996
		100.0	72.8	18.9	7.5	12.9	3.5	30.1	27.2	9.5	17.7
	비중(전북-전국)	-6.2	-0.6	0.1	3.8	-12.6	3.0	6.2	0.0	6.2	

자료 : 행정안전부(각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 : 행정안전부(각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그림 2-10]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유형별 비중 변화

- '25.12월 기준, 전북 등록·거소 외국인 53,284명의 체류자격별 분포를 보면, 유학·연수(24.3%), 비전문취업(24.2%), 결혼이민(10.0%)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4.12월 당사와 비교해 보면, 유학·연수(2.0%p), 계절근로(1.4%p), 지역특화형(1.2%p)이 증가하였고, 비전문취업(1.5%p)과 F계열(영주 0.4%p·결혼이민 0.5%p·외국국적동포 1.2%p·기타 1.1%p)이 감소함
- 전국 대비 전북은 유학·연수, 구직, 계절근로, 비전문취업, 결혼이민/기타, 지역특화형의 비중이 높은 반면, 영주와 외국국적동포의 비중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5.12월 기준 전국 등록·거소 외국인(2,159,052명)의 경우, 외국국적동포(29.4%), 비전문취업(15.6%), 유학·연수(14.1%), 영주(10.2%) 등의 순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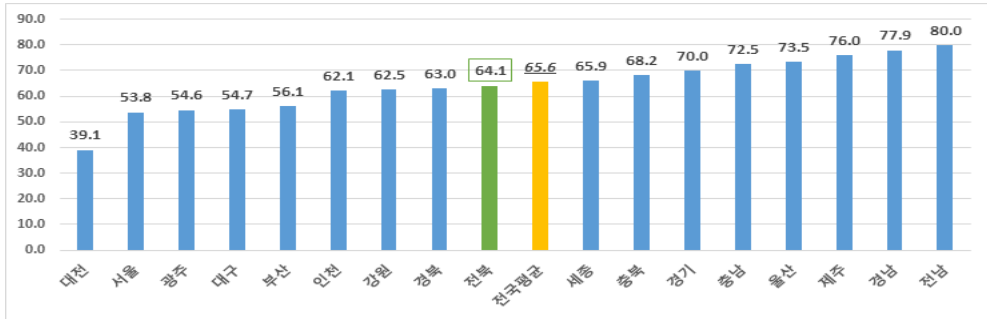
[표 2-7] 전국 및 전북 등록·거소 외국인 체류자격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2024		2025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체		2,042,017 (100.0)	48,090 (100.0)	2,159,052 (100.0)	53,284 (100.0)
D계열	유학·연수(D2~D4)	259,045 (12.7)	10,721 (22.3)	305,296 (14.1)	12,935 (24.3)
	구직(D-10)	18,212 (0.9)	842 (1.8)	21,933 (1.0)	1,012 (1.9)
	기타	13,749 (0.7)	222 (0.5)	14,221 (0.7)	235 (0.4)
E계열	특정활동(E-7)	62,975 (3.1)	1,444 (3.0)	78,386 (3.6)	1,732 (3.3)
	계절근로(E-8)	19,690 (1.0)	1,626 (3.4)	31,609 (1.5)	2,574 (4.8)
	비전문취업(E-9)	328,114 (16.1)	12,355 (25.7)	336,713 (15.6)	12,902 (24.2)
	기타 근로자	48,105 (2.4)	1,014 (2.1)	47,421 (2.2)	974 (1.8)
F계열 · 외국국적동포	거주(F-2)	58,277 (2.9)	598 (1.2)	64,284 (3.0)	657 (1.2)
	영주(F-5)	202,732 (9.9)	2,234 (4.6)	220,782 (10.2)	2,257 (4.2)
	결혼이민(F-6)	146,672 (7.2)	5,065 (10.5)	153,213 (7.1)	5,305 (10.0)
	외국국적동포(F-4, H-2)	645,482 (31.6)	4,879 (10.1)	635,214 (29.4)	4,730 (8.9)
	기타	146,570 (7.2)	4,120 (8.6)	144,660 (6.7)	3,986 (7.5)
R계열	지역특화형(본인+동반가족)	4,293 (0.2)	1,011 (2.1)	9,925 (0.5)	1,740 (3.3)
G계열(난민신청 등)+기타		88,101 (4.3)	1,959 (4.1)	95,395 (4.4)	2,245 (4.2)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각년도),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12월말 기준),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12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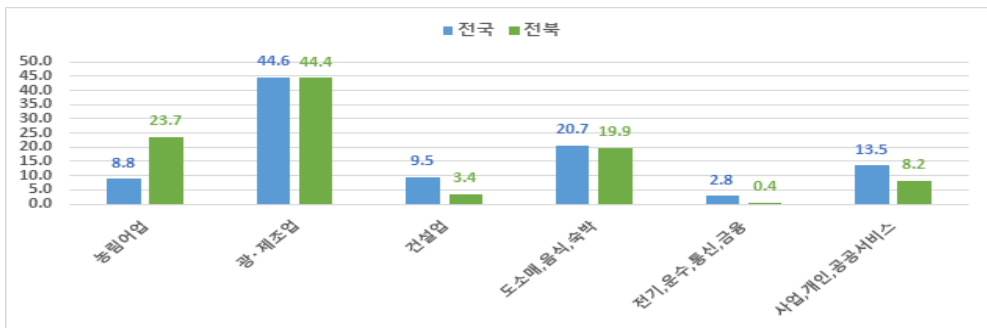
- 구체적으로 근로자 유형을 살펴보면²⁾, 전북 외국인의 취업률은 64.1%로, 전국 평균(65.6%)보다 1.5%p 낮았으며,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경북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



자료 : 법무부(2025),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원자료(가중치 적용), 연구진 분석

[그림 2-11] 전국 시도별 외국인 취업률

- (산업별 분포) 전북 외국인 근로자의 종사 산업은 광·제조업이 4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농림어업(23.7%), 도소매·음식·숙박업(1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를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농림어업 종사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건설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종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자료 : 법무부(2025),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원자료(가중치 적용), 연구진 분석

[그림 2-12] 전국 및 전북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별 분포

2) 근로자 유형의 수치(pp.39-41)는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원자료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치로, 표본조사 결과에 기반한 값이므로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직종별 분포) 전북 외국인 근로자의 직종은 생산직(35.9%)과 단순노무직(33.6%)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서비스·판매직(15.2%), 농림어업 숙련직(8.7%), 전문·관리직(4.1%), 사무직(2.5%) 순으로 이어짐
-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단순노무직(6.5%p)과 농림어업 숙련직(3.9%p)의 비중은 높은 반면, 생산직(-5.9%p), 전문·관리직(-2.9%p), 사무직(-1.4%p)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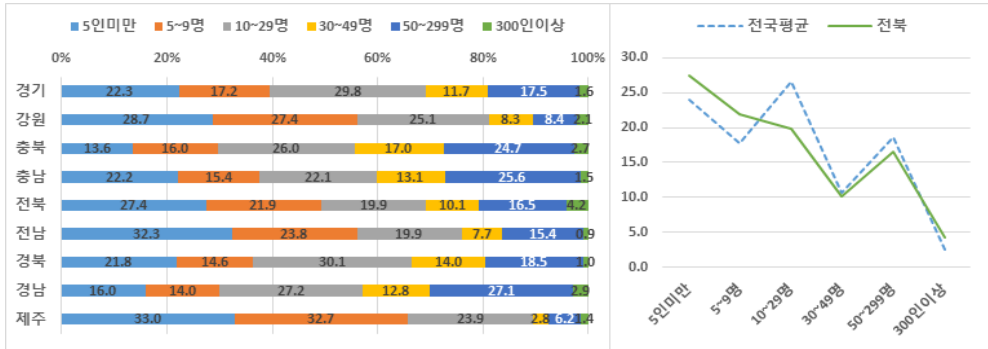
[표 2-8] 전국 시도별 외국인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단위 :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 숙련직	생산직	단순노무직
전국	7.0	3.9	15.3	4.8	41.8	27.1
서울	16.4	8.7	31.4	0.2	23.3	20.1
부산	13.4	2.9	17.6	5.5	38.2	22.5
대구	11.0	*	13.8	*	48.6	23.1
인천	6.9	5.7	19.4	0.7	42.9	24.4
광주	8.2	3.0	10.8	1.8	44.6	31.7
대전	19.3	*	26.9	*	18.1	30.8
울산	5.5	1.0	7.8	3.6	67.5	14.5
세종	9.3	2.3	14.6	1.9	43.1	28.7
경기	5.1	4.0	14.2	1.5	47.2	28.1
강원	6.7	0.9	19.2	16.9	16.1	40.2
충북	3.4	2.4	8.4	2.8	46.5	36.5
충남	3.2	2.4	9.4	8.5	46.7	29.9
전북	4.1	2.5	15.2	8.7	35.9	33.6
전남	3.9	1.1	5.9	20.1	27.1	41.9
경북	3.6	1.4	7.6	11.7	52.4	23.3
경남	4.4	2.0	5.1	9.3	56.4	22.8
제주	9.2	2.6	22.7	31.8	6.5	27.4

자료 : 법무부(2025),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원자료(가중치 적용), 연구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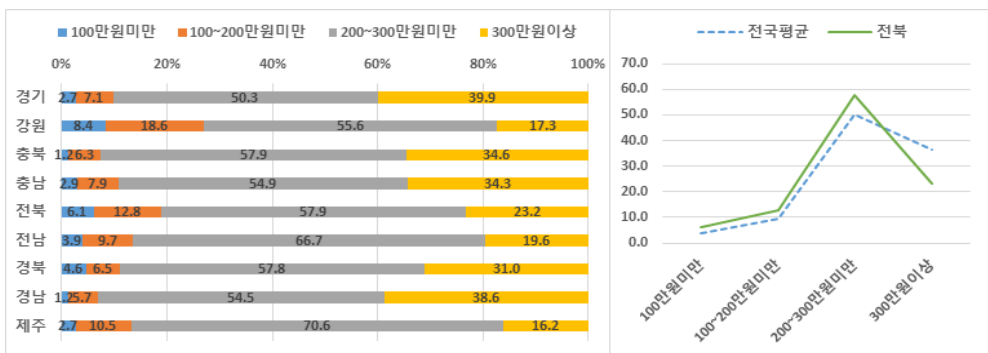
- (사업체 규모별 분포) 전국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10~29인 규모 사업체 고용 비중(26.5%)이 가장 높은 것과 달리, 전북은 5인 미만 소규모·영세 사업체 고용 비중이 27.4%로 가장 높았으며, 5~9인(21.9%), 10~29인(19.9%), 50~299인(16.5%) 순으로 나타남
- 전북의 5인 미만 사업체 종사 비중(27.4%)은 전국 평균보다 3.4%p,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 비중(49.3%)도 전국 평균보다 7.6%p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 이는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전남·강원에 이어 소규모 사업체 고용 비중이 4번째로 높은 수준임



자료 : 법무부(2025),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원자료(가중치 적용), 연구진 분석

[그림 2-13] 전국 및 전북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

- (월평균 소득별 분포) 전북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300만원 미만인 5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300만원 이상(23.2%), 100~200만원 미만(12.8%) 순으로 나타남. 한편,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6.1%에 달함
- 전국과 비교하면, 전북은 100만원 미만(+2.1%p), 100~200만원 미만(+3.5%p), 200~300만원 미만(+7.8%p) 비중은 높은 반면, 300만원 이상(-13.5%p) 비중은 낮게 나타남
-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300만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 비중은 제주(16.2%), 강원(17.3%), 전남(19.6%)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수준인 반면, 20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18.9%)은 강원(27.0%)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자료 : 법무부(2025),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원자료(가중치 적용), 연구진 분석

[그림 2-14] 전국 및 전북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별 분포

■ 주요 국적별 분포

- '24.11월 기준, 전북 외국인주민의 주요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베트남(28.9%)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태국(13.5%), 중국(10.0%), 캄보디아(6.4%), 중국(한국계, 6.0%), 네팔(5.3%), 우즈베키스탄(4.1%) 순으로 이어짐
- '25.12월 기준, 전북 등록·거소 외국인의 주요 국적별 분포 역시 베트남(27.9%)이 가장 많고, 중국·캄보디아·중국(한국계)·네팔·우즈베키스탄 등이 주요 국적으로 꼽힘
- 전국 외국인주민 및 등록·거소 외국인의 경우, 중국(한국계), 베트남, 중국 등의 순으로 많아, 전북이 베트남·태국·네팔·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최근 들어 주요 국적별 분포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외국인주민의 경우, '23년 대비 '24년 베트남·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의 비중이 소폭 증가한 반면, 태국·중국·중국(한국계) 등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등록·거소 외국인의 경우, '24년 대비 '25년 네팔·우즈베키스탄의 비중이 다소 증가한 반면 중국(한국계) 비중이 감소함

[표 2-9]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주요 국적별 분포 변화

(단위 : 명, %)

구분	전체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2023	전국 1,935,150	중국(한국계) 27.5	베트남 12.8	중국 11.4	태국 9.9	우즈베키스탄 4.0	네팔 3.0	캄보디아 2.8
	전북 52,799	베트남 26.8	태국 15.6	중국 11.4	중국(한국계) 6.6	캄보디아 5.9	네팔 5.4	우즈베키스탄 3.7
2024	전국 2,042,744	중국(한국계) 26.3	베트남 14.0	중국 10.9	태국 8.7	우즈베키스탄 4.1	네팔 3.4	캄보디아 3.1
	전북 57,688	베트남 28.9	태국 13.5	중국 10.0	캄보디아 6.4	중국(한국계) 6.0	네팔 5.3	우즈베키스탄 4.1

주 : 한국 국적자(국적 취득자, 국내 출생 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 행정안전부(각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표 2-10] 전국 및 전북 등록·거소 외국인 주요 국적별 분포 변화

(단위 : 명, %)

구분		전체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2024	전국	204,207	중국(한국계) 31.2	베트남 12.8	중국 10.7	우즈베키스탄 4.4	미국 4.2	네팔 3.5	캄보디아 3.0
	전북	48,090	베트남 28.0	중국 10.9	중국(한국계) 8.7	캄보디아 6.9	네팔 6.8	우즈베키스탄 5.1	인도네시아·미얀마·필리핀 각 3.4
2025	전국	215,052	중국(한국계) 29.5	베트남 13.6	중국 10.5	우즈베키스탄 4.6	미국 4.2	네팔 4.1	캄보디아 3.0
	전북	53,284	베트남 27.9	중국 10.3	중국(한국계) 7.7	네팔 7.6	캄보디아 6.8	우즈베키스탄 6.5	미얀마·필리핀 각 3.4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각년도),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 지역별 외국인(등록·거소) 현황

■ 연령대별 분포

- '24.11월 기준, 전북 외국인주민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26.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0대(25.9%), 40대(13.7%), 10대(12.6%) 등의 순으로 이어지는 등 20~30대 청년층이 과반수를 이루고 있음(전체의 52.5% 수준)
- '25.12월 기준, 전북 등록·거소 외국인의 연령대별 분포 역시 20~30대 청년층의 비중이 68.1%(20대 38.9%, 30대 29.2%)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이러한 특성은 전국 분포와 비교해 보면 더욱 두드러짐. 전국 대비 전북은 40대 이상(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연령대가 적고, 30대 이하(특히 청년층)가 많아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편임
- 특히 전북 외국인주민과 등록·거소 외국인 모두 전년 대비 30~40대의 비중이 소폭 늘어나 30대 비중에 있어서 전국과의 격차가 커짐

[표 2-11]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자녀 연령대별 분포 변화

(단위 : 명, %)

구분		전체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23	전국	2,478,058 (100.0)	224,647 (9.1)	229,194 (9.2)	484,053 (19.5)	609,072 (24.6)	377,148 (15.2)	305,592 (12.3)	248,352 (10.0)
	전북	74,172 (100.0)	7,479 (10.1)	9,511 (12.8)	19,281 (26.0)	19,083 (25.7)	9,652 (13.0)	5,865 (7.9)	3,301 (4.5)
2024	전국	2,603,720 (100.0)	224,433 (8.6)	253,300 (9.7)	521,390 (20.0)	632,719 (24.3)	398,540 (15.3)	304,842 (11.7)	268,496 (10.3)
	전북	79,653 (100.0)	7,383 (9.3)	10,039 (12.6)	20,662 (25.9)	21,217 (26.6)	10,890 (13.7)	5,914 (7.4)	3,548 (4.5)

주 : 외국인주민 자녀(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국내출생) 포함

자료 : 행정안전부(각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표 2-12] 전국 및 전북 등록·거소 외국인 연령대별 분포 변화

(단위 : 명, %)

구분		전체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24	전국	2,042,017 (100.0)	72,708 (3.6)	87,812 (4.3)	499,744 (24.5)	514,052 (25.2)	302,203 (14.8)	261,901 (12.8)	303,597 (14.9)
	전북	48,090 (100.0)	1,068 (2.2)	1,685 (3.5)	18,576 (38.6)	13,731 (28.6)	5,408 (11.2)	3,886 (8.1)	3,736 (7.8)
2025	전국	2,159,052 (100.0)	75,626 (3.5)	103,067 (4.8)	546,636 (25.3)	536,208 (24.8)	323,634 (15.0)	255,596 (11.8)	318,285 (14.7)
	전북	53,284 (100.0)	1,321 (2.5)	2,204 (4.1)	20,727 (38.9)	15,555 (29.2)	6,032 (11.3)	3,686 (6.9)	3,759 (7.1)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각년도),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12월말 기준),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12월말 기준)

■ 체류기간별 분포

- '24.11월 기준, 전북 외국인주민(국적 미취득자 한정)의 체류기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5~10년 미만(26.4%), 1년 미만(24.4%), 1~2년 미만(17.2%), 2~3년 미만(13.1%), 10년 이상(11.5%) 등의 순으로 많음. 즉, 3년 미만이 54.7% 수준으로, 체류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4년 이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국 분포와 대조적임
- 더욱이 전북은 '23년 대비 '24년 2~3년 미만 체류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8.2%p) 4~5년 미만 체류자가 줄어들어(-8.1%p) 정주의 비중이 더욱 감소하는 양상임

[표 2-13]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체류기간별 분포 변화

(단위 : 명, %)

구분		전체	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4년미만	4~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미상
2023	전국	1,935,150 (100.0)	382,751 (19.8)	251,198 (13.0)	116,727 (6.0)	88,820 (4.6)	201,202 (10.4)	550,594 (28.5)	343,494 (17.8)	364 (0.0)
	전북	52,799 (100.0)	13,238 (25.1)	8,824 (16.7)	2,608 (4.9)	2,606 (4.9)	6,214 (11.8)	13,463 (25.5)	5,844 (11.1)	2 (0.0)
2024	전국	2,042,744 (100.0)	353,818 (17.3)	319,127 (15.6)	218,392 (10.7)	91,949 (4.5)	76,452 (3.7)	590,070 (28.9)	392,598 (19.2)	338 (0.0)
	전북	57,688 (100.0)	14,049 (24.4)	9,933 (17.2)	7,561 (13.1)	2,089 (3.6)	2,161 (3.7)	15,234 (26.4)	6,659 (11.5)	2 (0.0)

주 : 국적 취득자와 국내 출생 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 행정안전부(각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 전북 시군별 외국인인구 현황

가. 시군별 외국인주민/등록·거소 외국인 규모 및 추이

■ 시군별 외국인인구 규모

- '25.12월 기준, 전북 등록·거소 외국인 53,284명의 약 70%가 전주시(23.0%)·군산시(21.6%)·익산시(14.7%)·완주군(10.5%) 등 주요 도시 및 인접 지역에 거주하며, 정읍시·김제시·고창군·남원시·부안군을 포함한 9개 시군에 대다수(95.1%)가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남
- '24.11월 기준 전북 외국인주민(79,224명)의 분포도 이와 유사함
- 각 시군의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중은 고창군(8.3%), 무주군(7.2%), 완주군(6.9%), 김제시(6.7%), 정읍시(6.3%), 장수군(6.2%), 진안군(6.1%)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14개 시군 중 10곳의 외국인주민 비중이 5% 이상에 해당함
- 종합해 보면,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이거나 총인구 대비 6% 이상*인 '외국인주민 집중거주' 시군은 총 10곳이며, 특히 전주시·군산시는 등록·거소 외국인 규모도 1만명 이상인 외국인인구 집중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인 시군은 군산·익산·전주 등 3개 지역이며, 총인구 대비 6% 이상인 시군은 완주·정읍·김제·고창·무주·진안·장수 등 7개 지역임. 행정안전부와 동일한 기준(총인구 대비 5% 이상)을 적용할 경우, 부안·임실도 포함되어 전북 대다수 시군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에 해당함

* 내국인 인구감소 심화로 인해 총인구 대비 외국인인구 비중이 자연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기준(5% 이상)보다 엄격하게 6% 이상으로 분석함

[표 2-14] 시군별 외국인인구 현황

(단위 : 명, %)

시군	등록·거소 외국인	시군	외국인주민	시군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중
전북도	53,284 (100.0)	전북도	79,224 (100.0)	전북도	4.5
전주시	12,281 (23.0)	전주시	17,864 (22.5)	고창군	8.3
군산시	11,493 (21.6)	군산시	14,257 (18.0)	무주군	7.2
익산시	7,820 (14.7)	익산시	11,572 (14.6)	완주군	6.9
완주군	5,599 (10.5)	완주군	7,105 (9.0)	김제시	6.7
정읍시	4,110 (7.7)	정읍시	6,398 (8.1)	정읍시	6.3
김제시	3,724 (7.0)	김제시	5,361 (6.8)	장수군	6.2
고창군	2,285 (4.3)	고창군	4,278 (5.4)	진안군	6.1
남원시	1,757 (3.3)	남원시	3,134 (4.0)	군산시	5.4
부안군	1,590 (3.0)	부안군	2,518 (3.2)	부안군	5.4
진안군	662 (1.2)	무주군	1,643 (2.1)	임실군	5.2
장수군	544 (1.0)	진안군	1,392 (1.8)	순창군	4.7
순창군	527 (1.0)	임실군	1,264 (1.6)	익산시	4.2
임실군	495 (0.9)	장수군	1,231 (1.6)	남원시	4.2
무주군	397 (0.7)	순창군	1,207 (1.5)	전주시	2.7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6), 지역별 외국인(등록+거소) 현황(2025년 12월말 기준)
행정안전부(2025),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표 2-15] 시군별 외국인주민 수×총인구 대비 비율 매트릭스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수	6% 이상	5% 이상	4% 이상	4% 미만
1만명 이상		군산	익산	전주
5천명 이상	완주, 정읍, 김제			
3천명 이상	고창		남원	
1.5천명 이상	무주	부안		
1.5천명 미만	진안, 장수	임실	순창	

자료 : 행정안전부(2025),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시군별 외국인인구 추이

- 지난 10년간 전북 전체 외국인인구의 시군별 분포 추이를 보면, 전주시 등에서 소폭 늘었다가 감소하고 있고, 익산시·장수군·순창군 등에서 감소해 왔으며, 고창군 등에서 최근 들어 증가하는 등 시군별 편차가 확인됨

- ① (등록·거소 외국인) '15년 대비 '25년 전북 등록·거소 외국인은 전주(5,613명)·군산(5,086명)·익산(3,116명)·완주(3,163명) 등을 중심으로 확대됨. 동기간 1% 이상 증가한 지역은 고창(1.4%)·완주(1.3%)·부안(1.2%) 등 3곳이며, 진안도 0.9% 증가함. ② (외국인주민) '15년 대비 '24년 전북 외국인주민 또한 전주(8,534명)·군산(6,367명)·익산(4,524명)·완주(3,723명) 등의 순으로 확대됨. 동기간 1% 이상 증가한 지역은 무주(1.9%)·고창(1.5%)·완주(1.1%)·부안(1.0%) 등 4곳이며, 전주와 김제도 0.9%만큼 증가함

- 등록·거소 외국인은 '24년 대비 '25년 군산·익산·완주에서 800명 이상, 전주에서 600명 이상 증가하였으며, 외국인주민은 '23년 대비 '24년 고창에서 1,000명 이상, 군산·김제·무주에서 500명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외국인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임

- 한편, 전주·군산·익산 등 주요 도시로의 외국인인구 편중 현상이 유지되어 옴

[표 2-16] 시군별 등록·거소 외국인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5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감('25-'15)
전북도	29,231 (100.0)	33,843 (100.0)	33,658 (100.0)	44,334 (100.0)	48,090 (100.0)	53,284 (100.0)	24,053
전주	6,668 (22.8)	9,787 (28.9)	10,699 (27.7)	11,114 (25.1)	11,609 (24.1)	12,281 (23.0)	5,613 (0.8)
군산	6,407 (21.9)	6,768 (20.0)	7,788 (20.1)	9,595 (21.6)	10,644 (22.1)	11,493 (21.6)	5,086 (0.8)
익산	4,704 (16.1)	4,942 (14.6)	5,642 (14.6)	6,553 (14.8)	6,955 (14.5)	7,820 (14.7)	3,116 (0.7)
완주	2,436 (8.3)	3,234 (9.6)	3,827 (9.9)	4,404 (9.9)	4,713 (9.8)	5,599 (10.5)	3,163 (1.3)
정읍	2,439 (8.3)	2,778 (8.2)	3,027 (7.8)	3,387 (7.6)	3,624 (7.5)	4,110 (7.7)	1,671 (0.7)
김제	2,046 (7.0)	1,891 (5.6)	2,317 (6.0)	2,846 (6.4)	3,449 (7.2)	3,724 (7.0)	1,678 (0.8)
고창	945 (3.2)	959 (2.8)	1,253 (3.2)	1,737 (3.9)	1,920 (4.0)	2,285 (4.3)	1,340 (1.4)
남원	1,051 (3.6)	1,063 (3.1)	1,149 (3.0)	1,375 (3.1)	1,523 (3.2)	1,757 (3.3)	706 (0.7)
부안	707 (2.4)	866 (2.6)	1,029 (2.7)	1,120 (2.5)	1,332 (2.8)	1,590 (3.0)	883 (1.2)
진안	340 (1.2)	350 (1.0)	435 (1.1)	501 (1.1)	520 (1.1)	662 (1.2)	322 (0.9)
장수	435 (1.5)	357 (1.1)	408 (1.1)	463 (1.0)	478 (1.0)	544 (1.0)	109 (0.3)
순창	393 (1.3)	341 (1.0)	398 (1.0)	453 (1.0)	507 (1.1)	527 (1.0)	134 (0.3)
임실	391 (1.3)	296 (0.9)	372 (1.0)	438 (1.0)	456 (0.9)	495 (0.9)	104 (0.3)
무주	269 (0.9)	211 (0.6)	314 (0.8)	348 (0.8)	355 (0.7)	397 (0.7)	128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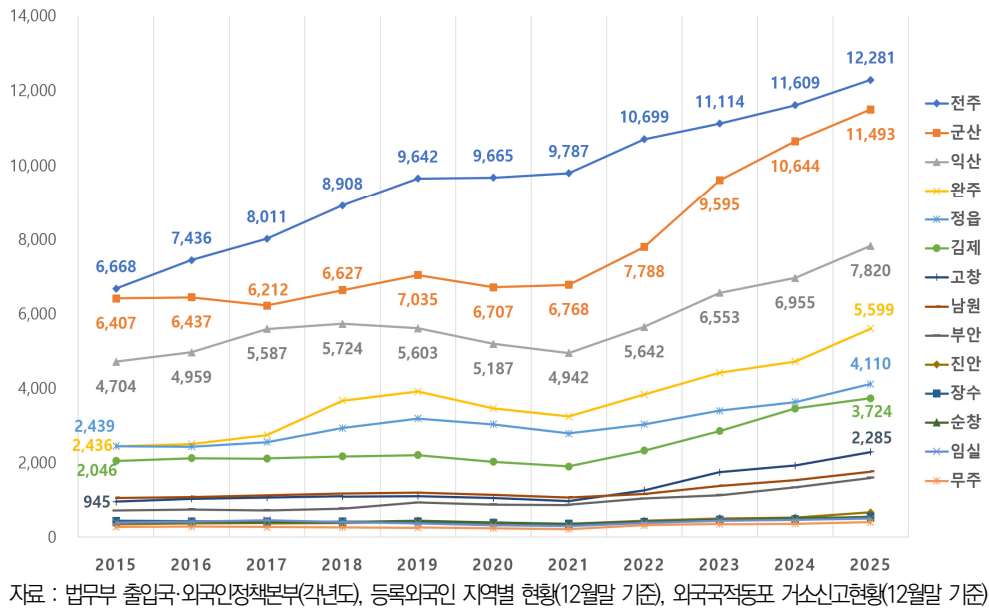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각년도),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12월말 기준),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현황(12월말 기준)

[표 2-17] 시군별 외국인주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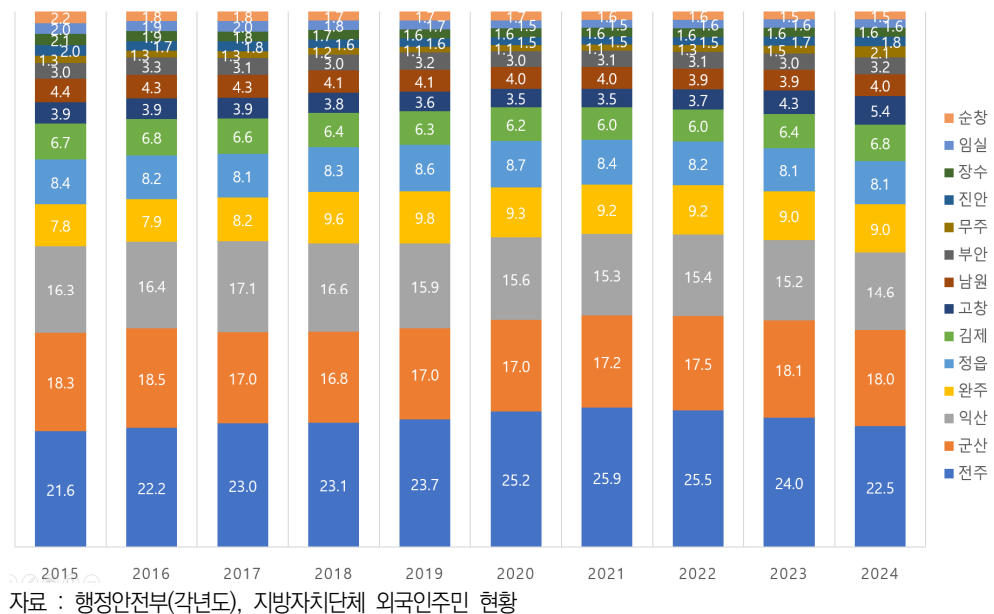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2015	2017	2019	2021	2022	2023	2024	증감('24-'15)
전북도	규모	43,141	49,840	62,151	60,684	65,119	73,802	79,224	36,083
전주	규모	9,330	11,457	14,733	15,728	16,632	17,694	17,864	8,534
	비중	1.4	1.7	2.2	2.3	2.5	2.7	2.7	0.9
군산	규모	7,890	8,454	10,539	10,427	11,378	13,374	14,257	6,367
	비중	2.8	3.1	3.9	3.9	4.3	5.0	5.4	0.8
익산	규모	7,048	8,518	9,874	9,281	9,998	11,229	11,572	4,524
	비중	2.3	2.8	3.4	3.3	3.6	4.1	4.2	0.6
정읍	규모	3,622	4,055	5,354	5,127	5,335	5,991	6,398	2,776
	비중	3.1	3.7	5.0	4.9	5.2	5.8	6.3	0.8
남원	규모	1,903	2,135	2,573	2,431	2,517	2,875	3,134	1,231
	비중	2.2	2.7	3.3	3.2	3.3	3.9	4.2	0.6
김제	규모	2,889	3,281	3,942	3,618	3,910	4,750	5,361	2,472
	비중	3.2	4.0	4.9	4.6	5.0	6.0	6.7	0.9
완주	규모	3,382	4,100	6,101	5,587	6,009	6,670	7,105	3,723
	비중	3.7	4.2	6.3	5.9	6.3	6.6	6.9	1.1
진안	규모	844	901	1,012	940	1,004	1,243	1,392	548
	비중	3.2	3.9	4.4	4.1	4.4	5.4	6.1	0.6
무주	규모	562	649	709	687	866	1,139	1,643	1,081
	비중	2.2	2.8	3.1	3.1	3.9	5.1	7.2	1.9
장수	규모	891	913	1,003	954	1,014	1,168	1,231	340
	비중	3.8	4.3	4.7	4.7	5.1	5.9	6.2	0.4
임실	규모	864	998	1,032	938	1,011	1,201	1,264	400
	비중	2.9	3.8	3.9	3.8	4.1	4.9	5.2	0.5
순창	규모	951	916	1,055	990	1,047	1,106	1,207	256
	비중	3.1	3.4	4.0	3.9	4.1	4.4	4.7	0.3
고창	규모	1,684	1,923	2,252	2,109	2,380	3,177	4,278	2,594
	비중	2.8	3.5	4.2	4.1	4.7	6.3	8.3	1.5
부안	규모	1,281	1,540	1,972	1,867	2,018	2,185	2,518	1,237
	비중	2.2	3.0	4.0	3.9	4.3	4.7	5.4	1.0

자료 : 행정안전부(각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그림 2-15] 전북 시군별 등록·거소 외국인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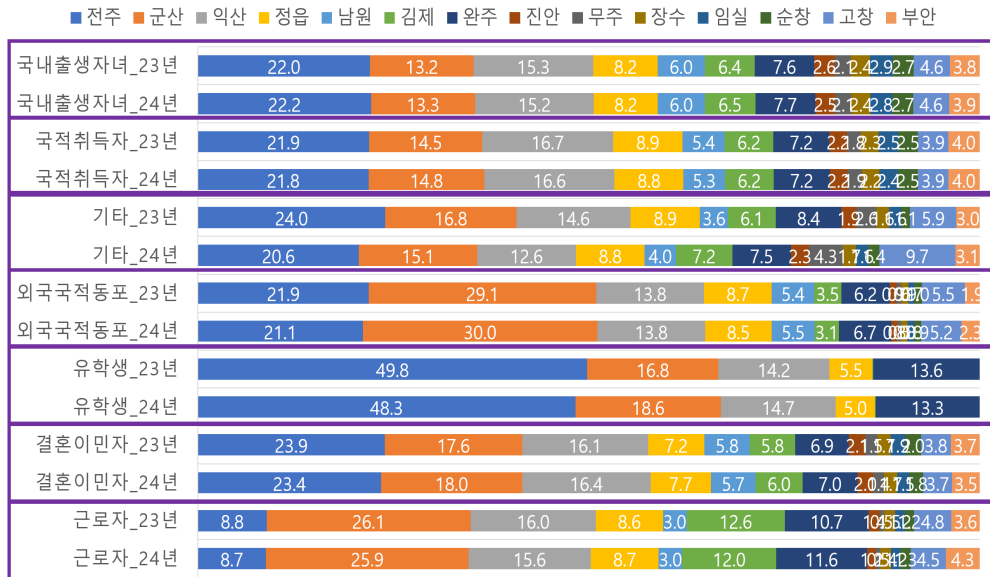


[그림 2-16] 전북 외국인주민의 시군별 분포 추이

나. 시군별 외국인인구 특성별 현황 및 최근 변화

■ 시군별 유형별·체류자격별 분포

- '23.11월 대비 '24.11월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유형 분포를 비교해 보면, 결혼이민자·외국국적동포·국적 취득자·국내 출생 자녀는 변동이 거의 없는 반면, 외국인근로자·유학생은 약간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전주·군산·익산 등 주요 3대 도시에서 다소 감소한 반면 부안·정읍·완주·순창에서 증가하였고, 유학생의 경우는 전주에서 약간 감소한 반면 군산·익산에서 소폭 증가함



자료 : 행정안전부(각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그림 2-17] 시군별 외국인주민 유형별 분포 변화

- 최근 외국인주민 유형 분포를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주시는 유학생, 군산시·정읍시·김제시·완주군은 외국인근로자,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은 국내 출생 자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창군·부안군은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출생 자녀가 모두 높은 양상을 보임

- 특히 전북 외국인근로자의 65.1%가 군산시·익산시·김제시·완주군에, 결혼이민자(57.8%)·유학생(81.6%)·외국국적동포(64.9%)·국적 취득자(53.2%)·국내 출생 자녀(50.7%)의 과반이 전주시·군산시·익산시에 거주함

- 그중에서도 유학생은 무려 48.3%가 전주시에 밀집함

[표 2-18] 시군별 외국인주민 유형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국적 미취득						국적취득		
	소계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소계	국적 취득자	국내 출생 자녀
전북도	57,688	14,956	5,936	10,198	2,768	23,830	21,536	7,540	13,99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주	13,115	1,307(7.3)	1,389(7.8)	4,924(27.6)	585(3.3)	4,910(27.5)	4,749	1,645(9.2)	3,104(17.4)
	22.7	8.7	23.4	48.3	21.1	20.6	22.1	21.8	22.2
군산	11,277	3,881(27.2)	1,071(7.5)	1,894(13.3)	830(5.8)	3,601(25.3)	2,980	1,113(7.8)	1,867(13.1)
	19.5	25.9	18.0	18.6	30.0	15.1	13.8	14.8	13.3
익산	8,189	2,337(20.2)	975(8.4)	1,495(12.9)	381(3.3)	3,001(25.9)	3,383	1,255(10.8)	2,128(18.4)
	14.2	15.6	16.4	14.7	13.8	12.6	15.7	16.6	15.2
정읍	4,584	1,296(20.3)	457(7.1)	505(7.9)	234(3.7)	2,092(32.7)	1,814	666(10.4)	1,148(17.9)
	7.9	8.7	7.7	5.0	8.5	8.8	8.4	8.8	8.2
남원	1,895	446(14.2)	341(10.9)	3(0.1)	153(4.9)	952(30.4)	1,239	400(12.8)	839(26.8)
	3.3	3.0	5.7	0.0	5.5	4.0	5.8	5.3	6.0
김제	3,984	1,797(33.5)	359(6.7)	15(0.3)	86(1.6)	1,727(32.2)	1,377	464(8.7)	913(17.0)
	6.9	12.0	6.0	0.1	3.1	7.2	6.4	6.2	6.5
완주	5,489	1,742(24.5)	417(5.9)	1,359(19.1)	185(2.6)	1,786(25.1)	1,616	544(7.7)	1,072(15.1)
	9.5	11.6	7.0	13.3	6.7	7.5	7.5	7.2	7.7
진안	879	180(12.9)	117(8.4)	1(0.1)	22(1.6)	559(40.2)	513	167(12.0)	346(24.9)
	1.5	1.2	2.0	0.0	0.8	2.3	2.4	2.2	2.5
무주	1,204	74(4.5)	85(5.2)	0(0.0)	14(0.9)	1,031(62.8)	439	144(8.8)	295(18.0)
	2.1	0.5	1.4	0.0	0.5	4.3	2.0	1.9	2.1
장수	727	202(16.4)	98(8.0)	0(0.0)	21(1.7)	406(33.0)	504	169(13.7)	335(27.2)
	1.3	1.4	1.7	0.0	0.8	1.7	2.3	2.2	2.4
임실	685	186(14.7)	92(7.3)	0(0.0)	23(1.8)	384(30.4)	579	184(14.6)	395(31.3)
	1.2	1.2	1.5	0.0	0.8	1.6	2.7	2.4	2.8
순창	645	190(15.7)	105(8.7)	0(0.0)	24(2.0)	326(27.0)	562	189(15.7)	373(30.9)
	1.1	1.3	1.8	0.0	0.9	1.4	2.6	2.5	2.7
고창	3,343	669(15.6)	220(5.1)	1(0.0)	145(3.4)	2,308(54.0)	935	296(6.9)	639(14.9)
	5.8	4.5	3.7	0.0	5.2	9.7	4.3	3.9	4.6
부안	1,672	649(25.8)	210(8.3)	1(0.0)	65(2.6)	747(29.7)	846	304(12.1)	542(21.5)
	2.9	4.3	3.5	0.0	2.3	3.1	3.9	4.0	3.9

자료 : 행정안전부(2025),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25.12월 기준 체류자격별 시군 분포를 보면, D계열(유학·연수·구직 등)은 전주·군산·익산·완주, 특정활동은 군산, 계절근로는 고창, 비전문취업은 군산·익산·김제·완주·정읍, F계열(거주·영주·결혼이민·외국국적동포 등)은 전주·군산, 지역특화형은 김제에 많이 체류함

- 특히 전주(50.1%)·완주(41.7%)는 지역 체류 외국인의 다수가 유학·연수 자격이고, 고창(37.4%)·무주(32.8%)·진안(35.6%)은 계절근로 자격, 그 외 9개 시군-특히 부안(44.8%)·김제(42.0%)·장수(38.1%)·임실(37.9%)은 비전문취업 자격의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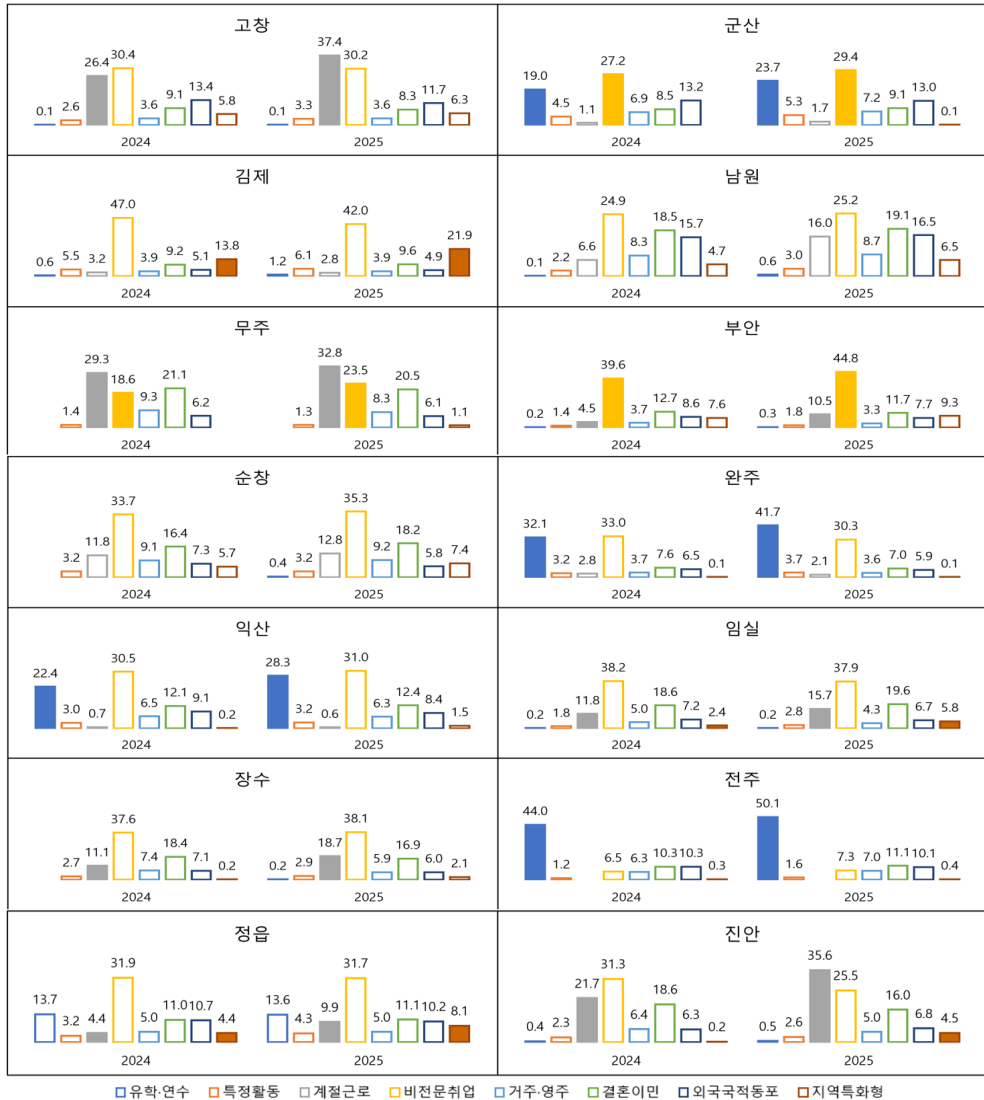
[표 2-19] 전북 시군별 등록·거소 외국인 체류자격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전주	정읍	진안
전체	2,081 (100.0)	10,307 (100.0)	3,564 (100.0)	1,543 (100.0)	375 (100.0)	1,492 (100.0)	499 (100.0)	5,334 (100.0)	7,268 (100.0)	464 (100.0)	514 (100.0)	11,233 (100.0)	3,783 (100.0)	620 (100.0)
유학·연수 (D2~D4)	2 (0.1)	2,438 (23.7)	42 (1.2)	9 (0.6)	0 (0.0)	5 (0.3)	2 (0.4)	2,224 (41.7)	2,059 (28.3)	1 (0.2)	1 (0.2)	5,633 (50.1)	516 (13.6)	3 (0.5)
구직 (D-10)	0 (0.0)	208 (2.0)	17 (0.5)	4 (0.3)	0 (0.0)	4 (0.3)	0 (0.0)	71 (1.3)	99 (1.4)	0 (0.0)	2 (0.4)	541 (4.8)	66 (1.7)	0 (0.0)
기타 D계열	2 (0.1)	117 (1.1)	3 (0.1)	2 (0.1)	0 (0.0)	3 (0.2)	0 (0.0)	5 (0.1)	25 (0.3)	0 (0.0)	0 (0.0)	63 (0.6)	10 (0.3)	5 (0.8)
특정활동 (E-7)	68 (3.3)	545 (5.3)	216 (6.1)	46 (3.0)	5 (1.3)	27 (1.8)	16 (3.2)	196 (3.7)	232 (3.2)	13 (2.8)	15 (2.9)	176 (1.6)	161 (4.3)	16 (2.6)
계절근로 (E-8)	779 (37.4)	179 (1.7)	99 (2.8)	247 (16.0)	123 (32.8)	157 (10.5)	64 (12.8)	113 (2.1)	45 (0.6)	73 (15.7)	96 (18.7)	2 (0.0)	376 (9.9)	221 (35.6)
비전문취업 (E-9)	629 (30.2)	3,035 (29.4)	1,497 (42.0)	389 (25.2)	88 (23.5)	668 (44.8)	176 (35.3)	1,616 (30.3)	2,252 (31.0)	176 (37.9)	196 (38.1)	824 (7.3)	1,198 (31.7)	158 (25.5)
기타 E계열	11 (0.5)	395 (3.8)	12 (0.3)	15 (1.0)	5 (1.3)	79 (5.3)	6 (1.2)	27 (0.5)	73 (1.0)	3 (0.6)	4 (0.8)	315 (2.8)	21 (0.6)	8 (1.3)
거주 (F-2)	16 (0.8)	158 (1.5)	32 (0.9)	21 (1.4)	6 (1.6)	4 (0.3)	8 (1.6)	66 (1.2)	79 (1.1)	4 (0.9)	6 (1.2)	220 (2.0)	34 (0.9)	3 (0.5)
영주 (F-5)	59 (2.8)	583 (5.7)	106 (3.0)	112 (7.3)	25 (6.7)	45 (3.0)	38 (7.6)	128 (2.4)	381 (5.2)	16 (3.4)	24 (4.7)	557 (5.0)	155 (4.1)	28 (4.5)
결혼이민 (F-6)	173 (8.3)	934 (9.1)	342 (9.6)	294 (19.1)	77 (20.5)	174 (11.7)	91 (18.2)	376 (7.0)	898 (12.4)	91 (19.6)	87 (16.9)	1,250 (11.1)	419 (11.1)	99 (16.0)
외국국적동포 (F-4, H-2)	243 (11.7)	1,335 (13.0)	173 (4.9)	254 (16.5)	23 (6.1)	115 (7.7)	29 (5.8)	313 (5.9)	614 (8.4)	31 (6.7)	31 (6.0)	1,140 (10.1)	387 (10.2)	42 (6.8)
기타 F계열	122 (5.9)	720 (7.0)	263 (7.4)	173 (11.2)	36 (9.6)	112 (7.5)	57 (11.4)	355 (6.7)	600 (8.3)	57 (12.3)	59 (11.5)	1,090 (9.7)	296 (7.8)	46 (7.4)
지역특화형 (본인+가족)	132 (6.3)	10 (0.1)	781 (21.9)	101 (6.5)	4 (1.1)	139 (9.3)	37 (7.4)	5 (0.1)	108 (1.5)	27 (5.8)	11 (2.1)	50 (0.4)	307 (8.1)	28 (4.5)
G계열 +기타	49 (2.4)	836 (8.1)	141 (4.0)	90 (5.8)	5 (1.3)	58 (3.9)	3 (0.6)	104 (1.9)	355 (4.9)	3 (0.6)	12 (2.3)	420 (3.7)	164 (4.3)	5 (0.8)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6),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12월말 기준,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12월말 기준)

- '24년 대비 '25년, 유학·연수 자격은 전주·완주·익산·군산, 비전문취업 자격은 군산·무주·부안, 계절근로 자격은 고창·무주·부안·임실·장수·정읍·진안, 지역특화형 자격은 김제·정읍·진안 지역에서 주로 비중이 증가함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각년도),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12월말 기준), 외국국적동포 거주신고 현황(12월말 기준)

[그림 2-18] 시군별 등록·거소 외국인 주요 체류자격별 분포 변화

■ 시군별 주요 국적별 분포

- '24.11월 기준, 전북 외국인주민은 모든 시군에서 베트남 국적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전주시·군산시·완주군 등 3개 시군은 중국과 태국, 정읍시·김제시·무주군·임실군·순창군·부안군 등 6개 시군은 태국과 네팔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주시는 몽골, 완주군은 우즈베키스탄, 진안군은 필리핀, 무주군은 라오스, 순창군은 일본, 고창군은 스리랑카 국적이 상위 5개국에 포함되는 점이 특징적임
- 각 시군에서 상위 5개국의 비중은 66.8~92.0%로 높은 편인데, 특히 무주군(92.0%)·진안군(83.8%)·임실군(83.6%)·고창군(79.9%)·장수군(79.7%) 등이 국적 편중도가 높은 양상임
 - 특히 무주군은 베트남 국적의 비중이 66.9%에 달함

[표 2-20] 시군별 외국인주민 주요 국적별 분포

(단위 : 명, %)

시군	전체	1위	2위	3위	4위	5위	1~5위 비중
전주	13,115	베트남 28.8	중국 16.2	태국 11.3	몽골 7.4	중국(한국계) 4.9	68.6
군산	11,277	베트남 24.8	중국 14.3	태국 10.5	중국(한국계) 10.0	인도네시아 8.5	68.1
익산	8,189	베트남 30.0	태국 16.0	캄보디아 9.8	중국 7.4	네팔 5.1	68.3
정읍	4,584	베트남 37.7	태국 17.5	네팔 9.5	중국(한국계) 7.4	캄보디아 4.8	76.9
남원	1,895	베트남 27.7	태국 13.8	중국(한국계) 10.9	네팔 8.5	캄보디아 7.5	68.4
김제	3,984	베트남 22.3	태국 16.4	네팔 12.8	캄보디아 9.5	필리핀 5.8	66.8
완주	5,489	베트남 20.3	중국 15.0	태국 14.5	우즈베키스탄 10.5	캄보디아 9.0	69.3
진안	879	베트남 33.7	필리핀 24.0	태국 13.9	네팔 8.4	캄보디아 3.8	83.8
무주	1,204	베트남 66.9	태국 9.6	네팔 7.1	필리핀 6.2	라오스 2.2	92.0
장수	727	베트남 40.9	태국 15.0	캄보디아 10.3	네팔 9.8	중국(한국계) 3.7	79.7
임실	685	베트남 39.3	태국 20.3	네팔 9.9	캄보디아 9.3	중국 4.8	83.6
순창	645	베트남 31.9	태국 13.2	네팔 11.6	캄보디아 9.8	일본 5.4	71.9
고창	3,343	베트남 31.1	캄보디아 18.7	태국 15.3	네팔 10.2	스리랑카 4.6	79.9
부안	1,672	베트남 39.8	태국 14.5	네팔 7.1	중국(한국계) 4.6	중국 3.8	69.8

주 : 한국 국적자(국적 취득자, 국내 출생 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 행정안전부(2025),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23.11월 대비 '24.11월 주요 국적 비중 변동이 시군별로 각기 다르게 관찰됨
- 베트남 국적 비중의 증가 추세는 고창·무주·장수·부안·순창·정읍·김제 등에서 특히 뚜렷함
- 익산·무주·고창은 중국(한국계), 김제·완주·고창은 태국, 정읍은 중국, 부안은 캄보디아 국적 비중이 각각 감소함
- 한편, 진안은 필리핀, 고창은 스리랑카와 캄보디아, 부안은 중국, 정읍은 캄보디아 국적 비중이 증가함



자료 : 행정안전부(각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그림 2-19] 시군별 외국인주민 주요 국적별 분포 변화

- 한편, '25.12월 기준 등록·거소 외국인은 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베트남 국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익산·김제·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대다수 시군에서 공통되게 네팔과 캄보디아 국적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 외에 전주·군산·완주·익산에서 중국 국적 비중이 높은 점도 확인됨

- 전주는 몽골, 군산은 인도네시아, 정읍은 미얀마, 남원은 라오스, 김제는 방글라데시·미얀마, 진안·무주는 필리핀, 순창은 일본, 고창은 스리랑카 국적이 상위 5개국에 포함되는 점이 특징적임

- 국적 편중도는 무주군(78.6%), 진안군(77.6%), 임실군(77.2%), 장수군(75.7%)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21] 시군별 등록·거소 외국인 주요 국적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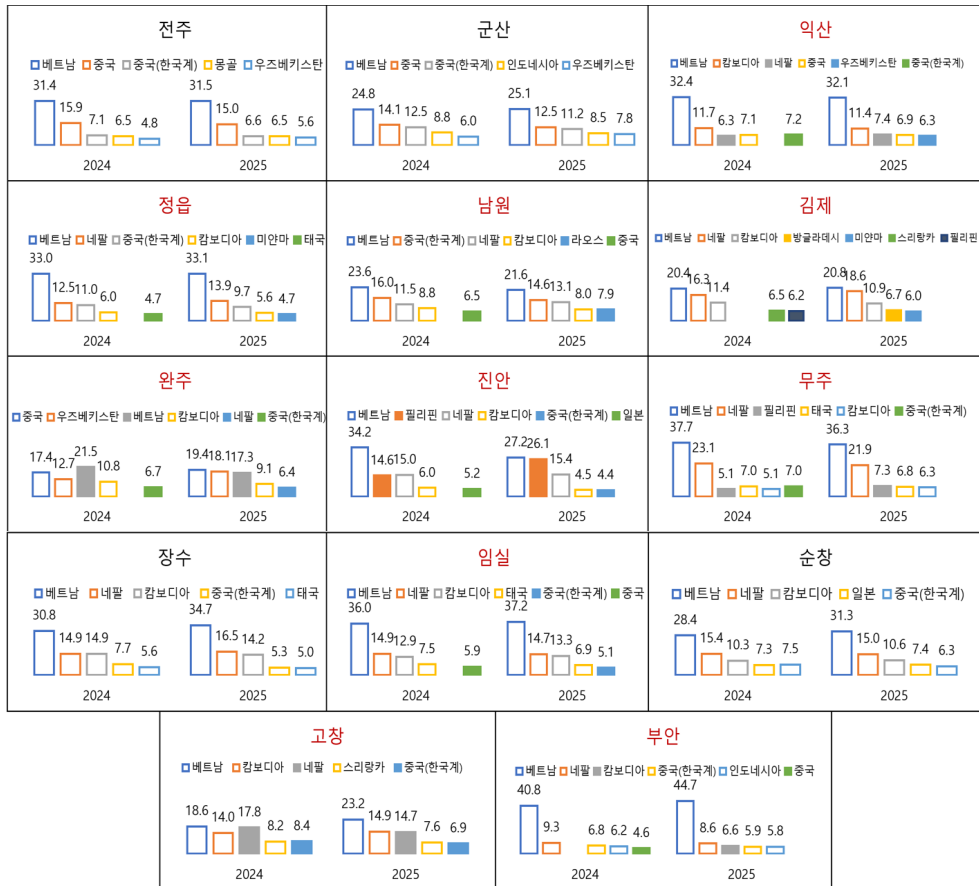
(단위 : 명, %)

시군	전체	1위	2위	3위	4위	5위	1~5위 비중
전주	12,281	베트남 31.5	중국 15.0	중국(한국계) 6.6	몽골 6.5	우즈베키스탄 5.6	65.2
군산	11,493	베트남 25.1	중국 12.5	중국(한국계) 11.2	인도네시아 8.5	우즈베키스탄 7.8	65.1
익산	7,820	베트남 32.1	캄보디아 11.4	네팔 7.4	중국 6.9	우즈베키스탄 6.3	64.1
정읍	4,110	베트남 33.1	네팔 13.9	중국(한국계) 9.7	캄보디아 5.6	미얀마 4.7	67.0
남원	1,757	베트남 21.6	중국(한국계) 14.6	네팔 13.1	캄보디아 8.0	라오스 7.9	65.2
김제	3,724	베트남 20.8	네팔 18.6	캄보디아 10.9	방글라데시 6.7	미얀마 6.0	63.0
완주	5,599	중국 19.4	우즈베키스탄 18.1	베트남 17.3	캄보디아 9.1	네팔 6.4	70.3
진안	662	베트남 27.2	필리핀 26.1	네팔 15.4	캄보디아 4.5	중국(한국계) 4.4	77.6
무주	397	베트남 36.3	네팔 21.9	필리핀 7.3	태국 6.8	캄보디아 6.3	78.6
장수	544	베트남 34.7	네팔 16.5	캄보디아 14.2	중국(한국계) 5.3	태국 5.0	75.7
임실	495	베트남 37.2	네팔 14.7	캄보디아 13.3	태국 6.9	중국(한국계) 5.1	77.2
순창	527	베트남 31.3	네팔 15.0	캄보디아 10.6	일본 7.4	중국(한국계) 6.3	70.6
고창	2,285	베트남 23.2	캄보디아 14.9	네팔 14.7	스리랑카 7.6	중국(한국계) 6.9	67.3
부안	1,590	베트남 44.7	네팔 8.6	캄보디아 6.6	중국(한국계) 5.9	인도네시아 5.8	71.6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6), 지역별 외국인(등록+거소) 현황

- 최근 이러한 시군별 주요 국적 비중의 변동('24.12월 대비 '25.12월)이 대다수 시군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김제·익산·완주·부안·진안 등에서의 변화가 상당한 편임
- 네팔·우즈베키스탄 국적 비중은 익산·완주, 중국(한국계)은 진안·임실, 미얀마는 정읍·김제, 라오스는 남원, 방글라데시는 김제, 필리핀은 진안·무주, 캄보디아는 부안에서 각각 증가함

- 이와 대조적으로, 네팔 국적 비중은 고창, 중국(한국계)은 익산·완주·무주·고창, 태국은 정읍, 중국은 남원·임실·부안, 스리랑카·필리핀은 김제, 일본은 진안에서 각각 감소함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각년도), 지역별 외국인(등록+거소) 현황

[그림 2-20] 시군별 등록·거소 외국인 주요 국적별 분포 변화

■ 시군별 연령대별 분포

- 전북 외국인주민의 경우, '24.11월 기준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등 4개 시군은 10대 이하, 전주시·군산시·익산시·완주군 등 4개 시군은 20대, 정읍시·김제시·진안군·무주군·고창군·부안군 등 6개 시군은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와 유사하게, 전북 등록·거소 외국인도 '25.12월 기준 전주시·군산시·익산시·완주군 등 4개 시군은 20대, 그 외 시군은 3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각 시군 외국인인구의 연령대별 비중 추이는 최근 들어 큰 변동을 보이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대표 연령대가 30~40대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외국인주민) '23.11월 대비 '24.11월, 진안·무주·고창·부안 등 4개 시군에서 10대 이하의 비중이 감소하고, 30대의 비중이 증가함. 정읍에서도 30대의 비중이 다소 증가함
 - (등록·거소 외국인) '24.12월 대비 '25.12월, 정읍·장수·고창 등에서 30~40대의 비중이 증가함

[표 2-22] 시군별 외국인주민·자녀 연령대별 분포 변화

(단위 : 명, %)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2023	전체	16,198 (100.0)	12,419 (100.0)	10,101 (100.0)	5,391 (100.0)	2,507 (100.0)	4,322 (100.0)	6,199 (100.0)	1,100 (100.0)	1,015 (100.0)	1,008 (100.0)	1,028 (100.0)	932 (100.0)	2,913 (100.0)	1,921 (100.0)
	19세 이하	25.5	19.5	25.5	24.7	36.2	22.4	19.9	34.5	29.9	35.5	39.4	42.1	23.9	30.0
	20~29세	35.7	26.5	29.5	26.1	15.9	23.7	35.9	15.3	11.8	17.1	15.6	14.7	18.6	17.8
	30~39세	18.3	27.7	22.1	25.9	20.1	32.7	24.3	27.8	27.4	23.8	23.9	21.5	32.7	27.8
	40~49세	9.7	12.9	11.2	11.6	12.7	12.7	10.4	12.2	20.6	10.9	11.6	8.3	13.8	12.5
	50~59세	7.1	8.2	7.2	6.8	9.8	5.9	6.7	6.5	7.6	7.7	6.7	8.9	6.0	7.7
	60세 이상	3.7	5.1	4.4	4.9	5.3	2.7	2.8	3.7	2.8	5.0	2.8	4.6	5.0	4.1
2024	전체	16,291 (100.0)	13,228 (100.0)	10,394 (100.0)	5,772 (100.0)	2,749 (100.0)	4,919 (100.0)	6,602 (100.0)	1,242 (100.0)	1,504 (100.0)	1,069 (100.0)	1,083 (100.0)	1,022 (100.0)	4,006 (100.0)	2,232 (100.0)
	19세 이하	25.9	19.2	24.5	23.2	33.1	21.4	20.4	30.0	20.5	33.4	37.2	38.2	17.7	26.6
	20~29세	36.1	27.9	30.4	24.5	16.9	24.8	35.1	14.0	13.3	18.3	15.7	14.8	16.6	18.9
	30~39세	18.3	27.3	22.7	27.7	21.9	33.4	25.1	33.3	32.6	24.5	24.7	25.0	38.6	30.3
	40~49세	9.3	12.5	11.3	13.0	13.4	12.9	9.9	14.2	25.0	12.4	12.3	10.2	19.0	12.9
	50~59세	6.6	7.9	6.6	6.8	9.4	5.0	6.4	5.6	6.8	7.2	6.6	7.3	4.6	6.8
	60세 이상	3.8	5.2	4.5	4.7	5.3	2.5	3.0	2.9	1.7	4.1	3.5	4.6	3.5	4.4

주 : 외국인주민 자녀(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국내출생) 포함
 자료 : 행정안전부(각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표 2-23] 시군별 등록·거소 외국인 연령대별 분포 변화

(단위 : 명, %)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2024	전체	11,613 (100.0)	10,644 (100.0)	6,956 (100.0)	3,623 (100.0)	1,523 (100.0)	3,449 (100.0)	4,712 (100.0)	521 (100.0)	355 (100.0)	479 (100.0)	456 (100.0)	507 (100.0)	1,920 (100.0)	1,332 (100.0)
	19세 이하	8.7	6.1	5.0	3.9	4.2	4.0	5.5	1.5	0.8	2.7	0.9	2.8	3.0	2.6
	20~29세	48.8	34.0	43.0	34.5	24.0	32.1	47.4	25.1	18.6	29.4	27.6	24.7	20.6	26.7
	30~39세	19.5	30.2	25.3	31.7	28.0	41.0	28.4	40.5	30.4	31.3	36.2	38.3	42.2	39.3
	40~49세	8.1	12.1	10.6	12.8	16.7	12.2	8.3	14.0	29.3	15.9	15.1	12.6	17.6	13.8
	50~59세	7.4	8.9	8.2	8.4	14.9	5.6	5.9	10.4	12.4	10.2	11.6	11.0	7.2	8.6
	60세 이상	7.4	8.7	7.8	8.6	12.1	5.2	4.6	8.4	8.5	10.4	8.6	10.7	9.4	8.9
2025	전체	12,281 (100.0)	11,493 (100.0)	7,820 (100.0)	4,110 (100.0)	1,757 (100.0)	3,724 (100.0)	5,599 (100.0)	662 (100.0)	397 (100.0)	662 (100.0)	495 (100.0)	527 (100.0)	2,285 (100.0)	1,590 (100.0)
	19세 이하	10.2	7.2	6.5	5.1	3.6	5.4	5.6	1.5	1.8	2.4	1.0	4.2	2.7	2.5
	20~29세	49.0	34.6	43.8	31.7	24.1	30.6	51.2	20.5	21.4	30.9	26.9	26.9	19.6	28.5
	30~39세	19.9	29.4	25.8	35.0	32.0	41.7	27.2	45.6	32.7	31.4	38.4	34.9	44.4	41.3
	40~49세	7.7	12.4	10.1	13.4	15.8	13.3	7.3	16.9	25.9	19.5	15.4	13.9	19.3	14.0
	50~59세	6.6	7.9	6.8	7.3	13.2	4.3	4.6	7.6	11.3	8.1	10.7	10.2	6.1	6.6
	60세 이상	6.7	8.5	7.0	7.5	11.2	4.6	4.1	7.9	6.8	7.7	7.7	9.9	7.8	7.0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각년도),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12월말 기준),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12월말 기준)

■ 시군별 체류기간별 분포

- '24.11월 기준,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의 체류기간별 분포는 대체로 3년 미만과 5년 이상의 비중이 높고, 3~5년 미만의 비중이 낮은 U자형 형태를 띠
- 구체적으로,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 등 7개 시군은 1년 미만, 전주시·군산시·익산시·김제시·부안군 등 5개 시군은 1~3년 미만, 정읍시·완주군 등 2개 시군은 5~10년 미만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무주군(68.7%)·고창군(51.0%)·진안군(45.6%)은 1년 미만의 체류자 비중이 매우 높음
- '23.11월 당시와 비교해 보면, 익산시·군산시에서 5~10년 미만 비중이 줄고 1~3년 미만 비중이 늘어나는 등 대다수 시군에서 3년 미만의 체류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이는 신규 유입 확대와 정주 전환의 상대적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표 2-24] 시군별 외국인주민 체류기간별 분포 변화

(단위 : 명, %)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2023	전체	13,079 (100.0)	10,510 (100.0)	7,921 (100.0)	4,218 (100.0)	1,655 (100.0)	3,413 (100.0)	5,095 (100.0)	729 (100.0)	718 (100.0)	662 (100.0)	627 (100.0)	548 (100.0)	2,251 (100.0)	1,373 (100.0)
	1년미만	21.8	24.5	23.5	23.4	25.0	25.5	23.1	39.9	54.7	37.7	38.0	21.7	38.1	26.1
	1~3년미만	24.4	22.1	21.6	16.5	16.6	21.8	21.7	16.9	16.9	17.2	19.5	19.5	23.0	20.8
	3~5년미만	19.6	16.1	14.9	20.6	15.2	16.0	16.7	11.8	7.8	12.5	12.1	15.5	11.4	16.6
	5~10년미만	24.2	24.8	28.1	28.0	24.8	26.6	31.0	19.2	10.3	20.4	19.1	25.5	18.5	26.6
	10년이상	10.0	12.6	12.0	11.5	18.4	10.1	7.5	12.2	10.3	12.5	11.3	17.7	9.1	9.9
2024	전체	13,115 (100.0)	11,277 (100.0)	8,189 (100.0)	4,584 (100.0)	1,895 (100.0)	3,984 (100.0)	5,489 (100.0)	879 (100.0)	1,204 (100.0)	727 (100.0)	685 (100.0)	645 (100.0)	3,343 (100.0)	1,672 (100.0)
	1년미만	18.3	20.9	17.5	21.8	27.4	23.3	23.2	45.6	68.7	36.5	36.2	32.6	51.0	28.7
	1~3년미만	30.9	32.3	33.9	28.4	25.4	32.5	29.4	24.3	16.2	27.9	29.3	24.5	24.9	31.7
	3~5년미만	11.8	7.6	6.1	6.1	6.6	5.4	7.1	2.8	1.6	4.3	5.5	4.8	3.4	5.0
	5~10년미만	27.8	25.4	29.5	31.7	23.4	28.6	32.2	16.3	6.8	19.9	16.9	21.7	13.9	24.6
	10년이상	11.3	13.7	13.0	12.0	17.2	10.1	8.2	10.9	6.7	11.4	12.0	16.4	6.9	9.9

주 : 국적 취득자와 국내 출생 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 행정안전부(각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3) 전북 외국인인구 전입·전출 현황

- '25년 기준, 전북지역으로 전입한 외국인은 9,388명, 전출한 외국인은 9,781명으로 집계됨. 전입 규모가 도(道) 단위에서 제주·강원과 더불어 하위권에 해당함
- 그 결과, 총 393명의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며, 그 규모는 서울(2,439명)·경기(1,890명)·제주(802명)·부산(590명)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큰 수준임. 특히 전북과 대전은 모든 체류자격에서 순유출이 나타나 대응 방안 마련이 촉구됨
 - 전북을 포함하여 강원·대전·전남·부산·제주·경기·서울 등 7개 시도에서 순유출이 발생함
 - 서울·경기는 순유출의 절대 규모는 크지만, 경기의 경우 재외동포·영주·결혼이민 등 정착·정주 유형의 전입 규모가 크고, 서울은 지역 정착 가능성이 높은 유학생의 전입 규모가 커, 전북과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됨
 - 전북의 경우, 유학(224명)·영주(61명)·재외동포(41명) 순으로 도외 지역으로의 순유출 규모가 큼
 - 유학생은 서울, 영주·결혼이민자는 경기·인천, 재외동포는 인천·경기·충남으로 순유입되는 경향을 보임

[표 2-25] 지역별 외국인 순이동 현황

시도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주요 체류자격					
				재외동포 (F-4)	비전문취업 (E-9)	유학 (D-2)	영주 (F-5)	결혼이민 (F-6)	그 외 체류자격
인천	26,459	22,689	3,770	2,046	-483	146	687	427	947
경북	17,557	16,675	882	79	625	-531	-50	3	756
경남	22,093	21,311	782	-77	569	255	-57	65	27
충남	26,670	26,134	536	307	786	-757	35	49	116
대구	7,440	7,163	289	-54	232	8	-45	-22	170
충북	15,307	15,076	231	15	735	-739	13	59	148
세종	1,387	1,228	159	-17	163	18	10	0	-15
광주	6,810	6,773	133	-119	-7	286	-11	-47	31
울산	6,725	6,677	108	-140	212	22	-44	-2	60
강원	6,584	6,617	-189	65	-138	-105	8	-16	-3
대전	6,886	7,151	-277	-11	-46	-126	-16	-18	-60
전남	10,318	10,628	-310	27	75	-438	-9	28	7
전북	9,388	9,781	-393	-41	-1	-224	-61	-12	-54
부산	13,188	13,778	-590	68	161	-389	-9	-58	-363
제주	3,584	4,386	-802	21	-494	-41	-27	-62	-199
경기	118,094	119,984	-1,890	798	-2,736	-205	793	251	-791
서울	78,481	80,920	-2,439	-2,967	347	2,820	-1,217	-645	-777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6),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2025년)

나. 전북 내·외국인 사회통합 현황³⁾

- 전북의 외국인 사회통합지수(68.5점)는 전국 평균(64.9점)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통합 기반’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 반면, ‘통합 촉진’과 ‘통합 상태’는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됨
- (통합 기반) 행정서비스(출입국 행정·일반 민원 행정·이주민 지원기관·다국어 통번역 등) 이용 경험률·편리성·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측정한 행정 인프라 관련 ‘통합 기반’은 72.2점으로, 전국 평균(64.4점)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다만, 법/제도(외국인·이민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통합 촉진) 이민자 수용성·의사소통·한국사회와의 연계·디지털 시민역량·안전 등을 기준으로 측정한 ‘통합 촉진’은 53.0점으로, 전국 평균(55.0점) 대비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특히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율과 의사소통 역량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내·외국인 간 관계 형성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의사소통) 외국인·이민정책 수요 또한 ‘이주민 한국어교육 사업’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이민자 수용성·한국사회와의 연계) 일례로, 친분이 두터운 한국인이 없다는 응답이 23.2%로 나타나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한계가 확인되었으며, 장기체류 외국인 규모에 대해서는 ‘현 상태 유지(35.3%)’와 ‘축소 필요(30.5%)’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내국인의 수용성 제고 필요성이 확인됨
- (통합 상태) 노동(고용률·상용근로자 비율 등)·소득·교육·주거 및 생활·의료 및 복지·참여 및 권리·한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기준으로 측정한 ‘통합 상태’는 75.2점으로, 전국 평균(75.5점)과 유사한 수준이나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고용률과 월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교육·훈련 경험률 또한 낮게 나타남. 아울러 한국사회 기여도 역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노동·소득) F계열 외국인(동포, 정주형 체류자격)과 국적 취득자 중 만 65세 미만의 고용률은 56.1%로, 내국인 고용률(63.5%)보다 7.4%p 낮았음. 또한, 1인당 월평균 소득은 184.8

3)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 및 정책컨설팅」(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을 바탕으로 작성함

만원으로, 전국 외국인 평균(229만원)보다 44.2만원 낮았음

- (교육) 자녀의 공교육 재학률 및 학교생활 적응 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본인의 최근 1년간 교육·훈련 경험률은 8.1%로 낮게 나타남
- (한국사회 기여도) 기부·봉사활동 참여 경험률(17.8%), 세금 성실 납부율(53.1%, 전국 평균 70.0%), 세금 납부 의무 인지율(52.4%)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2-26] 전국 및 전북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단위 : 점)

차원	차원별 점수		사회통합지수	
	전북	전국	전북	전국
통합 기반	72.2	64.4	68.5	64.9
통합 촉진	53.0	55.0		
통합 상태	75.2	75.5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4):1066

다. 전북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현황

■ 조례 현황

- 현재('26.3월) 외국인지원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조례는 총 11개임
 - 이 중 4건(「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은 외국인주민·고려인 주민·재외동포·국적취득 지원자의 지역사회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임
 - 그 외 2건(「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은 외국인 노동자·계절근로자, 1건(「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은 외국인 유학생, 4건(「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함

-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 일부 조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최근 1~3년 이내에 제정되는 등 외국인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적극적으로 확충되고 있음

[표 2-27] 전북자치도 외국인지원 관련 조례

조례	제·개정일	목적	주요 지원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23.3.31. 제정 '25.3.7. 개정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정착	한국어·기초 생활 적응 교육, 생활법률취급 상담 생활 편의응급 구조, 문화·체육행사, 보육·교육, 쉼터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21.4.9. 제정 '23.12.8. 개정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통한 권익증진·생활안정	실태조사, 취업·창업 지원, 교육·홍보, 언어지원, 자치모임·지원단체 지원, 주거·환경 개선, 자녀돌봄·보육, 문화·체육행사, 보건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25.12.12. 제정	재외동포의 지역사회 적응·정착	환경개선, 한국어·기초 생활 적응 교육, 통·번역, 교육·홍보, 보건의료 지원, 문화·체육행사, 자조모임·지원단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24.11.1. 제정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	노동조건·근무환경 개선 사업, 보호·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지원센터 설치·운영
전북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	'23.12.8. 제정 '24.5.31. 개정	국적취득 지원자의 안정적 지역생활 정착	국적 취득비용 지원, 자조활동 지원, 교육 관련 사업(강사 양성·지원 등)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6.8.12. 제정 '23.12.8. 개정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안정적 가족생활 영위·사회적응	교육·홍보, 문화·체육행사,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일자리 연계, 가족상담, 보육·교육, 의료서비스 지원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15.5.8. 제정 '25.11.14. 개정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질 향상·사회통합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교육지원 사업, 공통교육 보육과정 운영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6.2.27. 제정	다문화가족 학생의 언어능력·자긍심 향상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이중언어 교육 동아리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4.11.1. 제정	가족지원서비스 통합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사업 수행 등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2.10.21. 제정 '23.12.8. 개정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생활 적응 교육, 장학금 지원, 주거 지원, 문화·체육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법률·의료·심리상담 등 통역·교육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25.10.10. 제정	농어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	실태조사 등 지원계획 수립·시행

자료 :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s://www.law.go.kr/>)

■ 조직 및 인력 현황

- (전북도)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 전반은 대외소통국 내 외국인국제정책과('24.7월 신설)의 외국인국제정책팀과 외국인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 (외국인국제정책팀)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수립, 광역형 비자 사업, 외국인 출입국 특례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함. 팀장 1인 및 주무관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해당 업무를 주로 전담하는 인력(주무관)은 1명으로 확인됨
- (외국인지원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운영·관리, 외국인노동자 쉼터 관리,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관리, 지역특화형 비자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며, 팀장 1인 및 주무관 2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편, 유학생 관련 업무는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 대학협력팀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는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에서,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는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생명정책과 여성청년농업인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음

대외소통국					
외국인국제정책과					
외국인국제정책팀		외국인지원팀		국제협력팀	
팀장	외국인국제정책 업무 총괄	팀장	외국인지원 업무 총괄	팀장	국제협력팀 업무 총괄
주무관	중국사무소 운영지원, 해외파견자 선발, 장기국외훈련자 선발, 과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대응, 과 주요 현안 업무 대응, 과 소관 도의회 대응, 조직관리 및 인사 포상 등, 성과관리 업무	주무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운영관리, 재외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외국인 노동자 쉼터 관리, 외국인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 외국인 지원 법안단체 관리 및 지원, 외국인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유공자 표창(공무원, 민간인), 선택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관리,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관리,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인 주민 지원 조례 관리, 전북특별자치도 파독 광부·간호사 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 관리,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지원 위원회 운영, 국회도의회 요구자료/업무보고/성과관리 업무	주무관	국제교류기본계획 수립, 국제교류자문관 운영관리, 국제관계대사 운영관리, 공공외교 추진
주무관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수립, 법무부 외국인 및 이민정책, 광역형 비자 사업, 외국인 출입국 특례 관련, 청원 글로벌 벤치마킹	주무관	지역특화형 비자 지자체 추천제 운영 (지역우수인재F2R, 숙련기능인력E74R, 재외동포F4R) 숙련기능인력E74 지자체 추천제 운영, 지역기반 비자 발급 지원금 사업 운영,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추진(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1시간 1외국인 지원센터 업무, 외국인 현황 및 통계 관리(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법무부 등록외국인, 팀 주간월중 업무 등 일반 사무 및 예산 사무	주무관	중국·베트남 자매우호지역 교류업무, 해외 지방정부 공무원 행정연수 사업, 아시아 문화교류 증진사업, 중국어 통번역
주무관	해외 파견자 지원 및 수당 지급, 공무국외출장 심사관리, 공무국외출장 여비 지급, 항공마일리지 관리, 과 예산, 회계, 서무	주무관		주무관	미국 자매우호지역 교류사업, 외국인 오피니언리더 초청 행사, 국제기구(UCIG, NEAR 등) 관련 업무, 영어 통번역 지원, 일본 자매우호지역 교류 지원
				주무관	일본·러시아 자매우호지역 교류 업무, 고려인 및 아시아 전통문화 지원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추진, 일본어 통번역, 국제교류 법안단체 관리
				주무관	국제관계대사실 운영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

[그림 2-21]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 담당 조직 및 인력 현황

- (14개 시군) 시군별로 외국인정책 담당 조직 및 인력 배치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
군산시·김제시·완주군·익산시 등 4개 시군은 외국인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군산시·김제시·완주군은 외국인정책계 또는 외국인정책팀을 별도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음

- 김제·완주·익산은 각각 주무관 1인이 전담하고 있으며, 군산은 주무관 2인이 전담하고 있음

- 전주시·정읍시·남원시·부안군·고창군·임실군·장수군 등 7개 시군은 외국인정책 업무 전담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지 않고, 인구정책·다문화정책 등과 병행 수행하고 있음

- 한편, 순창·진안·무주 등 3개 군은 외국인정책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이 부재함

[표 2-28] 시군별 외국인정책 담당 조직 및 인력 현황

시군	조직	전담 인력	담당 업무
군산	인구대응담당관-외국인정책계	계장 1인, 주무관 2인	외국인정책 업무 전반 (종합계획 수립, 비자 업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등)
김제	성장전략실-외국인정책팀	팀장 1인, 주무관 1인	외국인정책 업무 전반 (종합계획 수립, 유입· 정착 촉진 정책 발굴, 지원사업 총괄 관리, 민관협약체 구축, 통계관리 등)
완주	행정자치국-인구정책과-외국인정책팀	팀장 1인, 주무관 1인	외국인정책 업무 전반 (시책사업 발굴, 지원사업 연계·협력, 비자 업무, 통계관리 등)
익산	기획예산과-인구정책계	주무관 1인	외국인정책 업무 전반 (추진계획 수립, 조례 관리, 비자 업무, 통계관리 등)
전주	인구청년정책국-인구정책과-다문화지원팀	(부재)	외국인지원 관련 업무, 결혼중개업, 공공예식장, 팀에 산서무
정읍	기획예산실-인구정책팀		인구정책 단위업무, 인구정책 통합 안내서 발간·총괄, 외국인·재외동포 업무
남원	기획예산과-인구정책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인구감소지역 대응, 외국인 정책
부안	기획감사담당관-인구활력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인구정책추진위원회 관리,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시행계획,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고창	행정지원과-인구정책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외국인 업무, 인구정책팀 서무
임실	복지환경국-여성가족과-가족지원팀		비자 업무,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 다문화가족 육아 지원금, 아이돌봄 지원사업, 외국인정책 업무
장수	기획조정실-지역소멸대응팀		인구기본계획·시행계획, 인구정책 공모사업, 인구시책관련 지원금 지급, 지역혁신 업무, 외국인정책 업무
순창		(부재)	
진안			
무주			

자료 : 각 시군 홈페이지

■ 인프라 현황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 추진과 관련된 주요 기관 중 하나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전북 국제교류의 체계적 추진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5년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로 설립되었으며, 2023년 '전북국제협력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과 사업 범위를 확대함
- 현재 전북 국제화 진흥사업, 외국인 정착지원사업, 전북형 개발협력사업, 도민 국제화 역량강화 사업,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 중,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외국인유학생 지원사업 등 외국인 정착지원사업이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에 해당함
- 주요 사업 대상은 유학생,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도내 거주 외국인과 도내 청소년·청년임

[표 2-29]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사업 현황

주요 사업	세부 사업	사업 대상
전북 국제화 진흥사업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해외 한국어교육 거점지역 학생, 일반인
	해외 자매우호지역 교류사업	도민, 자매(예정)지역 거주 외국인, 재외동포 등
	해외 신규교류 확대사업	해외 신규교류 지역기관, 지역민 등
	전북 매력알리기 사업(전북 홍보잡지 제작)	
외국인 정착지원사업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전북외국인포털 운영 등)	도민, 도내 거주 외국인 이주민
	외국인유학생 지원사업(외국인유학생 직무인턴 등)	도내 외국인 유학생
전북형 개발협력사업	전북형 국가별 협력사업	개발도상국 등 수혜국 공무원 및 유관단체
	국제기구 협력사업(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	도내 청년
	KOICA 영프로페셔널	청년인턴 1명
	KOICA 글로벌 연수사업	인도네시아, 키르기즈, 케냐, 모잠비크 등
도민 국제화 역량강화 사업	도민 공공외교 활성화 사업(전북 글로벌 문화데이 등)	청소년, 도민, 도내 거주 외국인
	차세대 글로벌 리더사업(전북 청소년 모의유엔회의)	도내 청소년, 중·고등학교, 유관기관 등
	전북 청년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해외 인턴십 등)	도내 청년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위탁 운영

- 안정적인 체류 서비스 지원사업(상담·통번역 서비스 지원) 도내 외국인근로자(E-9, H-2) 및 고용 사업주
- 직무 역량 교육 사업(토픽,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등) 도내 외국인근로자(E-9, H-2)
- 도민·외국인주민이 하나되는 사회통합(문화체험 등) 도내 외국인근로자(E-9, H-2) 및 도민

자료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jbica.kr/main/>)

-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위탁 운영 중인 전북외국인근로자지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됨.
전북을 포함하여 부산·대구·인천·광주·충남·경남(창원)·경남(김해)·경남(양산) 등 전국 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6년도 추가 공모를 통해 경기·전남·경북·울산·경남(진주)·강릉·광주·청주 등 8개 지역이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됨

- (다문화이주민*센터) 외국인주민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가 전주시와 익산시에 각각 설치·운영되고 있음



자료 : 전주시 홈페이지(<https://jeonju.go.kr/>), 익산시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hiksanim>)

[그림 2-22] 전주시·익산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 (1시군 1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 고충 상담, 한국어·직무 교육, 소규모 사회통합 활동 등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별로 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해당 기관으로는 전주시가족센터, 군산시, 익산시가족센터, 남원시가족센터,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완주군가족센터, 진안군로컬잡센터, 무주군가족센터, 임실군, 순창군가족센터, 부안군 등이 있음
- 또한, 군산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25.2월 개소)와 전주시외국인지원센터('25.7월 개소)가 각각 설치·운영 중임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인프라로서 가족센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북 14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음
- 이 밖에도 소수의 종교기관 및 민간단체가 도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의료지원·쉼터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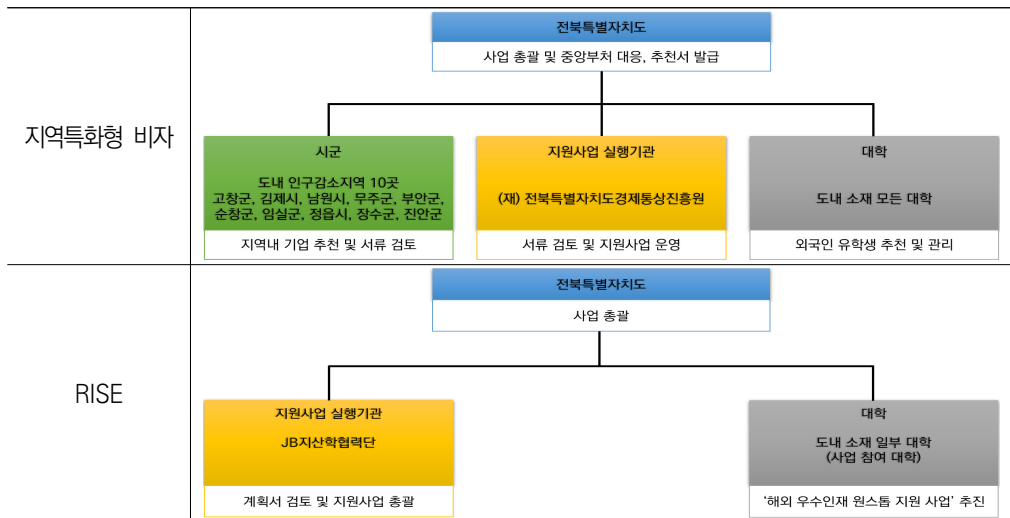
[표 2-30] 전북도 내 외국인근로자 지원 종교기관 및 민간단체 현황

시군	단체명	설립년도	운영주체	주요 활동
전주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1998 (2002)	개신교(대한예수교장로회 전북·전주노회)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 상담, 노동인권정책포럼, 의료지원
	(사)착한벗들	2012	불교(참좋은우리절)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교육, 상담, 통·번역, 체험, 자원봉사단 운영, 전주시외국인노동자쉼터 위탁 운영
군산	새만금이주민센터	2011	새만금명성교회	한국어교육, 상담, 쉼터 운영, 해외지부 운영
	오식도외국인지원센터	2012	기쁨나눔교회	한국어교육, 상담, 의료지원, 쉼터 운영
익산	성요셉노동자의 집	1983	천주교 전주교구	노동·인권·출입국 등 생활 전반 상담·지원, 의료지원
김제	전북이주민통합센터	2023	개인(협동조합)	외국인근로자 지원, 외국국적 동포(고려인, 조선족 등) 지원

자료 : 전라북도(2023:41)

■ 연계·협력 현황

- 외국인인구 유형(체류자격)별로 연계·협력 구조가 상이함
- 예를 들어, 지역특화형 비자(F-2-R) 관련 외국인 지원사업은 전북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위탁 운영·총괄을 담당하고, 시군 및 대학이 협력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음
- 유학생지원의 경우, JB지산학협력단이 전북 RISE 사업을 총괄하며 ‘해외 우수인재 원스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사업에는 군산간호대·국립군산대·군장대·우석대·전북과학대·전북대·전주대·전주비전대·호원대 등 도내 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음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2025:47)

[그림 2-23] 전북자치도 외국인지원사업(일부) 연계·협력 구조

라. 전북 외국인정책지원사업 추진 현황

■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2026년)

- 2026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은 총 85개의 과제

로 구성되어 있음(종료 과제 제외). 이 중, 통합 분야 과제가 59개로 전체 과제의 69.4%에 달하고, 경제 분야 과제 15개(17.6%), 인권 분야 과제 5개(5.9%), 협력/인프라 분야 과제 4개(4.7%), 안전 분야 과제 2개(2.4%) 순으로 많이 추진됨

- '25년 대비 통합(75.3% → 69.4%)·협력/인프라(5.1% → 4.7%) 분야 과제 비중은 다소 축소된 반면, 경제(16.9% → 17.6%)·인권(2.6% → 5.9%)·안전(0.0% → 2.4%) 분야 과제 비중은 확대되면서 분야별 구성의 균형성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됨

[표 2-31]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과제 현황

(단위 : 개, %)

구분	과제 수	추진과제명
계	85 (100.0)	
1. 경제	15 (17.6)	
공통과제	3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 시행,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농촌고용인력지원,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자체과제	11	이민자 유치·육성(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대학교육 강화, 유학생 실무지 협의회, 유학생 공공기관 직무인턴, 지역기반 비자승급지원금 지원, 인바운드 창업 지원, 유학생 지역특화형 취업 캠프), 지역기반 이민정책 체계 구축(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 수요자 맞춤형 관광안내 등
2. 안전	2 (2.4)	
3. 통합	59 (69.4)	
공통과제	9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통번역 서비스, 역량강화 지원, 다문화가정 안전체험 캠프),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창구 강화(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체류 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 학업·진로·이중언어·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자체과제	12	상호 이해 소통 증진(국제외국인분야 민간단체 지원,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사업, MY전북세계인축제, 다문화어울림축제, 외국인 주민통합 시민교육, 전북 외국인 포털 운영), 이민자 역량 배양(글로벌마을학당 운영,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다문화정보 공유 프로그램 제작 지원, 1사군1외국인지원센터 운영), 재외동포 및 국제교류자문관 활동 지원 등
4. 인권	5 (5.9)	
자체과제	3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기숙사임차지원),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지원, 외국인 주거개선 지원사업 등
5. 협력·인프라	4 (4.7)	
공통과제	1	이민정책연구네트워크 참여
자체과제	2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운영,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주 : 공통/자체과제의 개수와 추진과제명은 일부 시군에서만 추진되는 과제를 제외한 것임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6), 20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지방자체단체)

■ 현행 주요 지원사업(40개) 추진 현황

- 전북자치도는 '24.5월 「외국인정책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현재 ▲체계적 데이터 기반 외국인지원 및 정책 협력 강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 ▲안정적인 지역정착 추진, ▲내·외국인 함께하는 사회통합 등 4개 분야에 걸쳐 40개 지원사업(4개 완료 사업 포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데이터 기반 및 정책 협력 강화)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정량조사(외국인 필요인력 실태조사·다문화가족 실태조사·지역특화형 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활용(지역이민정책네트워크·전북형 비자 제안 협의체)하는 것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함
 - 외국인 필요인력 실태조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2024년 완료됨
-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 한국어교육 시행(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한국어 교재 고도화)과 RISE 사업을 기반으로 한 유학생 유치·양성(RISE 연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해외 인재 유치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학업 및 생활 지원을 통한 인재 양성)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함
-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역특화형 비자 기반 외국인지원(지역특화형 비자 취업 지원, 재외동포 체류 지원 발굴, 숙련기능인력 추천제, 지역기반비자 승급지원금 지원), 기술/한국어교육·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역현장 산업 교육,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법무부 지자체 연계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민자 사회통합 운영기관 확대), 지원기관 운영(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1시군1외국인센터,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 주거·보육·의료 인프라 및 계절근로자 지원(중소기업 환경개선, 외국인 주거개선 지원사업, 계절근로자 기숙사, 공공형 계절근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의료 지원), 유학생 취·창업 연계(인바운드 창업 지원사업, 유학생 공공기관 직무 인턴)를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함
 - 이 밖에도, 지역정착 플랫폼을 구축함
- (내·외국인 함께하는 사회통합) 문화교류·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협업, 세계전북도민의 날, 고려인·아시아 교류지역 전통문화보급,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사업, 인식개선 교육,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기업 선정), 생활지원(119 통역봉사

단, 공익단체 활성화 지원), 결혼이민자·귀화자 지원(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링, 국적 취득 지원)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함

[표 2-32]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 추진계획 사업 목록

추진전략	사업명	사업 내용	비고
데이터 기반 및 정책 협력 강화	외국인 필요인력 실태조사	• 도내 거주 외국인 주민 실태 및 기업 필요인력 조사	'24년 완료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도내 다문화가족 현황, 생활실태 등 분석, 지원사업 발굴	'24년 완료
	지역특화형 비자 만족도 조사	•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자, 기업 만족도 조사로 개선점 도출 추진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 이민정책 전문가 자문단 등으로 지방 이민정책 발굴	
	전북형 비자 제안 협약체	•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 여 지역에 맞는 비자 개선 사항 발굴	신규 ('26.5)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	전북특별법 출입국특례	• 도내 4대 지구 특성에 맞는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 트랙 구축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 자매우호, 교류지역 등에 문화 전파 등으로 도내 유입 환경 조성	
	한국어 교재 고도화	• 최신 한국어 교육 환경 반영 및 고도화(글로벌 사업 연계)	신규
	RISE 연계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글로벌 대학 연계 JB 유학생 통합지원센터 운영	
	해외 인재 유치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 지자체-대학-산업체 협력 유학생 정주형 산업인재 양성	
	학업 및 생활 지원을 통한 인재 양성	• 도내 대학 우수 장학생 생활비 등 지원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역정착플랫폼 구축	• 외국인 대상 생활 정보, 교육 이력 프로그램 제공	'24년 완료
	지역특화형 비자(F-2-R) 취업 지원	• 인구감소지역 거주·취업을 조건으로 장기 체류비자 발급 지원	
	재외동포(F-4-R) 체류 지원 발굴	• 인구감소지역의 가족단위 이주를 통한 동포의 장기 체류 지원	
	숙련기능인력(E-7-4/R) 추천제	• 외국인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 전환으로 장기 체류 지원	
	지역기반비자 승급지원금 지원	• 지역기반비자 변경 외국인에게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 승급 지원금(바우처 30만원) 지원	
	지역현장 산업 교육	• 지게차 운전 등 찾아가는 기술교육 추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기업 회의실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추진	
	법무부 지자체 연계 사회통합 프로그램	• 법무부 지자체 연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추진전략	사업명	사업 내용	비고
	이민자 사회통합 운영기관 확대	• 도내 가족센터, 대학 등을 활용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기관 운영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 외국인근로자 대상 지역특화 체류서비스 제공	
	1시군1외국인센터	• 시군별 외국인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거점기관 연계 체류 지원 서비스 제공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	•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 임시 숙소 제공 • 외국인 노동자 인권, 체류, 노동, 의료, 법률, 교육, 생활 지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 도내 중소기업 대상 기숙사 임차 지원, 기업 환경개선 추진	
	외국인 주거개선 지원사업	• 도내 외국인 주거환경(도배·단열) 개보수 지원(10가구)	신규
	계절근로자 기숙사	•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 농협 계절근로자 고용 후, 필요농기에 계절근로자 파견 지원	
	의료지원	•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인바운드 창업 지원사업	• 해외 창업자 발굴, 비자 취득 및 법인설립 등 창업 지원	(유학생)
	유학생 공공기관 직무 인턴	• 도내 공공기관에서의 국제교류 관련 업무 보조, 통번역 보조 등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외국인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및 차액 보육료 50% 지원	신규
내·외국인 함께하는 사회통합	국적취득 교재 개발	• 귀화 면접시험 교육 교재 오디오 콘텐츠 개발·배포	'24년 완료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협업	• 전주출입국, 군산 미군 공군기지 연계 문화체험, 교류 활동 추진	
	세계전북도민의 날	• 도민과 외국인 이해 증진을 위한 화합의 장 마련	
	고려인·아시아 교류지역 전통문화보급	• 고려인, 아시아 교류지역에 전통문화 보급 지원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사업	• 외국인 동호회 및 리더단 운영 지원(강사료, 재료, 물품 등)	
	인식개선 교육	•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개선 교육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기업 선정	• 지역기반 비자 적극 참여 외국인고용 모범 기업 사회통합 활동 지원	신규
	119 통역봉사단	• 긴급 상황 등 제3자 통역서비스를 통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공익단체 활성화 지원	• 외국인 자원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링	•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형성으로 국적취득 노하우 멘토링 추진	
	국적 취득 지원	•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자료 : 전북자치도 내부자료(2026)

4. 요약 및 시사점

■ 중앙부처 외국인정책 동향 : '유입·관리'에서 '지역 정착·사회통합'으로 전환

- 국가 외국인정책의 패러다임은 중앙부처 주도의 단기 노동력 충원과 체류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정책을 설계·추진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산업과 인구구조에 부합하는 외국인의 선별적 유치, 국내 육성, 사회통합, 장기 정착지원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예를 들어, 비자·체류 정책 제언제 도입,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등은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임. 이는 외국인을 단기 노동력이나 관리 대상이 아니라, 지역산업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인식하려는 정책적 전환으로 볼 수 있음
- 법무부의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공통되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지역기반 비자 활성화, 유학생·숙련인력·가족동반 이민자의 정착지원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관계부처 정책 역시 유학생 유치-양성-취업-정착, 외국인력 숙련화, 가족 동반 정착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는 외국인정책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의 달성을 위한 실질적 인구전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함
- 이에 따라 외국인정책의 핵심 과제도 외국인 인구의 양적 확대에서 유입 이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으로 변모하고 있음
 - 입국 전후 사회통합교육 강화 및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 도입 추진 역시 외국인 유입 확대에 따른 사회·문화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외국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중앙부처 외국인정책 기조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전북 외국인정책은 지역의 산업수요, 외국인 인구구조와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입-성장-정착-가족동반-사회통합-환류로 이어지는 전주기 정책체계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음

■ 타 지자체 외국인정책 사례 : 전남 조직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지역 정착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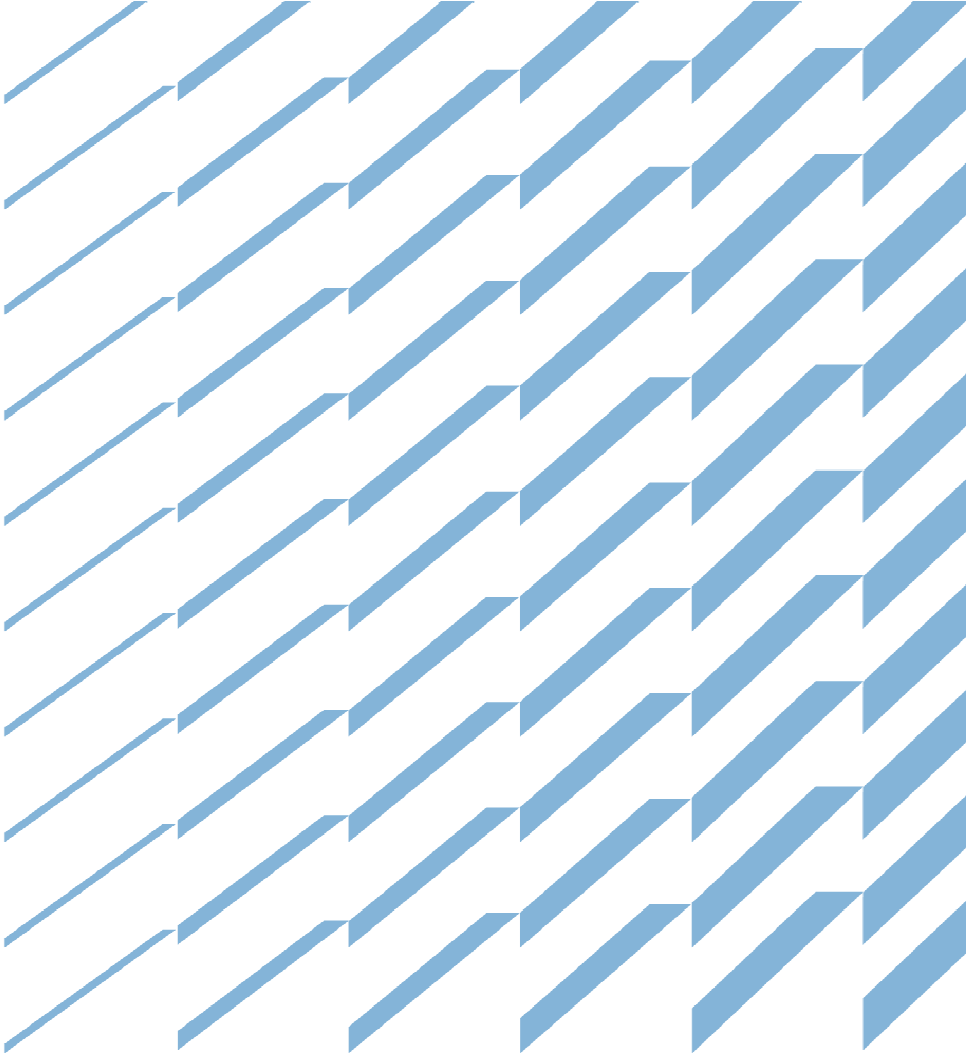
- 충북, 전남, 경북 등의 광역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남 조직을 신설·개편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외국인 유치·정착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음
 - 충북은 '외국인정책추진단'을 설치하여 지역기반비자·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정·유학생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고용·근속 촉진과 가족 단위 정착을 함께 도모하고 있음
 - 전남은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지역기반비자(유학생)를 총괄·담당하는 '이민정책과'를 중심으로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외국인주민통합지원 콜센터', '외국인 안심병원', '이동상담소' 등을 운영하며 외국인의 생활·의료·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이는 광역 단위 종합지원체계와 생활밀착형 안전망을 결합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경북은 '외국인공동체과'와 전남 운영기관(K드림외국인지원센터)을 중심으로 '경북형 초청장학제도', '지역기반비자 희망이음사업',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패널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지역기반비자 취득 외국인과 동반가족의 정착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주거·행정·한국어·자녀교육·배우자 취업 등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전북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이러한 사례는 지역 외국인정책이 단순한 비자 추천이나 생활정보 제공 중심에서 벗어나, 전남 조직 운영, 종합지원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 관리, 가족 단위 정착지원, 기업 적극 참여 유도,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지원체계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 유입 확대 방안 마련보다 유입 이후의 정착 기반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조성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함
- 이에 따라 전북은 전남부서 강화, 종합지원체계 구축, 정책DB 및 정기조사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외국인정책 추진 기반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토대로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지역기반비자 취득자, 동반가족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설계하고, 자녀 보육·교육, 배우자 취업, 생활상담, 의료·주거 지원 등 가족 단위 정착지원과 생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함
 - 조직 측면에서는 충북처럼 여러 부서에 분산된 유학생·근로자·다문화 업무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추진체계를 갖추거나, 전남(인구청년이민국)·경북(지방시대정책국)처럼 도정의 핵심 컨트롤타워 산하에 배치하여 '인구-청년-산업-이민' 정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전북 외국인정책 여건 및 추진사업

- (외국인인구 특성) 전북 외국인인구는 절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최근 10년간 증가 폭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이는 증가하는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이 전북의 주요 정책 의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음을 의미함
- 유형별·체류자격별로는 유학생, 비전문취업, 계절근로자,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의 비중이 전국보다 높음. 이는 전북의 유입 잠재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체류기간이 짧거나 도외 유출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함
 - 실제로 2~3년 미만 체류자 비중이 높고, 주요 체류자격에서 순유출이 확인되고 있음
- 따라서 전북 외국인정책은 유입 확대보다 유학생과 산업·농업인력의 장기체류 및 가족단위 정착 유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즉, “공부하거나 일하러 온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정착한 지역주민”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추진해야 함
 - 특히 전북은 직종(생산직·단순노무직)·기업규모(소규모)·임금(저임금) 등 일자리 여건의 상대적 취약성으로 인해 외국인이 도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음. 이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환경, 주거환경, 생활·안전교육, 의료지원 등 정주 인프라를 강화하고, 외국인 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업·농림어업 중심의 소규모·영세 사업체 고용 비중이 높으므로, 사업장 단위의 지원과 권역별 찾아가는 서비스 마련이 요구됨
 - 다만, 짧은 체류기간은 정착 기반 부족에만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근 비자 제도의 신설·확대에 따른 신규 유입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한편, 전북은 외국국적동포 비중이 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임. 외국국적동포는 생활 인프라와 커뮤니티가 형성된 지역에 유입·정착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전북 차원의 현지 유치 홍보와 정주 인프라 개선을 병행해야 함
- 연령대별로는 20~30대 청년층 비중이 높아 지방소멸 대응과 산업인력 확보 측면에서 잠재력이 큼. 다만 이들이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유학·취업·정착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경로가 요구됨. 또한, 이들은 생애주기 측면에서 가족 형성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며, 가족 초청이 가능한 외국인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배우자 취업, 임신·출산·초기 양육, 자녀 보육·교육, 주거지원 등 가족동반 정착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시군별로는 전주·군산·익산·완주 등 도시권과 인접 지역에 외국인이 집중된 가운데,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중이 높은 시군도 다수 확인됨. 따라서 전북 외국인정책은 도시형 유학생·산업인력 지원과 도농·농촌형 가족정착 및 생활 안전망 지원을 강화하되, 도 차원의 표준서비스와 시군 맞춤형 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시군별 공간적 특성이 매우 뚜렷하므로, 근로자 지원은 군산·김제·정읍·완주·부안·고창을 중심으로, 유학생 취업 연계 지원은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중심으로, 외국인가족 및 자녀 지원은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을 중심으로 특화할 수 있음. 또한 외국인인구 집중 거주지역(예, 군산)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권역별 모델로 점진적으로 확산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적별로는 베트남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태국·중국·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네팔 등으로 다국적화가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특정 국적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유입국 다변화 전략과 함께, 국가 특성을 반영한 한국어·생활교육, 문화교류, 통역 지원이 요구됨
- (사회통합 수준) 전북의 외국인 사회통합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행정 인프라 관련 ‘통합 기반’이 양호한 편으로 평가됨
- 그러나 ‘통합 촉진’과 ‘통합 상태’ 영역은 보완이 필요함. 한국어 능력과 의사소통 역량, 내·외국인 간 관계 형성,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 교육·훈련 경험, 고용률과 소득 수준, 봉사활동 참여, 세금 납부 의무 인식 등에서 개선 과제가 확인됨
- 이는 전북의 사회통합 정책이 생활·비즈니스 한국어, 지역사회 갈등 예방, 외국인 수용성 제고, 시민적 의무와 권리 교육,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기여 사례 확산 등을 포함하는 상호문화 통합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함
- (추진체계) 전북자치도는 최근 외국인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정비하고, 대외소통국 내 외국인국제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적극 확충하고 있음
- 다만 유학생, 다문화가족 등 주요 정책 대상이 여전히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 외국인의 유입·취업·정착·가족동반·사회통합을 하나의 경로로 관리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또한, 정책기획, 사업 조정, 성과관리, 현장 수요 환류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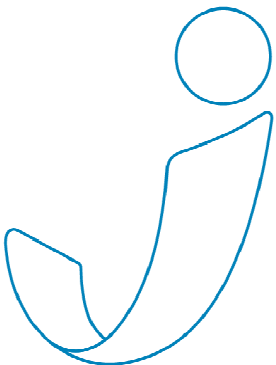
- 시군, 대학, 가족센터, 일자리센터, 출입국관서 등 다양한 주체가 정책추진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를 상시로 연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은 아직 충분하지 않음
 - 특히 1시군1외국인지원센터는 시군 단위 외국인지원 기관을 지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기존 기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기능 수준과 범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시군별 외국인정책 담당 조직과 전담 인력 배치 수준에도 편차가 존재함. 특히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역임에도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재한 경우는 정책 대응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외국인인구 규모와 집중도를 고려한 최소 조직·인력 배치 기준을 설정하고, 군 단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광역-기초 간 연계 지원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즉, 전북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는 제도 기반 형성 단계를 넘어 통합 조정과 현장 연계 강화 단계로 전환되어야 함. 이를 위해 전담조직 기능 강화, 종합지원체계 구축,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 활성화, 담당자 교육·간담회 상시화 등이 요구됨
- (추진사업) 전북자치도는 현재 데이터 기반 정책협력,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 안정적 지역 정착, 내·외국인 사회통합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정책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전북 외국인정책이 다문화가족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정책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현행 사업은 기능별·대상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외국인의 체류 경로와 정착 과정을 기준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현행 주요 사업이 유학생(유입)·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정착) 및 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사회통합) 등 대상별·분야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 또한, 비자제도 신설·확대에 따라 신규 정책 대상은 계속 등장하고 있으나, 지역기반 비자와 숙련기능인력 전환 확대에 따라 증가할 가족 단위 정착 수요에 대한 대응도 아직 미흡한 수준임
- 따라서 전북 외국인정책은 개별사업의 단순 확대보다 유입-성장-정착-가족동반-사회통합-환류로 이어지는 전주기 정책체계에 맞게 재구조화되어야 함



제3장

전북 외국인정책 수요 분석

1. 심층면접 조사 개요
2. 분석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전북 외국인정책 수요 분석

1. 심층면접 조사 개요

가. 조사 개요 및 절차

1) 조사 목적

- 정책 수요자와 정책·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추진사업에 대한 정책 수요와 현장 의견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전북 외국인정책·추진사업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심층면접 조사를 시행함
- 도내 외국인과 유형별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 사업 이용 경험, 정책 수요·공백, 애로사항·개선 요구, 추진체계, 신규 사업 제안 등을 조사함

2) 조사 대상자 선정 방법과 한계

- 외국인은 국적, 성별, 체류자격, 동반가족 유무,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되, 유입부터 정착 단계까지의 경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동일 국적 외국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 참여자를 중심으로 선정함
 -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조사 목적·방법·내용·절차를 사전에 설명한 후 대상자를 추천받음
- 현장 전문가는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및 가족 등 외국인 유형별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되, 분야별 대표성과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함
-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를 거쳐 면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함
- 다만, 연구 기간·인력·예산의 제약으로 외국인 조사 대상자는 장기체류자 3인으로 제한되었고, 현장 전문가 역시 도시권에 편중되어 있어, 조사 결과의 대표성과 일반화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조사 방법 및 기간

- 심층면접 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개별 심층면접과 2~3인 규모의 소집단 면접을 병행하여 대면 방식으로 시행함
- 모든 면접은 한국어로 진행하였으며, 면접 시간은 1회당 약 1시간 30분~2시간이 소요됨. 전체 면접조사는 6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약 3주간 이루어짐

4) 주요 내용 및 분석

- 면접 내용은 총 8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착·정주 및 동반가족 생활 지원, 전북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 사업·지원기관 이용 경험과 수요 및 공백, 체류자격 관련 애로사항, 네트워크·사회통합, 추진체계 및 데이터 관리·환류 등을 중심으로 조사함
- 이와 함께 면접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추가 질문을 통해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심층적으로 파악함

[표 3-1] 심층면접 조사 주요 영역 및 내용

영역	주요 내용
배경	• 자기소개, 외국인정책 추진기관의 역할·특성, 인력·예산·운영 현황
전북 정착 경험 및 정주 의향·제약	• 전북 생활 전반적 만족도 • 초기 어려움, 지원·도움받은 경험, 인적 네트워크, 아쉬운 점 • 단계별 정착 경험, 전북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체류자격별 애로사항 • 전북 지속 거주 의향과 이유, 타 지역 이동 요인, 영주·귀화 의견, 정착·정주 관련 개선점
외국인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	• 현장 수요 반영에 대한 주관적 인식, 외국인정책의 성과와 한계 • 외국인정책 신규 및 개선 영역 제안
사업·지원기관 이용 경험과 수요·공백	• 도내 외국인 지원기관 및 추진사업 인지도, 정책·추진사업 정보 취득 경로 • 도내 외국인지원기관 이용 경험, 기관 미이용 사유 • 구직/일자리·교육·의료·언어/통역·상담·주거 등 정책 수요 • 가장 도움이 된 사업, 수요가 많은 사업, 수요 대비 부족한 사업 등 • 기관·정책 접근성, 홍보·안내 경로, 정책 사각지대
체류자격	• 비자 전환 경로, 변경·연장 시 애로사항, 체류자격 관련 정책 수요
동반가족 생활	• 가족 동반 수요/여부, 초청 어려움, 동반가족 적응 정착 경험, 배우자 취업, 자녀 학교생활 등
네트워크·사회통합	• 지역생활 문화 이해, 지역사회 참여, 외국인 수용성 수준, 국적별 커뮤니티, 사회통합 제고 의견
추진체계 및 데이터 관리·환류	• 기관 간 역할과 연계, 사업 대상 분절·중복·공백 영역, 실무자 교육 경험 • 정책 데이터 확보·한계, 사후관리 및 정책 환류 방안

- 면접조사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모든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녹취록을 작성한 후 반복적으로 검토함. 이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범주화하고, 상위 주제와 하위 주제를 도출하여 체계화함. 특히 외국인의 전북 정착·정주 지원과 관련한 정책 수요와 애로사항, 개선 의견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심도 있게 분석함

나. 조사 참여자 특성

- 도내 거주 외국인 3명과 외국인 유형별 유관기관 실무자 19명 등 총 22명을 대상으로 함
- 외국인 3명은 모두 한국 체류기간이 7년 이상인 장기 체류자로, 전주시·완주군 등에 거주하고 있음. 국적은 몽골·스리랑카·네팔이 각각 1명이며, 몽골 여성과 네팔 남성은 국내 석사과정을 마친 후 F-2-7 비자를 취득하였고, 스리랑카 남성은 E-9 비자로 입국한 이후 현재는 E-7-4 비자로 전환하였음. 이들 중 1명은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하여 거주하고 있음

[표 3-2] 심층면접 조사 참여자 특성 : 외국인

구분		지역	국적	성별	체류자격	체류기간	동반가족 유무
외국인	A1	전주	몽골	여성	D-2→D-10→F-2-7	10년	배우자·자녀
	A2	완주	스리랑카	남성	E-9→E-7-4	9년	없음
	A3	전주	네팔	남성	D-2→F-2-7	7년	없음

- 정책·실무 담당자 19명은 전주시·군산시 소재 외국인지원기관 실무자 4명, 전주시 소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D계열) 담당자 3명, 전주시·김제시·완주군·익산시 소재 외국인 근로자(E계열·R계열) 지원기관 실무자 8명, 전주시·남원시·김제시 소재 결혼이민자 및 가족(F계열) 지원기관 실무자 4명으로 구성됨

[표 3-3] 심층면접 조사 참여자 특성 : 현장 전문가

구분			지역
정책·실무 담당자	외국인 전반	B1	전주
		B2	전주
		B3	군산
		B4	군산
	외국인 유학생 (D계열)	B5	전주
		B6	전주
		B7	전주
	외국인 근로자 (E계열/R계열)	B8	전주
		B9	전주
		B10	전주
		B11	김제
		B12	김제
		B13	완주
		B14	익산
		B15	전주
	거주·결혼이민 등 (F계열)	B16	전주
		B17	남원
		B18	남원
		B19	김제

2. 분석 결과

가. 전북 정착 경험과 정주 의향 및 제약 요인

■ 전북 생활 만족과 높은 지속 거주 의향

- 도내 거주 외국인은 조용한 생활환경, 양호한 자연환경, 낮은 혼잡도 등을 전북의 장점으로 인식하며, 전반적으로 전북 생활에 높은 만족감을 보임
- 장기간 축적된 지역 적응 경험과 더불어 자국과 유사한 지역 이미지, 활성화된 국적별 커뮤니티 등이 전북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과 안정감을 형성하여 지속 거주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자녀 교육의 연속성 역시 정주 의향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관찰됨

“(전북 생활에) 만족해요. 뭔가 첫 느낌이 몽골이랑 너무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서울보다 자유로운 느낌이고요.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시끄럽고 막 그러는데 전주는 너무 좋아요. (중략) 전북에서 F-5 비자를 얻을 수 있다면 전북에 계속 있고 싶어요, 완전. 전북 생활이 만족스럽고, 아이 학교 문제도 있어서…” (A1)

“(전북 생활에) 만족해요. 여기(전북)는 인구도 많이 없고, 서울보다 조용하니까요. 경치도 좋아요.” (A2)

“영주권 취득해서 전북에서 계속 살고 싶은 이유는 네팔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서예요. 그래서 여기 계속 살고 싶어요.” (A3)

■ 정착·정주를 제약하는 생활·제도적 요인

- 전북 생활 만족도와 정주 의향이 높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교통·주거 등 필수 정주 인프라의 부족과 까다로운 체류자격 요건은 전북지역 정착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일부 외국인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고려하게 하기도 함

- (교통) 전북지역은 대중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특히 농어촌과 산업단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차량이 없을 경우 이동권과 생활권이 크게 제한됨. 이에 따라 교육·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뿐 아니라, 의료·행정·상담 기관 이용과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참여 등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저는 교통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전북지역)는 지하철도 없고, 무조건 차가 있어야 다닐 수 있어요.” (A2)

- (주거) 주거 문제는 초기 정착 단계뿐 아니라 실직·이직, 가족 초청 등 체류 상태가 변화하는 정착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핵심적인 정주 제약 요인으로 확인됨
- 특히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사업체 기숙사에 거주하다가 고용관계 종료로 퇴거하게 되는 경우, 지역 내 주택 공급 부족으로 구직 기간 중 새로운 거주지를 확보하기 어려움. 또한, 임대차계약 기간과 근로계약·체류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에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여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짐
- 가족 초청 시에는 가족 동반 거주지를 입증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존 기숙사를 이용하기 어려워짐. 이에 일을 병행하면서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시간적 부담과 월세·보증금 등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 더욱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어 심리적 부담까지 가중되기도 함

“주거 문제 있어요. 원룸도 많이 없고, 비싸고, 외국인을 안 받아들이는 빌라도 있고요. E-9 근로자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살 곳이 갑자기 없어져요. 그러면 쉼터 같은 곳에 있으면 좋는데 전북은 전주만 그런 곳 있어서... 외국인한테 돈을 조금 받더라도 쉼터가 조금 많아서 일 구할 때 잠깐 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중략) 가족을 초청하면 기숙사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A2)

“만약에 E-9 근로자면 다른 회사로 이직할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언제든 일을 찾으면 다른 회사로 바로 가야 하는데, 그때 생활할 곳이 없어요. 다른 원룸 같은 곳 찾아야 하는데, 짧아도 6개월, 아니면 1년이나 2년으로 계약하잖아요. 계약이 되어 있어야 거주지 신고를 할 수 있는데...” (A1)

“어느 지자체는 동포가 처음에 오면 가족들이랑 같이 머물 수 있는 거주지를 몇 개월간 주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어서 중간중간에 집 알아보는 걸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노후화된 아파트, 연립주택, 빈집 같은 걸 활용해서 가족들을 데려올 때 당장이라도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시 세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B2)

- (체류자격) 정주 인프라 문제와 더불어, 소득 등 체류자격 요건도 전북지역 정주를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전북지역의 일자리와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거주·영주 자격 취득을 위한 소득 요건 등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이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도권이나 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동할 유인이 발생함

- '24년 기준, 전북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약 234.4만 원으로, 전국의 약 86.7% 수준임(전북연구원, 2025:11)

- 가족과 함께 체류할 경우, 체류자격 관련 서류 준비와 소득 기준 충족 등의 부담이 더욱 커져 가족 동반 정착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남

“계속 전북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비자 조건 때문에. (중략) 이해할 수 없어요. 소득이 없어서(부족해서) 다들 서울로 가는데, 똑같은 소득 조건을 맞추라고 하면서 여기(전북) 오라고 하면 안 오죠. 그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서울은 소득도 높고, 문화적인 시설도 많이 있잖아요. (중략) 소득 조건이 괜찮으면(완화되면) 전북에서 살 외국인들 많을 거예요.” (A2)

“유학비자는 혼자 있으면 한국어만 잘하면 연장이나 이런 게 쉬운데,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면 통장 잔액 증명서 같은 거 필요하고, 학생이라 일하면 안 되고 그 돈을 꼭 본국에서 보내줘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가족이 있으면 기준이 높아지고, 추가로 서류가 더 필요하니까 어려워져요. 가족이 있으니까, 연장도 2년 이렇게 길게 되는 게 아니고 1년밖에 안 돼요. 돈이 많을수록 연장이 길게 되는 데, 제가 아이가 둘이라서 4천, 5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1년 연장되니까 너무 부담인 거죠.” (A1)

“비자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가족들과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외국인)은 많은데 비자 문제가 되게 까다로워서... (중략) 모든 조건을 전국에 똑같이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북은 대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나요?” (A3)

- 현장 전문가들 역시 외국인이 전북에 실질적으로 정착·정주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정착·정주하려면 가장 필요한 건) 일자리인 것 같아요. 외국인 근로자도 일자리가 필요하고, 외국인 유학생도 정착하려면 일자리가 필요하고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선제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주거 공간이 있어야 하고요.” (B2)

나. 외국인정책·지원기관 이용 경험

■ 비공식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 전달

- 외국인정책 관련 정보는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게시판보다 커뮤니티 리더·지인, 국적별 SNS 등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될 때 정책 수요자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확인됨. 특히 체류자격이나 일자리처럼 신속성과 정확성이 중요한 정보도 비공식 경로를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음
- 기관 차원에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상당수 홍보가 한국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국어 안내 역시 체류 규모가 큰 주요 국적의 언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소수 언어권 외국인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해 사업 참여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언어권 기반의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홍보물을 보는 분도 계시지만, 리더가 커뮤니티 SNS에 올렸을 때 파급력이 제일 좋아요. 자국 사람이 홍보하는 게 효과가 정말 크더라고요.” (B10)

“있는 지원들도 대상자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홈페이지도 그렇고 대부분 한국어로 돼 있어서 한국어를 잘하면 괜찮은데,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신청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관심이 있더라도 문의할 때 한국어로 대화해야 하잖아요. 통역사 계셔서 그 나라 말로 하면 편한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가 많이 쓰는 SNS를 통해 홍보하는데… (중략) 저는 나라별 커뮤니티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A3)

■ 상담·통번역 지원의 중요성과 접근성 한계

- 상담과 통·번역(특히 통역) 지원은 노동·체류·의료·행정 등 외국인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전문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과 현장 전문가 모두에게 중요성이 높게 평가됨
- 상담·통번역 서비스는 비자,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산업재해, 주거, 의료 등 외국인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주요 창구이자 공적 지원체계의 1차 안전망으로 기능하므로, 이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상담과 통·번역이 가능한 언어가 특정 국적과 체류자격에 편중되며, 기관 위치와 운영시간이 실제 이용 여건과 부합하지 않아 지원의 포괄성 및 접근성 제고가 요구됨
 - 일부 기관은 일요일 운영 등 이용자수요에 맞게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중 낮 시간대 방문을 전제로 운영되거나 접근성이 낮은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이용에 제약이 있음
- 또한 기관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상담 이후 전문기관 이관, 행정 절차 지원, 권리 구제 등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상담부터 사후 지원까지 연계되는 협력체계의 강화가 필요함

“(내세울 만한 사업은) 상담이요. 상담의 질 자체가 좋아요.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임금체불이랑 사업장 변경 건 상담이 제일 많고, 산업재해 관련된 것도 꽤 많아요. (중략) 그렇지만 언어에 따라서 다국어 상담이 제한되는 건 있어요. 통역사가 있는 국적의 문의가 많거든요. 분명히 다른 언어권도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언어권의 상담사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B10)

“주로 중국, 베트남. 그쪽으로만 잘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북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 그래도 조금 있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소수 국적자에게도) 통·번역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해요.” (A2)

“점심시간이랑 외국인 근로자분들 퇴근 후인 5시 30분 이후가 바빠요. 운영시간은 9~6사이긴 한데... 대신 금요일과 토요일을 쉬고,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요. 아무래도 일요일이 수요가 많으니까요. (중략) 근데 우리가 고용노동부나 출입국사무소랑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죠. 그런 게 좀 불편해요.” (B4)

■ 체류자격별 기관·사업 인지도와 이용 기회의 격차

-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은 전북도와 14개 시군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구직자·전문인력·동반가족 등은 이용할 수 있는 기관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책 접근성이 낮은 편임
- 또한 사업별 재원과 지침에 따라 지원 가능한 체류자격과 대상 기준이 달라 유사한 상황의 외국인이라도 지원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지원 대상과 기능이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음

“제가 학생일 때는 우리 지역에 가족센터가 있는지 물렸어요. 2년 정도 살았을 때까지도요. (중략) 저는 E-9 근로자나 결혼이민자 빼고는 대부분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E-7 근로자는 어디 가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략) 요즘 근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E-9에서 E-7으로 절대 변경하지 말라고 해요. 더 어려워지니까요. E-9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데, E-7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죠? (중략) 유학생들도 어려워요. 학교에서 대부분 비자 연장까지는 도와주는데, 어학연수생이나 그런 사람들은 보험을 안 든 경우도 있어서 병원 가는 걸 망설이게 되죠. 어떤 병원들은 외국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학교에서 그 사실을 몰라요.” (A3)

“비자가 안 맞으면 기관에서 도움을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데 가라고 하고요.” (A1)

“저는 기관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F-2-R만 일자리센터 이용할 수 있다고 들어서 안 가 봤어요. 사실 우리는 그런 센터보다 커뮤니티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아요. E-7은 혼자 알아봐야 하니까...” (A2)

“근로자는 고용센터라든지 개입할 수 있는 담당 기관이 있는데, 유학생은 상대적으로 센터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상담조차 제한되는 것 같고요.” (B2)

“졸업 후에 D-100이 되면 대학은 더 이상 졸업생 관리가 어려워요. (중략) 졸업과 동시에 지원이 푼 끊기는 거예요.” (B7)

“가족센터에서 의외로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다문화 관련 법에 비(非) 다문화 외국인이 포함이 안 돼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기관에서 특화된) 돌봄 수요 같은 걸 대응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아쉽죠.” (B3)

다. 일자리·교육·체류자격 관련 정책 수요와 사각지대

■ 일자리 1 : 외국인 구직·이직 수요 증가와 제한적인 공공 일자리 연계 기능

- 정책 수요자인 외국인과 현장 전문가 모두에게 가장 반복적으로 언급된 수요는 일자리와 관련됨. 외국인 근로자는 이직·재취업 또는 고용 안정성을 희망하고, 유학생은 졸업 후 지역 내 취업 경로를 모색하며, 주 체류자의 동반 배우자 역시 구직을 희망함. 이는 일정 수준의 소득·생활 안정성과 체류자격 요건 충족을 위해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임

- 그러나 외국인 구직자는 취업 가능한 사업장과 일자리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며, 현행 제도상 기관에서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제한적이어서 고용허가제 밖에 놓인 외국인의 구직 수요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특히 ‘E-9 → E-7’, ‘D-2 → D-10 → E·F계열’ 등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지원 공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체류자격별로 취업 가능한 직종과 근무 지역 등의 요건이 상이하고 복잡하지만, 기존 고용정보망은 주로 내국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사업주 역시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구직활동에도 제약이 발생함
- 더욱이 공적 영역에서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면 외국인은 지인이나 행정사 등 비공식적 경로에 의존하게 되며,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부정확한 정보에 노출되는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저는 (현장 수요는) 일자리가 제일 높다고 봐요. 일자리 정보 제공과 연계가 고민인데, 충남은 홈페이지에 일자리 정보를 올려놓고 연계를 희망하는 사람은 설문을 통해서 개별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도 일자리 연계를 해준다고 하고, 서울 일자리포털에도 일자리가 안내되고 있고요.” (B1)

“일자리 미스매칭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처럼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자가 직접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나 규정 개정 같은 개선이 필요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이 정말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B9)

“일자리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커뮤니티가 있어서 일자리 생기면 공유하긴 하는데, 외국인만 쓸 수 있는 포털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용24 보긴 하는데 주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사장님들도 외국인 찾을 수 있고, 외국인도 그런 회사를 찾을 수 있는 포털이 필요해요.” (A2)

“E-9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해 줘요. 근데 E-7으로 바꾸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해요. 지인을 통해서 하거나 행정사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B3)

“우리 기관에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비자는 제한적이잖아요. (중략) F2, F5, F6, F-2-R 정도만 가능한 것 같아요. (중략) 여기서 다 전화해서 물어봐도 현재 지침이 없대요. 규정을 조금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비자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요. (중략) F-2-R 비자는 가족을 동반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배우자 일자리 연계도 희망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문의가 들어와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분들은 행정사를 찾아가게 되고, 250~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B12)

■ 일자리 2 : 유학생 ‘우수 인재’ 양성과 지역기업 인력 수요 간 미스매치

- 전북은 전국적으로도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으나, 유학생과 졸업생의 취업·정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점기관이나 통합 플랫폼이 부재하여 졸업 이후 지역 기업 취업으로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을 채용할 때, 전공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고급 인력으로서의 ‘우수 인재’보다 장기근속이 가능한 생산·기술직 인력, 현장 적응력이 높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비즈니스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인력을 원하는 경우가 많음
 - 이는 제조업 생산·기술직의 비중이 높은 전북지역 산업구조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유학생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사무직으로 채용하기엔 다소 부족한 이유도 복합적으로 작용함
- 이에 유학생에게는 지역기업의 직무와 근무 환경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한국어와 직무 관련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지게차 운전, 용접 등)을 준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기업에도 외국인 고용 절차와 관리 방법에 관한 교육과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가 꾸준히 운영되고 있으나, 전북 소재 대학 유학생·졸업생의 실제 참여율과 취업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기업과 유학생이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소규모 매칭 프로그램 도입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무 인턴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지-산-학 연계를 강화하고, 유학생·졸업생의 지역 취업 의지와 역량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지역 기반 비자 제도, 새만금 한글학당 등 전북 외국인정책을 통해 유입된 유학생이 졸업 후 지역 일자리에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하는 체계적인 비자 사다리 구축·관리 방안 모색도 요구됨

“기업은 생각보다 단순한 업무를 시킬 외국인, 좀 성실한 외국인을 선호해요, 생산 인력이요. (중략) 외국인의 컴퓨터 활용 수준을 보면 사무직으로 채용하기는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전북지역) 남는 외국인이 취업이 잘 되려면 디지털 교육이 필요해요. 아르바이트하는 D-10 외국인보다 소득이 높고, 안정적이어야 하잖아요. (중략) 일자리박람회도 좋지만, 시군 네트워크를 활용한 작은 작은 매칭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어요.” (B8)

“사실 (외국인 졸업생의) 취업률이 높지는 않죠. 22~23% 정도…. (중략) 상담을 해 보면 취업 안 한다고 해요. 아르바이트한다고 하죠. (중략) 최근에 취업박람회가 있었는데, 지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 정도로 요즘은 취업 의지가 강한 유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B6)

“기업 측에서 요구하는 한국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어와 명확하게 달라요. 여학연수 과정에서는 생활을 위한 한국어, 학부 과정에서는 전공 교육을 위한 한국어를 배우죠. 산업현장에서 쓰는 한국어는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중략) 예비 취업 유학생들이 비즈니스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그런 문제는 약간 해소될 수 있을 거예요. (중략) 광역형 비자 제도로 유치된 유학생들을 잘 관리해서 E-7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죠. (중략) D-10 외국인은 전북에 기반이 있어서 쉽게 지역을 이동하지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취업으로 연계시킬 방법이 없어요. D-10 비자가 만료되면 타 지역 대학원에 입학하더라도요. 그래서 D-10 외국인이 전북을 이탈하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좋겠어요.” (B7)

“현장이 기계화되고 있어서 유학생들이 기피하는 3D 업무는 많이 줄고 있어요. 산업체에 견학이나 탐방을 가면 단 1시간이라도 그 일을 해 보게 해야 해요. 전시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생각보다 업무가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취업 동기 부여가 될 거예요. (중략) 지자체에서 산업체 니즈를 파악하고, 대학과 연계해 줄 필요가 있어요. 대학은 그것에 맞는 교육을 하고요. (중략) 취업을 매칭해 줄 수 있는 특화된 기관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B5)

■ 일자리 3 : 기업의 외국인 고용 역량과 고용 환경개선 필요

- 외국인의 지역기업 취업률과 장기근속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구직자·근로자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과 지원도 병행되어야 함
- 특히 사업체가 고용 가능한 체류자격과 규모,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서류와 행정 절차 및 내용, 문화적 차이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채용을 주저할 수 있음. 외국인을 채용한 이후에도 관련 제도와 관리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면 사업장 내 갈등과 이직, 행정상 불이익 등의 부정적 경험을 할 수 있음
- 또한, 지역기업이 내국인 고용에 비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감수하고서도 외국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근로·주거 시설 개선비, 지역대학 외국인 졸업생 고용 지원금, 통근비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음

“기업들도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업들이 어떤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지 정보를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E-9 외국인을 그냥 채용하면 안 되는데, 잘 모르시면 채용하고 문제를 겪는...” (B12)

“사업주들도 교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는 외국인이 제가 처음이에요.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회사들도 전복에 많아요. E-9 제도를 모르는 회사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사업주들한테도 필요해요.” (A2)

“사업주가 외국인 비자에 대해 아예 모르면 고용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업주 쪽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많거든요. (중략) 계약 먼저 하고, 비자 신청하고, 허가받고, 그다음부터 일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한 달에서 두 달 걸리니까요. 이런 이해 없으면 사장님들이 기다리기 힘들어해요. 굳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불만도 있으시고요.” (A1)

“외국인을 채용해서 지원된다고 하면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지금은 기업 지원이 없어요. (중략) 외국인이 한 명이나 두 명이면 기업 측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조금 도와주는 거죠. 많은 지원도 아니고 약간만이라도 있으면, 진짜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외국인 구인이 많아질 거예요.” (B8)

■ 교육 1 : 체류자격 요건과 직결되는 교육 수요와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

- 교육은 한국어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일상생활 적응이 아니라, 체류자격 연장·변경을 위한 요건 충족을 위한 것으로 분석됨
- 이와 유사하게, 운전면허를 비롯한 직무 관련 자격증 교육도 체류자격 점수 확보와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수요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외국인은 학업·근로·양육 등으로 인해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체류자격과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우선적으로 선택함에 따라,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체류자격의 연장·전환에서 필요한 KIIP의 특정 단계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비자 만료 기간 내 이수가 어려운 상황, 거주지역에 필요한 단계가 개설되지 않아 이수가 제한되는 상황, 농번기와 교육 일정이 중복되어 이수하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단계별 수요와 근로·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원래는 결혼이민자나 학생들만 했는데, 지금은 근로자들이랑 배우자들도 하니까 갈수록 접속이 더 어려워져요. 2단계까지는 괜찮은데, 3단계, 4단계 수강이 정말 어려워요. 새로운 비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대부분 비자가 다 지금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필요하니까요.” (A1)

“한국어 수업의 수요가 많아요. 거의 지금은 본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기에 편해지려는 이유가 아니고, 비자를 바꾸기 위해서예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든지 토픽이 필수잖아요. 특히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없으면 비자가 제한될 정도잖아요. 그래서 평일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되게 많은데, 근로자를 위한 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주말에 운영하는 곳이 적다 보니까...” (B2)

“비자에 직접 연관되는 한국어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중략) 운전면허 중도 E-7으로 전환할 때 가산점 10점을 얻을 수 있어서 그런지 수요가 높아요. 지게차 기능사도 마찬가지고요. (중략) 가장 수요가 높은 건 일요일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주중에는 아무래도 근무하고 야근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어려운가 봐요. (중략) 근데 이게 수강이 너무 치열하니까 주어진 기간 내에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3단계까지는 수업을 2번 들으면 이수가 되잖아요? 재수강 이수가 있어서 한 번 더 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치열한데... 수요 대비로 보면 1~2개 기관 정도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B3)

“제조업이나 도시 지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달라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한국어 시험인데, 공장 다니는 분들은 주말에 한국어 수업하는 데가 있으니까 수월하게 들을 수 있는데, 농어업은 일요일이라고 쉬질 않잖아요. 설령 쉬다고 해도 더 멀고, 교통편도 안 좋으니까 공부하러 가기 힘든 거예요. 현실적으로 혼자 하기도 어렵고요.” (B14)

■ 교육 2 : 비즈니스 한국어 및 생활·문화교육으로의 다변화 필요

- 일반 한국어교육 외에도 취업 면접과 직장 내 의사소통에 필요한 비즈니스 한국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 한국어 소통 능력은 실제 취업 상담과 연계 과정에서 취업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직장생활 조기 적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사기 피해, 음주운전 등 반복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 범죄예방, 교통안전, 부동산 계약, 의료기관 이용 등 생활밀착형 교육이 필요하며, 한국과 전북 지역의 법·제도 및 생활 규칙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함
- 이러한 교육은 입국 초기의 일회성 오리엔테이션에 그치기보다 체류 단계와 생활주기에 따라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한국어가 전부라고 할 순 없지만, 소통이 잘 되는 게 현장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통역 지원이 안 돼도 취업 상담이나 동행 면접이 가능하잖아요. (중략) 외국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건 한국어, 우리 문화를 알려주는 교육….” (B13)

“생활·안전교육의 수요가 있어요. 사기 피해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려면… 예를 들어서 자기네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 있더라고요. 잘 모르고 문화가 다르니까요. (중략) 범죄예방 교육을 진행했는데 범죄 피해 사례가 30% 정도 감소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굉장히 효과가 좋고 필요한 교육인 거죠.” (B19)

“저는 (정착·정주에 가장 필요한 건) 교육인 거 같아요. 한국어교육, 비자 교육, 한국의 생활 규칙 교육,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B1)

“많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대부분 한국어교육이에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국 문화와 시스템에 대해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 안 하고 그냥 버리면 벌금이 나오는데, 한국 문화를 잘 모른다고 해서 벌금을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한국 오면 오리엔테이션을 하긴 하는데, 하루 만에 문화나 시스템을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문화나 시스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제공되면 좋겠어요.” (A3)

■ 체류자격 : 지역 여건과 괴리된 장기체류 및 가족동반 요건

- 외국인은 체류 기간을 주기적으로 연장해야 하는 불안정성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주 비자(F-5)를 선호함
- 그러나 전북지역 정주 의향이 높더라도 영주 자격의 소득·취업 요건이 지역별 임금 수준과 산업구조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전국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전북과 같이 상대적으로 일자리와 임금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실제 정주로 이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이에 전북지역 외국인은 현재 체류자격의 연장 가능성과 영주 자격을 취득하는 경로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과정에서 불안을 경험하거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고려하게 됨. 따라서 거주(F-2)를 넘어 영주(F-5)까지 연결되는 촘촘한 비자 사다리를 구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장기·가족동반 체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저는 영주권 취득에 대한 조건 완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턱이 너무 높아요. 예를 들어, 소득이 1억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전.” (B19)

“F-2까지는 비자 사다리가 있는데, 그다음에 영주로 안 이어져요. 비자 사다리를 영주까지 연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B2)

“비자 문제 어려워요. 졸업하고 나면 F-5 신청하고 싶은데, 소득 기준을 못 맞춰서 아마 못 할 것 같아요. 졸업하면 유학 비자로 변경할 생각이에요. 그게 근로 비자보다 *(영주 비자를 취득하기엔)* 유리한 것 같아요. 석사면 GNI 1배만 있으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고, E-7-4가 아니라 E-7-1, E-7-2, E-7-3 같은 비자로 갈 수 있어서 소득도 유리하잖아요. (중략) 만약에 가족 데려오면 영주권은 소득 때문에 더 어려워요. GNI 2배니까 1억까지 필요해요. 1억은 뭐 한국 사람들도 못 받는 건데... 이중 직업도 가질 수 없는데, 제조업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A2)

“최종 목적은 F-5예요. 어떻게 하면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나머지 조건은 다 맞췄는데 소득이 5천만 원 넘어야 하고, 정규직이 있어야 해요. (중략) *(일자리 때문에)* 전북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민 중이에요.” (A1)

“저는 F-2-7 비자인데, 영주권 취득하려면 대기업에 입사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전북은 대기업이 없는데... (중략) 외국인들이 영주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10년까지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거는 1년, 2년마다 연장해야 하는데, 연장 못 해서 갑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만약 아이들이 학교라도 다니고 있으면...” (A3)

■ 정책적 사각지대 : 의료 및 위기·긴급 지원의 공백

- 전북 외국인정책의 주요 사각지대는 의료와 위기·긴급 지원으로 확인됨. 특히 외국인 유학생(그중에서도 어학연수생), 외국인 동반가족·아동,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등은 기존 의료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남
-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갑작스러운 해고 또는 산업재해를 겪은 외국인, 미등록 외국인 등 취약 집단은 민간·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쉼터와 긴급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쉼터는 위기 상황에 놓인 외국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간과 인력이 부족하여 안정적 보호에 제약이 있으므로, 공적 지원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외국인지원 공익단체의 위기·긴급 지원 활동을 뒷받침함으로써 정책적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전북은 의료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좀 큰 거 같아요. 전남은 안심병원도 하는데 전북은 없고… 전북에서 의료지원 사업을 하는데, 매해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B2)

“제조업 노동자들도 그렇지만, 농업 노동자들, 그다음에 어업 노동자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고, 도움이 필요해요.” (B14)

“사업주가 해고해서 사업장 변경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거나 산재를 당하면 당장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센터에서 일시적으로 숙소를 제공하고 보호해요. (중략) 지금 쉼터는 한계가 있어요. 공간이 많이 부족하죠.” (B15)

라. 가족동반 정착과 생활 안정망

■ 가족동반 정착을 제약하는 주거·생계 부담

-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가족 초청·동반 체류가 가능한 비자 제도가 확대되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하는 가족 단위 체류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가족 동반 체류를 지원하는 정책이 충분하지 않아 가족을 초청한 이후 주거비와 생계 부담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정착에 어려움을 겪다가 가족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족 단위 정착·정주를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 가족 단위 정착에서 가장 큰 부담은 주거 문제로 나타남. 가족 초청 이전부터 함께 생활할 주택을 확보해야 하는데, 실제 가족 입국과 체류자격 취득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면서 월세·보증금 등 경제적 부담이 선행되며, 초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리적 불안도 커지는 것으로 확인됨
- 게다가 배우자가 취업하지 못한다면 외벌이로 주거비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외국인 가족의 생활 안정성이 더욱 취약해질 수 있음. 이에 가족 동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빈집, 노후 공공시설, 공공임대주택, 산업단지 인근 유희공간 등을 활용한 가족형 주거시설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직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을 본국으로 보내면 거기선 가족들이 넉넉히 살 수 있는데, 여기로 초청하면 어린이집 보내고, 임대료 내면 100만 원 남짓으로 4인 가족이 살아야 하잖아요. 배우자가 일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결국 생활이 힘들어서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실제로 지금 두세 가정이 왔다가 살기가 어렵다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중략) 가족을 동반한 근로자에게는 주거비 지원 정도는 해 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큰 예산이 필요하지도 않은…” (B17)

“집 때문에 어려워해요. 가족을 데리고 오면 숙소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월세방을 구하면 주거비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는 거죠. 집이 있어야만 초청을 할 수 있는데 집은 이미 계약해서 다달이 월세가 나가고 있는데 초청할 때 2~3개월 걸리고, 데려와서 정식 비자가 나올 때까지도 2~3개월 소요 되면 한 6개월이 떠버리는 거예요. 그때를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거 같아요.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월세는 내야 하니까요.” (B2)

“작은 도시들에는 분명히 생활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공 건물이 많을 거예요. 그런 걸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업 근처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아주 저렴하게 만들어 주고…” (B7)

“정말로 가족을 동반하기 위한 지원 정책들이 있어야 해요. 완전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사는 조건으로 빈집 리모델링을 해서 월세 5만 원, 10만 원으로 제공하고, 귀농하신 분들이 N잡해서 생활하시는 것처럼, 업종 제한을 풀어 준다든지 해서 진짜 가족이랑 같이 살 수 있게… (중략) 인구감소지역 살리는 지원 대상을 내국인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외국인 가족도 가능하게…” (B14)

■ 배우자의 취업 제약과 사회적 고립

- 주 체류자의 배우자 일부는 제도적으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음. 또한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도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 가능 업종 제한, 한국어 능력 부족, 지역 내 여성 일자리 부족 등으로 실제 취업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게다가 임신·육아 중인 배우자는 돌봄 부담으로 인해 교육 참여와 구직활동이 모두 제한되면서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역사회 참여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배우자 구직 수요가)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그전에는 자기 일자리를 물어보는 외국인이 많았다면 작년 부터는 F-3 비자, 자기 배우자의 일자리를 물어보러 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B12)

“지금 E-70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작년부터 배우자를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배우자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직업 활동을 거의 못 하잖아요. 한다고 해도 일반 서비스업이랄지 그런 건 할 수 없고, 간단한 농업 같은 거, 단순 노무만 가능하거든요.” (B4)

■ 외국인 가족의 임신·출산 및 자녀 보육·교육 지원 공백

- 외국인-외국인 가족의 임신·출산과 자녀 보육·교육은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체계나 일반 아동복지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됨
- 특히 외국인 부모가 한국어와 국내 보육·교육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 자녀는 보육 시설 이용, 학교 적응, 학업 성취 등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 이에 취학 전 한국어 집중교육과 학교생활 적응 지원, 중도입국자녀의 학습 및 정서 지원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도 차원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도입하였으며, 일부 시군에서도 가족 단위 정착을 촉진하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가족친화적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임신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근데 외국인-외국인은 별로 없어요. 한국인-외국인은 너무 많죠, 우리보다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외국인 임신부들한테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B4)

“(지원 공백이) 외국인 아동도 있네요. 직접 본 건 아닌데 이슬람권 아동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만 있는 상황이에요. 남자애들이랑 같이 다녀야 해서 딸을 곧 본국으로 보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중략) 다문화가족이 아니고 외국인 가족이라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 같아요.” (B2)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 신설됐어요. 도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는데, 시 자체적으로도 지원해서 합치면 70~80% 정도 지원돼요. (중략) 보육료 지원사업은 모든 시군으로 확산되면 좋을 것 같아요.” (B3)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50% 지원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20~30만 원은 자부담해야 하니까 부담이 되겠죠. 외국인도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외국인 아동도 100%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한국인 아동들이랑 똑같아요. (중략) 그래도 올해부터는 도에서 30%를 지원해 줘서, 합치면 80%가 지원돼요. 그래서 보육료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문제는 유치원이에요. 100% 지원이긴 한데, 예산 소진 시 까지라서, 나중에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없다고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B17)

“가족을 동반해야 지역을 안 벗어나요. 가족을 동반하려면 애를 키워야 하고요. 애들이 학교 다니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가족의 아이들을 지원해야 해요.” (B14)

“중도입국자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업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술, 음악, 체육 이런 활동 중심으로 하다 보니 학습이... 어학연수 개념처럼 일정 기간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받은 후에 학교에 입학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해요.” (B15)

마.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상호이해 기반 사회통합

■ 국적별 커뮤니티의 정보 공유와 정착 지원 기능

- 국적별 커뮤니티는 전북지역 생활과 취업, 체류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자,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사회적지지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음
- 특히 커뮤니티 리더는 전북 외국인정책을 자국민에게 전달하고 관련 사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 집단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외국인의 전북지역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자기 국적 리더가 있으면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그런 건 분명히 있어 보여요.” (B17)

“전북에 해당 국가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리더분들이 체계적으로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볼 데가 없어요.” (B18)

“커뮤니티 리더분들을 통한 홍보가 효과가 가장 좋아요.” (B2)

■ 일상적 교류·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상호이해 기반 사회통합

- MY세계인축제, 역사 배우기, 지역문화 체험 등은 지역사회 이해도를 높여 사회통합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실제로 참여 외국인의 만족도도 높게 확인됨

- 사회통합은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를 일방적으로 교육하거나, 내국인에게 다문화교육을 시행하는 것만으로 달성되기 어려우며, 내국인의 외국인 수용성 제고와 외국인의 지역 사회 참여 확대, 일상적 교류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음
- 이에 내·외국인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내국인의 편견을 줄이는 동시에 외국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외국인 역시 지역 문화와 공동체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닐 때 지역사회 소속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임

“인식개선 캠페인이 중요해요. 내국인들이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깰 수 있는 콘텐츠라든지, 일상생활에서 교류할 수 있는 접점이 더 많아져야 할 것 같아요. (중략)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유도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략) 반대로 외국인들도 노력이 필요해요. 사회통합이 되는 활동들에 참여를 많이 안 해요.” (B2)

“사업주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의외로 외국인을 노동자로만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노동자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같이 사회를 꾸려나가는 이주민으로 인식해야 하는 거죠.” (B15)

“(사회통합은) 솔직히 아직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국인과 외국인) 양쪽 다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문화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A3)

“지역민들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을 단위로 찾아가서 그곳의 외국인, 다문화가족, 내국인이 같이 만나서 서로 소통도 하고, 문화교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어요. (중략) 외국인을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중략) 지역에 봉사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 분들이 많은데,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도록...” (B19)

바. 추진체계 및 정책 기반

■ 전담 추진체계와 기관·부서 간 협력 기반 강화

- 현행 전북 외국인정책의 한계로 전담 조직의 부재와 기관·부서 간 연계 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됨

- 현재 체류자격과 정책 분야별로 여러 기관·부서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외국인은 기관별 기능과 지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동일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반복 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성이 높은 거점 지원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 일부 시군은 외국인 전담 조직이 부재하여 증가하는 현장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기관·부서 간 협력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동일한 체류자격을 대상으로 사업이 중복되거나, 정책이 체류자격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경향이 확인됨. 이에 기관·부서 간 실질적 연계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협력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다 나뉘어 있고, 정보 공유부터 어려운데요. 뭐. (중략) 외국인을 위한 독립적인 종합지원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스톱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센터.” (B4)

“공간만이라도 통합이 되면 외국인이 여기저기 갈 필요가 없잖아요. 출입국사무소까지 한 공간에 있으면 외국인들이 필요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중략) 그런 공간이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크게 있으면 좋겠어요. (중략) 특히 출입국사무소가 바쁘면 옆에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얼굴을 마주 봐야 실무적으로 유대 관계를 잘 형성할 수가 있고요. (중략) 도나 시군도 다문화, 유학생, 일반 외국인에 대해서 과거 다 나뉘어 있잖아요. 그게 통합되면 좋을 것 같아요.” (B2)

“이제는 시군 차원에서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시기예요. 근데 몇 개 시군만 외국인 관련 조직이 있으니, 관리를 어떻게 해요. (중략)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해요. 이제는 외국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도량 몇 개 시군에만 있는 외국인 관련 조직이 앞으로 계속 생길 거예요. 그걸 다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요.” (B8)

“요즘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어서 외국인을 위한 전문적인 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가족센터 같은 곳은 사실 업무 중 하나로 외국인지원을 하는 거라, 전문적인 외국인지원센터가 필요해요. 그래야 상담이나 통역을 넘어서 외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체류 지원까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죠.” (B17)

“기관마다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공유가 잘 안 돼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어도 각 기관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각개전투하는 느낌이라... 예를 들어, 한국어 수업을 A기관이 토요일에 하고, B기관이 일요일에 하면 기관끼리 정보가 공유되어 있으면 수요자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선택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토요일만 하는데 시간이 안 되면 일요일에 하는 B기관에 문의해 보라고...” (B16)

■ 실무자 역량 강화와 업무 지원체계 구축

- 외국인정책은 출입국관리법, 체류자격 제도,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복잡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며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실무자의 전문성과 업무 숙련도 제고가 중요함
- 그러나 현장 실무자는 체계적인 교육보다는 비자 안내서, 업무 지침, 문의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업무를 익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 관련하여,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범위와 기관의 지원 가능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에서 보수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외국인과 기업 모두에게 불편이 초래되는 실정임. 이에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과 정기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출입국 관련 법이 자주 바뀌고, 뭔가가 항상 추가되는데, 그거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전화하면 연결도 최소 20~30분이 걸리고요.” (B10)

“(담당자 교육) 없어요. 저도 비자 몰라서 계속 읽어 보고, 체류 관리 지침 정독하고 독학했어요.” (B7)

“외국인 상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담당자 교육도 조금 체계적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B12)

“사실 외국인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신입직원이 하기는 어려워요. 소통이 잘 안되기도 하고… 특성상 낯설고 어려운 업무예요. 그래서 실무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 교육 시스템, 이런 거를 갖추면 좋겠어요.” (B18)

■ 정책 데이터 축적과 환류 체계 구축

- 외국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이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해당 데이터를 정책 설계에 환류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일부 기관에서는 상담 DB, 구인·구직 DB 등을 자체적으로 축적·관리하고 있으나, 지

속적인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관련하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상담 이력과 정책 수요 등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 설계와 사업 운영을 가능케 할 필요가 있음

“구인 기업과 구직 외국인을 알게 되면 그때그때 최대한 상세하게 데이터화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B9)

“원래 없었는데 DB를 계속 모으고 관리하고 있어요. 방문하신 분들 전부 동의받아서 수집해서요. 근데 연락이 안 닿는 경우가 많아서 팔로업이 잘 안돼요.” (B3)

“수요자에 대한 데이터가 진짜 절실해요. 사업을 잘하려면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상담을 통해서 쌓아 가고는 있지만, 현저히 부족하죠. 어디에 몇 명이 체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는데, 그걸 알면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텐데…” (B2)

“통계를 누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컨트롤타워 같은 곳에서 보유하고 공유해 주면 좋겠네요.” (B17)

3. 요약 및 시사점

■ 높은 정주 의향을 실제 정착으로 잇는 기반 강화

- 심층면접 결과, 전북지역 외국인의 현재 생활 만족도와 향후 정주 의향은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 이는 전북의 조용한 생활환경과 지역적 친밀감, 공동체적 관계 등이 수도권과 차별화되는 정주 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다만 이러한 긍정적 인식이 실제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자리·주거·교통 등 정주 인프라 개선과 체류자격 관련 제약 완화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취약한 일자리와 체류자격의 높은 문턱) 전북의 취약한 일자리 여건상 장기체류(특히 영주 자격 전환), 가족 동반 정착에 필요한 소득·취업 요건 충족이 매우 어려움. 이는 외국인이 전북지역 정주를 희망하더라도 타 지역 이동을 고려하게 하는 구조적 제약으로 확인됨
 - (주거 불안정) 주거 문제는 정착 초기뿐 아니라 고용 상태, 가족 동반 등 체류 여건의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경제적·행정적·심리적 부담을 동시에 유발하여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교통 불편) 이동권·생활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의료·행정·교육·상담 기관 이용과 지역사회 참여가 제약되어 정착을 어렵게 만들
- 따라서, 전북 외국인정책은 '살고 싶은 지역'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주거·교통·체류자격 관련 제약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공식·비공식 전달체계의 연계를 통한 정책 접근성 제고

- 전북 외국인정책에 관한 정보는 기관의 공식 안내보다 커뮤니티 리더, 지인, 국적별 SNS 등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경향이 있음
- 국적별 커뮤니티는 전북지역의 생활·취업·체류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자, 초기 적응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으로 기능함. 특히 커뮤니티 리더는 정책정보를 자국민에게 전달하는 등 외국인 집단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커뮤니티 리더 육성과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공식 전달체계와의 연계를 활성화

화한다면 사업의 인지도와 참여 가능성을 높여 정책적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다만 비공식 네트워크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부정확하거나 단편적인 정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관 차원의 공식 안내도 한국어 중심의 정보 제공과 일부 주요 언어에 편중된 통·번역 지원을 보완하여 다양한 국적과 체류자격의 외국인이 여러 경로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담은 노동·체류·의료·행정·주거 등 외국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에 대해 공적 지원체계의 1차 안전망으로 기능함. 이에 상담 가능 언어 확대, 운영 시간 및 기관 위치 조정, 출입국관서·의료기관 등과의 사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안전망을 고도화해야 할 것임

■ 일자리·교육·체류자격 수요 반영 및 사각지대 최소화

- 심층면접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제기된 정책 수요는 일자리, 교육, 체류자격과 관련됨
- (일자리와 체류자격) 외국인 구직자는 자신의 체류자격에 적합한 사업체와 직무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기업 역시 고용 가능한 체류자격과 필요 서류, 행정 절차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가 유발되고 있음. 특히 E-9에서 E-7으로 전환하거나, D-2에서 D-10을 거쳐 취업 비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적 지원에서 벗어나 외국인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공백이 발생함
- 공적 지원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은 지인이나 행정사 등 비공식 경로에 의존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부정확한 정보에 노출될 위험이 커짐. 기업 역시 적합한 외국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인력난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공적 구인·구직 연계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
- 산업현장에서는 대학 전공 교육을 이수한 고급 인력보다 장기근속 가능성, 성실성, 현장 적응력, 비즈니스 한국어 능력, 직무 역량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학생·구직자·동반 배우자 등 취업 가능 인력이 지역 일자리의 직무와 근무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도 외국인 고용·관리에 필요한 절차와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상호 탐색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매칭 프로그램, 직무 체험·인턴십, 비즈니스 한국어교육, 컴퓨터 활용과 직무 관련 자격 취득 지원 등의 도입 또는 확대를 검토해 볼 만함
- 또한, 외국인 고용과 장기근속이 지역기업의 부담으로만 작용하지 않도록 외국인 고용 절차 지원, 근로·주거환경 개선, 통근 여건 보완 등 기업과 근로자를 함께 고려한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됨
- (교육과 체류자격)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운전면허·지게차 자격증 등 체류자격 연장·전환 요건 및 취업과 직결되는 교육의 수요가 매우 높은 편인데, 학업·근로·양육 등으로 교육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특정 지역과 단계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비즈니스 한국어, 교통·안전, 사기·범죄 예방, 금융·부동산 계약, 의료기관 이용, 기초 생활 질서 등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생활밀착형 교육의 필요성도 확인됨
- 따라서 단계별·지역별 수요와 외국인의 근로·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시간과 장소,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체류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전북지역 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을 함께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외국인 유학생과 가족·아동, 농어업 분야 근로자 등은 기존 의료 지원체계에서 배제되기 쉬우며, 열악한 상황에 놓인 취약 집단에 대한 권익 보호와 위기·긴급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됨. 이에 의료·권익 보호·위기 지원 영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

■ 가족 단위 정착을 위한 생활 안전망 구축

- 가족 동반은 외국인의 장기 정주 의향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지만, 주거·생계, 배우자 취업, 자녀 보육·교육 등 가족생활을 뒷받침하는 안전망이 미흡하여 생활 안정성과 정착 만족도가 낮아지고, 결국 가족 단위 정착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 초청 과정에서 입국 이전부터 가족이 함께 거주할 독립된 주거 공간을 확보해야 하나, 실제 입국과 체류자격 취득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면서 입국 여부가 불확실한 상

태에서 경제적·행정적·심리적 부담이 선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게다가 주 체류자의 소득만으로 가족 전체가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미취업 배우자의 사회적 고립 위험도 큰데, 동반 배우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가능한 업종이 한정되며, 한국어 능력 부족·지역 내 여성 일자리 부족·임신 및 돌봄 부담 등으로 교육과 구직 모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외국인 가족의 임신·출산과 자녀 보육·교육도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체계나 일반 아동복지 체계에 포괄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따라서 전북 외국인정책은 가족 동반을 단순히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생계·배우자 취업·임신과 출산·자녀 보육과 교육을 연계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강화함으로써 외국인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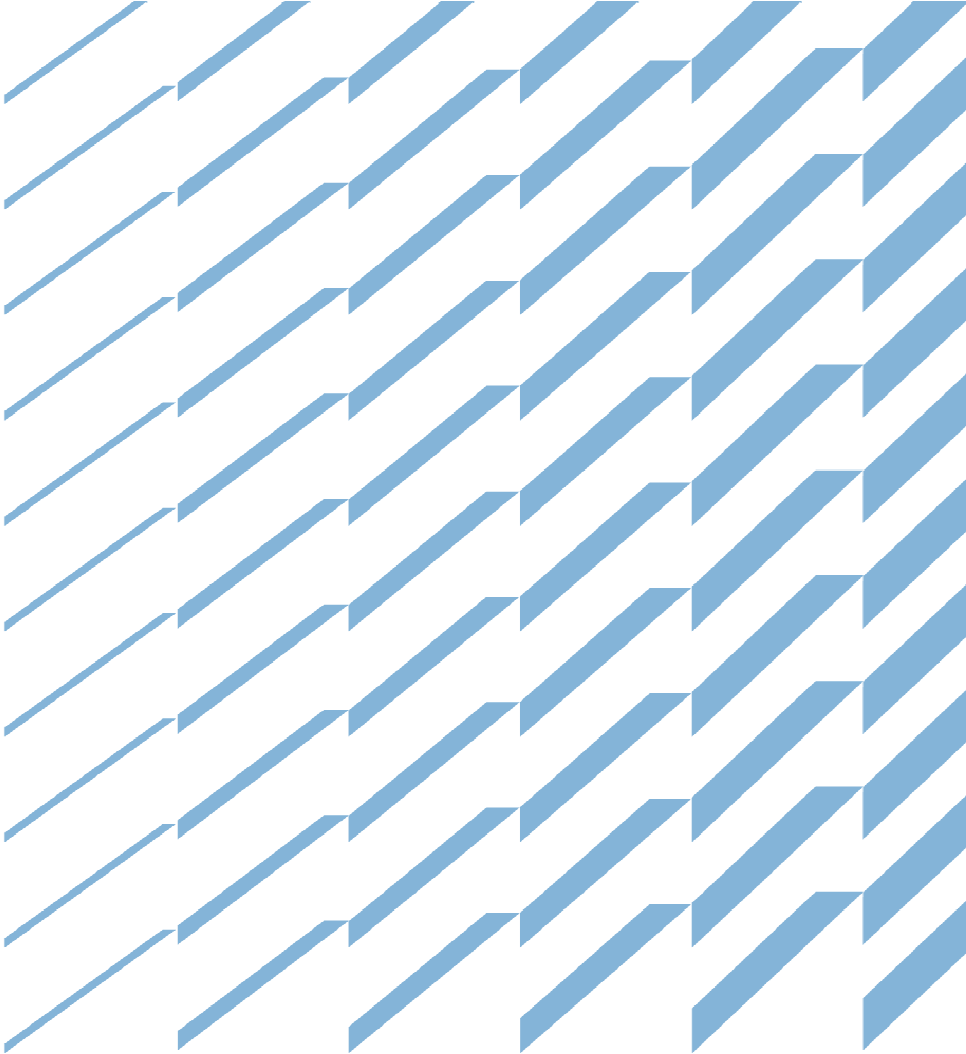
■ 일상적 상호교류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

- 사회통합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내국인 어느 한쪽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보다 상호 인식개선과 일상적인 교류가 요구됨. 외국인은 지역의 문화와 생활 규범,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내국인은 외국인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문화·역사 탐방, 세계인축제 등은 외국인의 지역사회 이해를 높이고 내·외국인의 접촉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참여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됨. 다만 단발성 행사나 일방향적인 문화교육만으로는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인식 변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내·외국인이 서로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지역사회 활동을 함께 경험하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
- 특히 지역사회 봉사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참여 기회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 마을 단위 교류, 지역행사, 봉사활동, 문화교류, 공익활동 등은 외국인의 지역 소속감을 제고하는 동시에 외국인의 지역사회 기여를 내국인이 직접 인식하여 수용성 제고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사회통합은 생활권과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내·외국인이 일상적으로 만나고 공동의 활동을 경험하면서 상호이해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추진체계 강화 및 데이터 관리·환류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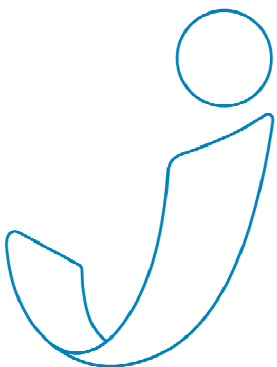
- 전북 외국인정책 추진의 주요 한계로 전담 조직과 총괄·조정 기능의 미흡, 기관·부서 간 연계 부족, 정책 데이터 부족이 반복적으로 지적됨
- 현재 체류자격과 정책 분야별로 여러 기관·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부서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사업 중복과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책 수요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위치에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할 컨트롤타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정책 실무자는 복잡하고 빈번하게 변화하는 제도를 이해해야 함에도, 체계적인 교육보다 개별적으로 지침 확인이나 관계기관 문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부담이 과중하므로, 표준화된 업무 기준과 지속적인 교육 지원이 요구됨
- 일부 기관에서는 상담 DB, 구인·구직 DB 등을 자체적으로 축적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어,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와 성과 환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기관·부서 간 협업과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여 정책 설계와 사업 개선에 지속적으로 환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4장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 개선 방안

1. 전북 외국인정책 개선 방향
2. 비전·목표 및 추진 전략
3. 전략별 세부 과제



제 4 장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 개선 방안

1. 전북 외국인정책 개선 방향

가. 외국인정책 전환의 기본 방향

- 외국인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 외국인정책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제2장과 제3장의 주요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전문가 자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함
- 그 결과, 전북은 외국인 유입과 초기 적응을 지원하는 정책 기반은 일정 수준 갖추고 있으나, 유입 이후의 성장·정주 지원, 가족 단위 정착 및 긴급위기·보호 지원, 총괄 추진체계, 데이터 관리와 환류, 상호이해 기반 사회통합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전북자치도가 향후 외국인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전환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유입 확대에서 성장·정주 중심으로 정책 기조 전환

- 최근 국가 외국인정책은 단기적인 노동력 보충과 체류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유치·육성하고,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산업과 인구구조에 부합하는 외국인의 유치부터 정착까지의 경로를 설계·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됨
- 전북자치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앵커 사업(구 RISE),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시군1외국인센터,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새만금한글학당 등 외국인의 유입과 초기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사업은 비자 취득, 필수 한국어교육, 초기 적응지원에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 외국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가족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체류로 이행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북은 유학생, 비전문취업 근로자,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취업과 숙련, 체류자격 전환, 가족 동반까지 연계되는 성장 기반과 정주 여건을 전북의 정책 경쟁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전북 외국인정책은 유입 확대 중심에서 성장·정주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이에 맞춰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외국인 유치·육성 강화

- 전북의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업과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외국인 고용과 체류 관리, 직무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외국인 근로자 역시 직무·안전·한국어교육을 충분히 이수하기 어렵고, 장기근속과 체류자격 전환, 가족 동반으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도 미흡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데 제약이 있음. 따라서 사업체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양방향 지원체계 강화가 요구됨
 - (사업체) 외국인 고용·관리 관련 교육, 행정지원, 외국인 고용 인센티브 등
 - (근로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주거·교통 지원, 쉼터 운영 등
- 전북은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졸업 이후 지역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상당수가 D-10 자격에 장기간 머무르거나 일 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실정임. 이에 지역기업 현장실습과 인턴십 확대, 취업 비자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유학생의 성장과 지역 정착 경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기반 비자 제도는 외국인 유치 자체보다 지역산업에서의 취업과 숙련, 장기 정착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 특히 지역특화형 비자는 동반 배우자의 취업 지원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정착 제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생명·식품·바이오 등 전북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대학, 연구기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북글로벌창업이민센터 등의 자원을 연계하여 외국인 유학생, 연구자, 기술창업 인재를 유치·육성하는 한편, 취업·주거·자녀 교육을 결합한 정착 경로를 설계하여 재외동포의 가족 단위 유치 및 정착을 유도해 볼 수 있음
- 이처럼 전북은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을 유치하고, 취업·숙련·체류자격 전환·가족 정착까지 연계되는 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인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개인 단위 초기 적응지원에서 가족 단위 중장기 정착지원으로 확장

- 외국인의 지역 정착은 본인의 일자리와 체류자격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경제활동, 자녀의 보육·교육, 주거·의료·교통 등 가족의 생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
- 그러나 지역특화형 비자·숙련기능인력 비자 등 장기체류와 가족 초청이 가능한 제도가 확대되면서 배우자와 자녀의 유입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현행 전북 외국인정책은 개인의 초기 적응지원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외국인-외국인 가정, 중도입국자녀 등은 다문화가족 중심의 기존 지원체계에서 배제되거나 제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족 단위 중장기 정착지원으로의 확장이 요구되는 상황임
- 예컨대, 외국인 부부는 임신·출산과 초기 양육 과정에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고, 언어장벽과 의료정보 부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배우자의 취업은 가족의 생활 안정과 지역 정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전북은 구조적으로 여성 일자리가 부족하고, 동반 배우자를 위한 취업 연계도 미흡함. 이에 배우자의 체류자격과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한 취업 상담과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농식품 가공·제조업·돌봄·서비스업 등 지역의 인력 수요와 연계하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
- 외국인 자녀는 입국 시기와 연령, 한국어 능력,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교육·복지 수요가 다르므로,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성장 단계별 학습·심리·진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도·도 교육청-학교-가족센터 등이 협력하여 지원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고,

부모 대상 한국의 보육·교육 제도와 문화에 관한 다국어 안내와 교육을 병행해야 함

- 주거지원 역시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개선을 넘어 가족형 생활 기반 조성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특히 농어촌과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은 적절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렵고, 교통·의료·보육·교육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도 낮아 장기 정착에 구조적인 제약을 받고 있음
- 외국인 가족이 밀집한 권역에 주거, 보육·교육, 의료, 교통, 상담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는 빈집·공공임대주택과 자녀 교육, 배우자 일자리를 결합한 외국인 가족 정착 모델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를 향후 지방소멸대응과 연계한 전북형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 경찰청 연계 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 교통권 보장도 가족의 출퇴근, 자녀 통학, 의료서비스 이용 등을 뒷받침하는 생활 정착 정책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함
- 한편, 가족 단위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의 제도 협의도 병행되어야 함. 영주 자격요건의 지역별 차등 적용, 동반 배우자의 취업 제한 완화 등 전북자치도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지역 현장의 수요와 사례를 축적하여 법무부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제안·협의를 하는 접근이 요구됨

4) 분절된 지원체계의 연계와 생활 안전망 강화

- 전북자치도는 외국인 관련 조례를 제정·정비하고 외국인국제정책과와 1시군1외국인센터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가족센터, 일자리센터, 대학 및 관련 출연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외국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외국인정책의 각 영역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함
- 다만 외국인정책이 대상과 사업 분야에 따라 여러 부서와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외국인의 유입과 초기 적응부터 취업, 체류자격 전환, 가족동반, 사회통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연계·조정하는 기능은 충분하지 않음

- 이 때문에, 기관 간 유사 사업이 중복되거나, 반대로 일부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거주지역에 따라 어느 기관의 지원 대상에도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 시군별 전담 인력과 예산, 기관의 전문성 차이로 인해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이 현장 실무자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편차도 확인됨
- 따라서, 도 외국인정책 전담 부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광역 단위의 컨트롤타워를 통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도 전담 부서는 정책기획·조정, 제도 개선 및 성과관리를 담당하고, 광역 단위의 컨트롤타워는 비자·취업·노동·가족 정착 등 전문 서비스와 시군 지원을 수행하며, 시군 거점은 생활 상담과 대상자 발굴·연계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1시군1외국인센터는 시군별 여건에 맞게 운영하되, 상담·통역·교육·위기 대응·전문기관 연계 등 기본서비스를 표준화하여 지역 간 편차를 일정 수준 줄여야 함
- 정책 정보와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되어야 함. 전북 거주 외국인은 정책 정보를 비공식 경로를 통해 얻는 경우가 많으며, 통역 지원의 부족이나 기관의 낮은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접근성이 높은 곳에 광역 단위 종합지원 거점을 운영하여 방문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 정착플랫폼을 다국어 안내, 구인·구직 정보, 상담·기관 연계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하여 온라인 수요에 대응하여야 함. 또한 찾아가는 상담을 병행하여 디지털 활용이 어렵거나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의료, 산업재해, 임금체불, 실직, 가정 위기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생활 안전망도 보완되어야 함. 현재 의료비 지원, 외국인 근로자 쉼터, 119 통역봉사단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원 대상과 규모가 제한적이며, 노동·법률·체류·긴급복지 상담 간 연계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긴급위기 발생 시 다국어 초기상담부터 통역, 의료기관·쉼터·노동·법률기관 동행, 사후 사례관리까지 연결되는 대응 절차를 마련·가동하는 것이 중요함
 - 미등록 외국인 등 일반적인 지원 제도에서 배제되기 쉬운 대상에 대해서도 응급의료, 아동의 보육·교육, 폭력·산재 피해 보호 등 기본권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수요·성과 중심의 데이터 관리와 정책 환류 체계 구축

- 전북 외국인정책의 대상은 유학생, 근로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계절근로자, 외국인 가족과 이주배경자녀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나, 이들의 생활실태와 정착 과정, 정책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자료는 매우 제한적임
 - 행정통계는 국적, 체류자격, 거주지역 등 기본 현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일부 기관에서는 상담 기록, 구인·구직 정보 등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기관 내부의 사업 관리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사후관리와 연계·공유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량적 데이터를 추적·관리하는 한편, 외국인·기업·대학·시군·지원기관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정기 간담회를 운영하여 현장 의견과 정책 수요 등 정성적 데이터도 함께 수집·관리해 나가야 함
 - 협의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중앙부처의 제도 신설·개선 과제를 제안하는 근거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음
 - 국적별 커뮤니티 리더를 외국인의 초기 적응, 지역사회 소통, 해외 인재 유치 등에 참여하는 정책 협력 주체로 육성하여 정책 수요와 의견을 현장감 있게 수집할 수 있음
- 체류자격과 취업제도가 복잡하고 빈번하게 변경되는 만큼 데이터의 품질과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함. 그러나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교육보다 개별 지침 확인이나 출입국사무소 문의 등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도와 시군, 대학, 외국인지원기관(가족센터·일자리센터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체류자격별 제도와 정책 변화, 상담 사례를 공유하는 정기적인 교육·간담회를 운영하고, 주요 질의와 사례를 업무 매뉴얼과 상담 데이터베이스로 추적·공유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축적된 통계와 상담 자료, 현장 의견은 정책 수요와 사업 성과의 정기적 점검, 기존 사업의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에 활용하는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6) 상호문화 통합과 지역사회 기여의 선순환으로 전환

- 전북은 사회통합의 제도적 기반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한국어 능력, 내·외국인 간 관계, 외국인 수용성, 지역사회 참여 등 실질적인 통합을 촉진하는 관계 형성과 참여 영역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어 능력은 구직과 직무, 교육·주거·의료·행정서비스 이용, 지역사회 관계 형성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착 기반임. 그러나 한국어교육의 사업별 대상이 분리되어 있거나, 교육 시간과 장소가 외국인의 근로·생활 여건과 맞지 않아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 금융, 범죄예방, 교통안전, 부동산 계약, 의료기관 이용, 법·제도 및 생활 규칙에 대한 교육도 입국 초기에 일회성으로 제공되어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공통적인 한국어교육 기반을 강화하되, 체류자격·직업·생활 단계에 따라 생활·직무·시민 교육 콘텐츠를 세분화하고, 야간·주말·온라인·마을 단위 방문 등 교육 접근성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사회통합 사업은 축제나 문화 체험 등 단기적·행사성 프로그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이러한 사업은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외국인과 지역민의 일상적인 관계 형성과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 이에 마을 활동, 자원봉사, 학교와 직장 내 상호문화교육 등 내·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교류·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함. 이러한 생활권 기반의 교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소속감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민의 외국인 수용성과 내·외국인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산업과 대학, 마을과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임. 그러나 외국인의 지역사회 기여와 안정적인 정착 사례는 지역민과 도내·외 외국인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지역 정착 의향의 제고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지역기업에서 숙련 인력으로 성장한 외국인 근로자, 전북에서 취·창업한 유학생,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자와 재외동포 등의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외국인의 유입-정착-지역사회 참여에서 종료되는 선형적 정책을 넘어, 성공적인 정착과 기여 경험이 다시 지역의 수용성 향상과 신규 외국인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인 환류 체계로 기능할 것임

나. 외국인정책 추진사업의 재구조화 방향

- 이상의 개선 방향을 반영하여 전북 외국인정책은 사업의 양적 확대보다 기 추진사업의 내실화를 우선하고, 정책 공백이 확인된 영역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재구조화의 기본 방향은 외국인의 유입부터 성장, 취업·정착, 가족동반, 사회통합까지 정책 경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축적된 정책 성과와 데이터가 다시 정책 개선과 인재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임
- 첫째, 실태조사와 정책 데이터 구축은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1시군1외국인센터·지역정착플랫폼·전북형 비자 제안 협의체 등 기존 추진체계는 기능 표준화와 고도화를 통해 내실화를 기함. 아울러, 도 외국인정책 전담부서의 정책기획·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컨트롤타워 운영 등을 통해 추진체계를 체계화함
- 둘째, 유학생 관련 사업은 유치·인재 양성 중심에서 지역 취업·정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직무 인턴십, 취·창업 지원, 비자 상담과 전담 지원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함
- 셋째, 기존 비자 사업은 취업·근속, 체류자격 전환, 가족동반 지원을 연계하여 장기 정착 기능을 강화하고, 재외동포 정책 역시 취업·주거·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관계 형성 등 유치 이후의 정착지원 기능을 보완함

- 넷째, 교육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을 기반으로 직무, 안전, 생활, 법·제도 및 지역 이해를 포괄하도록 내용과 대상을 확대함.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기업의 근로·주거환경 개선과 외국인 고용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병행함
- 다섯째, 외국인 근로자 쉼터, 긴급 위기·의료 지원, 외국인 아동 보육·교육, 외국인 가족 주거지원 등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동반 정착 및 배우자 취업, 임신·출산·초기 양육, 이동권 등 기존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영역을 보완함
- 여섯째, 사회통합 사업은 일상적 교류와 지역사회 참여, 갈등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 글로벌 앰배서더,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및 재외동포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지역 정착과 기여 성과가 새로운 인재 유입과 전북 이민브랜드 확산으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를 구축함
- 한편, 체류자격별로 정착·정주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 공백과 그에 따른 중점 보완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D계열은 졸업 이후 성장과 취·창업 연계가 미흡하고, 비자 상담 등 전담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특정활동(E-7)은 지역기업 취업·근속과 거주·영주 자격으로 이어지는 비자 사다리 구축이, 비전문취업(E-9)은 긴급 위기·의료·쉼터 지원이 필요함
 - ※ 계절근로(E-8)는 전북도 차원의 개입을 통해 타 지자체에 비해 이탈률이 낮고, 관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등 충분 대응 수준이라고 판단되지만, 향후 신규 도입이 예상되는 '농어업 숙련 비자'에 대응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현시점에서는 정착·정주형 체류자격과 직접 연계되지 않아 논의에서 제외함
 - 거주(F-2)는 배우자 취업과 자녀 보육·교육, 영주 자격 연계가 필요함. 결혼이민(F-6)은 가족 센터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나, 취업 연계와 자립 지원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재외동포(F-4)는 유치·정착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함
 - 지역 기반 비자(R계열)는 가족형 주거, 배우자 취업, 자녀 보육·교육 등 가족 단위 패키지 지원이 요구됨
 - 기타 체류자격 및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는 긴급 위기·의료·쉼터 지원과 자녀 보육·교육 등 인권적 차원의 최소한의 안전망이 작동하도록 해야 함

- 이에 체류자격별로 해당 영역을 중점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표 4-1] 체류자격별 정착·정주 정책 대응 수준과 중점 보완 과제

구분		대응 수준	중점 보완 과제
D계열	유학·연수(D2~D4)	㉠	성장·취업·창업 연계, 전담 지원체계, 비자 상담
	구직(D-10)	○	
E계열	특정활동(E-7)	㉠	취업·근속 지원, 비자 사다리 구축
	비전문취업(E-9)	㉠	긴급 위기·의료·쉼터
F계열 · 외국국적동포	거주(F-2)	㉠	배우자 취업, 자녀 보육·교육, 영주 자격 연계
	영주(F-5)	●	-
	결혼이민(F-6)	●	(취업 연계·자립 지원 지속 보완 필요)
	외국국적동포(F-4)	㉠	유치·정착 지원
R계열	지역특화형(본인+동반가족)	㉠	가족형 주거, 배우자 취업, 자녀 보육·교육
기타(미등록 등)		㉠	긴급 위기·의료·쉼터, 자녀 보육·교육

주1 : ○ 대응 미흡, ㉠ 부분 대응, ● 충분 대응

주2 : 대응 수준은 제2장·3장의 분석 내용과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임

자료 : 연구진 작성

2. 비전·목표 및 추진 전략

■ 비전

-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의 비전으로 **“이민자와 지역의 성장·상생이 체감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제안함
 - 이는 외국인정책의 성과를 단순한 유입 규모가 아니라, 이민자와 지역민이 일상생활과 지역 사회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지향을 담고 있음
 - 또한, 외국인을 일시적인 노동력이나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의 인구·경제적 활력을 높이고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반영함
 - 나아가, 외국인정책을 인구정책, 산업정책,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략으로 확장하고자 함
- 비전의 핵심 키워드인 ‘성장’은 외국인의 개인적·사회적·직업적 성장과 전북의 산업·경제·공동체적 성장을 함께 의미함
 - 외국인은 교육과 직무 경험, 한국어 능력 향상, 취·창업과 숙련 형성, 체류자격 전환 등을 통해 전북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는 한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지역은 제조업·농어업 등 인력난을 완화하고, 외국인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학의 존립 기반 및 국제화 역량 강화, 경제활동인구와 소비인구 확대 등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 특히 전북의 농생명·식품·제조업 등 특화·주력산업과 외국인 유학생, 숙련인력, 창업 인재, 재외동포 등을 연계함으로써 외국인의 성장과 지역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 또 다른 핵심 키워드인 ‘상생’은 이민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권리 보장, 지역민과의 상호 이해, 지역사회 참여와 기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관계를 의미함
 -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지역에 중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체류자격뿐만 아니라, 의료·보육·교육·긴급 보호 등 생활 전반의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함
 - 동시에 이민자와 지역민이 서로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활동과 공동체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상호문화적 통합을 실현하고자 함
 -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기여가 지역민의 수용성 향상과 전북 이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으로 이어지고, 다시 새로운 인재와 가족의 유입을 촉진하는 선순환을 지향

- 이를 통해 전북은 외국인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지역이 아니라, 유입된 이민자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며, 이들의 지역사회 기여를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성장·상생형 지역으로 나아가고자 함

■ 정책목표

-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는 “유입된 외국인이 전북에서 성장 기회를 얻고, 가족과 함께 정착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전북형 성장·상생 이민생태계 구축”으로 설정함
- 이는 외국인의 ‘유입’, ‘성장’, ‘가족동반 정착’, ‘지역사회 참여와 기여’를 각각의 정책 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적인 경로로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음
 - 첫째, 외국인의 유입은 지역산업과 대학,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정착과 지역사회 기여의 성과가 다시 새로운 인재 유치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 둘째, 유입된 외국인이 교육, 인턴십, 취·창업, 숙련 형성 및 체류자격 전환 등을 통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셋째, 외국인의 장기 정착은 가족생활의 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만큼, 배우자 취업, 자녀의 보육·교육, 가족형 주거, 생활 안전망 등을 포괄하는 가족 단위 정주 인프라를 강화하여야 함
 - 넷째, 정착한 외국인이 지역산업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고, 지역민의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이민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함
- 이때 ‘전북형 성장·상생 이민생태계’는 외국인의 유입부터 성장, 정착, 사회통합, 환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체류자격의 이민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선순환 기반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의미함
- 이는 외국인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성장과 안정적인 정착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성장이 다시 외국인의 기회를 확대하는 상호의존적 구조를 형성하여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려는 것임

■ 정책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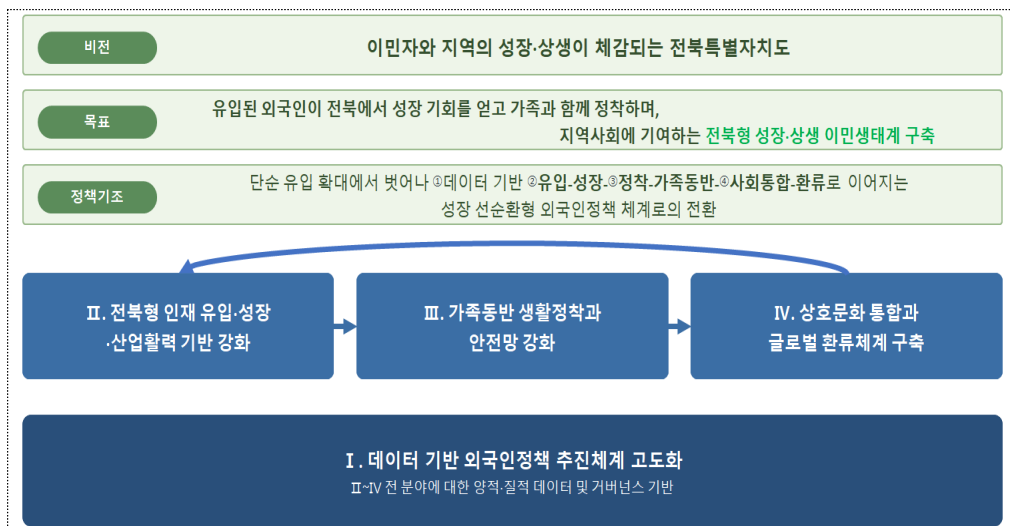
- 정책 기초는 “단순 유입 확대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유입-성장-정착-가족동반-사회 통합-환류로 이어지는 성장 선순환형 외국인정책 체계로의 전환”으로 설정함
 - 첫째, 단순 외국인의 규모가 아니라, 정책 수요와 취업·근속, 체류자격 전환, 가족동반, 지역 사회 참여 등 정착·정주 중심의 성과지표에 기반한 정책으로 전환
 - 둘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창업 인재, 재외동포, 동반가족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취창업·숙련·체류자격 전환과 장기 체류가 연결되는 단계별 성장 경로를 마련하고, 유입 중심에서 성장·정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 셋째, 개인의 초기 적응지원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 안정, 주거·보육·교육·의료 등을 포괄하는 가족 단위 중장기 정착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 넷째, 이민자와 지역민이 일상적으로 교류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상호문화 통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 다섯째, 외국인의 정착과 지역사회 기여 성과가 지역의 수용성 향상, 전북 이민브랜드 확산, 신규 외국인 유입으로 연결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선순환형 정책으로 전환
- 이러한 정책 기초를 바탕으로 전북 외국인정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이민자와 지역사회가 정책 성과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4대 추진 전략

- 비전과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①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고도화, ② 전북형 인재 유입·성장·산업활력 기반 강화, ③ 가족동반 생활정착과 안전망 강화, ④ 상호문화 통합과 글로벌 환류체계 구축의 4대 추진 전략을 설정함
- (전략 ①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고도화) 외국인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고, 도와 시군 및 유관기관 간 총괄·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전략 ② 전북형 인재 유입·성장·산업활력 기반 강화) 유학생, 숙련인력, 창업 인재, 재외

동포 등을 지역산업과 연계하고, 교육·취·창업·숙련 형성·체류자격 전환·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구축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전략 ③ 가족동반 생활정착과 안전망 강화)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배우자 취업, 보육·교육, 의료, 교통, 노동권, 생활상담 등을 연계하고, 긴급 위기에 대응하는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여 가족 단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 (전략 ④ 상호문화 통합과 글로벌 환류체계 구축) 이민자와 지역민의 일상적 교류와 지역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의 정착과 기여 성과를 지역의 수용성 향상, 전북 이민 브랜드 확산, 새로운 인재 유치로 연결하는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이상의 4대 추진 전략은 상호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추진체계를 공통 기반으로 외국인의 유입·성장, 가족동반 정착, 지역사회 통합 및 글로벌 환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선순환형 정책 체계를 구성함
- 전략 ①은 전략 ②부터 전략 ④까지의 추진과 성과가 다시 전략 ②의 추진으로 환류되는 전 과정에서 공통 기반으로 기능함



자료 : 연구진 작성

[그림 4-1] 전북 외국인정책 비전·목표·추진 전략 체계도

3. 전략별 세부 과제

- 세부 과제는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정책 공백을 보완하는 한편, 전략 간 연계와 정책 성과의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함
- 세부 과제는 계속 추진 17개, 수정·보완·확대 추진 23개, 신규 추진 11개 등 총 51개임
- 이를 추진 전략별로 구분하면 ①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고도화 12개, ②전북형 인재 유입·성장·산업활력 기반 강화 14개, ③ 가족동반 생활정착과 안전망 강화 13개, ④ 상호문화 통합과 글로벌 환류체계 구축 12개로 구성됨



자료 : 연구진 작성

[그림 4-2] 전북 외국인정책 전략별 세부 과제(안)

- 비전·목표·추진 전략과 전략별 세부 과제를 종합한 전체 체계도 및 세부 과제별 추진 시기는 다음과 같음
- 추진 시기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기 추진사업을 재구조화한 과제가 다수 포함됨에 따라 단기 추진과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비전	이민자와 지역의 성장·상생이 체감되는 전북특별자치도			
목표	유입된 외국인이 전북에서 성장 기회를 열고, 가족과 함께 정착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전북형 성장·상생 이민생태계 구축			
정책기조	단순 유입 확대에서 벗어나, ①데이터 기반 ②유입-성장-③정착-가족동반-④사회통합-환류로 이어지는 '성장 선순환형' 외국인정책 체계로의 전환			
4대 전략별 세부과제 (★ 표시는 신규 사업)				
전략	I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고도화	II 전북형 인재 유입·성장·산업활력 기반 강화	III 가족동반 생활정착과 안전망 강화	IV 상호문화 통합과 글로벌 환류체계 구축
전략별 목표	양적·질적 데이터 구축,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정책 총괄·조정 기능 고도화	외국인재·인력과 지역산업 연계, '취·창업·체류자격 전환·정착' 성장 경로 구축	가족동반 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보육/교육·의료·노동권·생활상담 정주 인프라 조성, 생활 안전망 강화	이민자·지역민 간 일상적 교류 및 수용성 제고, 정착 성공사례·재외동포 네트워크 환류로 전북 이민브랜드 확산
전략별 세부과제	양적데이터 - 외국인력 실태 및 수요 정기조사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외국인가족이주배경자녀생활실태 정기조사★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참여자 만족도 및패널조사	인프라 - 전북특별법 출입국특례 - 계절근로자 기숙사 - 공공형 계절근로	한국어-KIIP - 전북 생활·직무 한국어 콘텐츠 개발 - 권역별·특성별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 법무부 지자체 연계 사회통합프로그램 - 이민자 사회통합 운영기관 확대	상호교류·수용성 - 세계전북도민의 날 - 도민 수용성·갈등예방 상시교육 -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사업 - 공익단체 활성화 지원 -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링 -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 성장지원 사업★ - 체류 외국인 대상 전북 생활·문화교육★ - 외국인 인식개선 공익 캠페인★
	질적데이터 -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 전북형 비자·정주제도 개선 협의체 - 전북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간담회 추진체계 1사군 1외국인센터 내실화 및 표준서비스 구축 - 지역정착플랫폼 고도화 -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협업 - 전북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지정운영★ - 전북도 외국인정책 전담부서 강화★	취·창업 - 앵커(RISE) 연계 유학생 지역 취업·정착 - 유학생 직무 인턴 - 지역특화형 비자 취업·근속 지원 - 인바운드 창업 지원사업 - 지역산업 맞춤형 직무안전한국어 통합교육 체류자격 - 지역기반비자 발급지원금 지원 - 국적 취득 지원 - 숙련기능인력(E-7-4/R) 추천제 기업지원 - 외국인 고용기업 환경 개선 -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기업 선정 - 외국인 고용친화 우수기업 인증제★	근로자안전망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확대 가족동반정주지원 119 통역봉사단 - 외국인 주거개선 지원사업 - 긴급위기·의료 지원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 외국인 입산부 안심출산초기양육지원사업★ - 가족동반 정착 패키지 시범사업★ - 외국인 운전면허증 취득 지원사업★	환류체계 -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확대 - 고려인·아시아 교류지역 전통문화보급 - 전북 이민자 글로벌 앰배서더 네트워크 구축★ - 전북재외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재외동포 유치·정착모델 발굴

자료 : 연구진 작성

[그림 4-3] 전북 외국인정책 체계도

[표 4-2] 세부 과제별 추진 시기 및 주요 성과지표(안)

시기	세부 과제	주요 성과지표	시기	세부 과제	주요 성과지표
단기·정기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조사 완료, 보고서 발간, 응답률	단기·상시	법무부 지자체 연계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교육과정 개설 수, 참여자 수
단기·정기	외국인력 실태 및 수요 정기조사	조사 완료, 보고서 발간, 응답률	중기·상시	이민자 사회통합 운영기관 확대	운영기관·지역학습관 수, 교육과정 확대 수
단기·정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참여자 만족도 및 패널조사	조사 완료, 패널조사 체계 구축	단기·정기	권역별·특성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교육 참여자 수, 농어촌·산간·도서 지역 참여자 비율
중기·정기	외국인가족·이주배경자녀 생활실태 정기조사	조사체계 구축, 조사 완료	중기·상시	전북 생활·직무 한국어 콘텐츠 개발	콘텐츠 개발·활용 건수
단기·상시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행사 참여, 공동연구·자료 발간	단기·상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상담·통번역·교육 지원 건수, 만족도
단기·상시	전북형 비자·정주제도 개선 협의체	협의회 개최, 참여기관 수, 과제 발굴	중기·상시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확대	조례 개정, 쉼터 개소·이용자 수
단기·정기	전북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간담회	교육·간담회 개최, 참여기관·실무자 수	단기·상시	119 통역봉사단	통역 지원 건수, 대응률, 통역봉사자 수
중기·상시	1시군1외국인센터 내실화 및 표준서비스 구축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적용 기관 수	단기·상시	긴급위기·의료 지원	긴급지원 건수, 협약 의료기관 수
중기·상시	지역정착플랫폼 고도화	다국어 콘텐츠 등록 건수, 이용자 수	단기·상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지원 아동 수, 아동 1인당 지원 수준
단기·상시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협업	협의회 개최, 제도개선 건의 건수	단기·정기	외국인 주거개선 지원사업	지원 가구수, 가족동반 가구 지원 비중
중기·상시	전북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지정·운영	센터 지정, 상담·통번역·사례관리	중기·상시	외국인 임신부 안심출산·초기양육 지원사업	통역·의료동행 건수, 양육정보 제공 건수
장기·한시	전북도 외국인정책 전담부서 강화	조직 개편 완료, 전담 인력·팀 확보	중기·상시	가족동반 정착 패키지 시범사업	참여 시군·가구 수, 만족도
장기·상시	전북특별법 출입국특례	과제 발굴, 협의 건의 건수	단기·상시	외국인 운전면허증 취득 지원사업	교육 참여자 수, 필기시험 합격률
중기·상시	계절근로자 기숙사	개소 수, 입주율	단기·정기	세계전북도민의 날	행사 참여 인원, 국가·커뮤니티 수, 만족도
단기·정기	공공형 계절근로	참여 농가·배치 근로자 수	단기·상시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사업	지원 커뮤니티 수, 지역민 공동 참여자 수
중기·상시	앵커(RISE) 연계 유학생 지역 취업·정착	참여 대학·유학생 수, 수료율	단기·상시	공익단체 활성화 지원	지원 단체 수, 공익활동 실행 건수
단기·정기	유학생 직무 인턴	인턴 참여자 수, 참여 기업·유학생 만족도	단기·상시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링	멘토·멘티 매칭 건수, 활동 완료율
단기·상시	지역특화형 비자 취업·근속 지원	본인·배우자 취업·근속 지원 건수	단기·상시	도민 수용성 갈등예방 상시교육	시행 횟수, 교육 참여자 수, 강사 양성 인원
단기·정기	지역산업 맞춤형 직무·안전·한국어 통합교육	수료자 수, 교육 만족도	중기·정기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 성장지원 사업	리더 양성 인원, 홍보·소통 파트너 활동 건수
중기·상시	인바운드 창업 지원사업	창업 상담·지원 건수, 창업비자 전환 건수	중기·상시	체류 외국인 대상 전북 생활·문화교육	운영 횟수, 교육 참여자 수, 만족도
단기·상시	지역기반비자 승급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자 수	중기·상시	외국인 인식개선 공익 캠페인	제작·송출 건수, 캠페인 도달 인원(조회수 등)
단기·상시	숙련기능인력(E-7-4/R) 추천제	추천 인원, 신청 대비 추천율	중기·상시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확대	학당 수, 교육 참여자 수, 전북 유입 연계 수
단기·상시	국적 취득 지원	지원 인원, 도내 거주 유지율	단기·정기	고려인·아시아 교류지역 전통문화보급	교류 프로그램 운영 횟수, 참여 인원 수
단기·정기	외국인 고용기업 환경개선	지원 기업 수, 개선 건수, 만족도	중기·정기	전북 이민자 글로벌 앰배서더 네트워크 구축	위촉 인원·국가 수, 활동 건수
단기·정기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기업 선정	선정 수, 외국인 고용인원	단기·상시	전북재외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재외동포 유치·정착모델 발굴	상담·정책지원 수, 유치·정착모델 개발 여부, 도내 신규 유입자 규모
중기·정기	외국인 고용친화 우수기업 인증제	인증기업 수(누적), 취소·관리 건수			

자료 : 연구진 작성

가.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고도화

- (목표) 양적·질적 데이터 구축,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정책 총괄·조정 기능 고도화
- 급변하는 외국인정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외국인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고, 이를 정책 수요와 사업 성과에 연계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분산된 정책 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 기반 마련이 요구됨. 이를 위해 제안하는 세부 추진 과제는 양적 데이터 분야 4개, 질적 데이터 분야 3개, 추진체계 분야 5개 등 총 12개로 구성됨
- (양적 데이터)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외국인력 실태 및 수요 정기조사,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참여자 만족도 및 패널조사, 외국인가족·이주배경자녀 생활실태 정기조사
- (질적 데이터)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전북형 비자·정주제도 개선 협의체, 전북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간담회
- (추진체계) 1시군1외국인센터 내실화 및 표준서비스 구축, 지역정착플랫폼 고도화,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협업, 전북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지정·운영, 전북도 외국인정책 전담부서 강화

[표 4-3]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고도화 관련 세부 과제(안)

전략 목표	과제 분야	세부 과제
양적·질적 데이터 구축	양적 데이터	1-1-1.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1-1-2. 외국인력 실태 및 수요 정기조사
		1-1-3.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참여자 만족도 및 패널조사
		1-1-4. 외국인가족·이주배경자녀 생활실태 정기조사
	질적 데이터	1-2-1.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1-2-2. 전북형 비자·정주제도 개선 협의체
		1-2-3. 전북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간담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정책 총괄·조정 기능 고도화	추진체계	1-3-1. 1시군1외국인센터 내실화 및 표준서비스 구축
		1-3-2. 지역정착플랫폼 고도화
		1-3-3.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협업
		1-3-4. 전북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지정·운영
		1-3-5. 전북도 외국인정책 전담부서 강화

1) 기존 사업 재구조화

- (계속 추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 (보완 : 조사 정례화) 외국인력 실태 및 수요 정기조사
 - 도내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일회성 조사를 2~3년 주기의 정기조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조사 결과는 ‘추진 전략 ②’의 각 사업과 연계하는 한편, 외국인력 유치·활용 제도 개선을 위한 법무부 협의의 근거자료로 활용
 - 글로벌대학30 또는 앵커(RISE) 사업과 연계하여 조사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
- (확대 : 패널조사 포함)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참여자 만족도 및 패널조사
 -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제도의 취지상, 참여자의 근속·정착 과정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동일 대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패널조사로 조사 방식을 확대할 필요
 - 패널조사 방식은 경북·K드림외국인지원센터의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패널조사’ 참고 가능
- (확대 : 정주제도 개선 포함 및 참여기관 확대) 전북형 비자·정주제도 개선 협의체
 - 기존 협의체가 비자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주거·고용·가족생활 등 정주 과정의 제도적 애로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과 논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기준 등 도(道) 차원에서 조정·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영주 자격요건 완화·부업 허용 등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구체화하여 법무부와 협의
- (확대 : 교육 대상 확대) 전북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간담회
 - 기존에는 1시군1외국인센터 종사자를 중심으로 역량강화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외국인정책과 체류자격 제도의 잦은 변경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가족센터·일자리센터·외국인주민지원센터·대학 등 도내 유관기관 실무자로 교육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육과 함께 기관 간 사례 및 정보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
- (보완 :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기관 연계 등) 1시군1외국인센터 내실화 및 표준서비스 구축
 - 현재 13개 시군 가족센터·일자리센터·산단 내 복합센터 등을 해당 지역 외국인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관의 고유 기능과 전문성 차이로 서비스 범위와 수준에 편차가 발

생하고 있음. 이에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광역 단위 통역 인력풀(전북 외국인 종합 지원센터 연계)을 공동 활용하여 상담의 전문성과 지역 간 서비스 균질화를 강화할 필요

○ (보완 : 기능 강화) 지역정착플랫폼 고도화

- 기존 지역정착플랫폼은 외부 링크 연결·이미지 형태 게시 등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가 대부분 한국어로 제공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국어 지원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
- 도내 외국인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력난·미스매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플랫폼에 구인·구직 정보, 인턴십, 취업 상담·특강·박람회 등 취업지원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기업별 고용 가능 비자와 근로조건·복지 정보를 다국어로 상세히 제공하는 ‘마이부산’ 사례를 참고 가능

부산기관 일자리공고













Total 39건 1 페이지

번호	제목	조회	날짜
39	거성기업 라병사업부 (건조기,세탁기) 부품 조립 정규인원 분야별 모집	58	2026-05-19
38	(주)그랜드애플 그랜드애플, 비래 홀 (영양부) 주임,계장급 모집	69	2026-05-19
37	(주)그랜드애플 채용시 마라 그랜드애플,비래 홀(영양부)에서 함께 일할 직원분 구합니다.	94	2026-05-19

모집기간 2026-07-09 ~ 2026-07-31 모집중

ishga qabul qilish davri 2026-07-09 ~ 2026-07-31 Yollash

E-7 비자지원 정규직 계약직

서비스

부산 중구

월급 2,830,000원

F-2 F-4 F-5 F-6 이-7 +2 VISA

E-7 vizasini qo'llab-quvvatlash, Domsij, mahsul dastxozmasi bo'yicha to'dam

xizmat

Jung-gu, Pusan

월급 2,830,000원

F-2 F-4 F-5 F-6 E-7 +2 VISA

상세 내용

담당 업무

- 고객 응대 및 호텔 업무
- 고객 서비스 제공
- 예약 관리 업무
- 시설 유지 보수
- 이벤트 기획 지원

자격 요건

- 제2외국어 가능자

우대 조건

- 영어가능자, 영어능동자, 일본어 가능자, 중국어 가능자, 해당 직무 근무경험

복지 및 혜택

- 연차, 퇴직금, 구내식당(사원식당), 4대 보험

근무지

Tafsilotlar

Mas'uliyatlar

- Mijozlar bilan o'zaro aloqa va mehmonxona faoliyati
- Mijozlarga xizmat ko'rsatish
- Bron qilishni boshqarish
- O'l'oklarga texnik xizmat ko'rsatish
- Tashvirlarni rejalashtirishda yordam

Muvofiqlik talablari

- Ikkinchi xorijiy tilni mukammal bilishi

Imtiyozli shartlar

- Ingliz tilida so'zlashuvchilar, ingliz tilida ravon so'zlashuvchilar, xitoy tilida so'zlashuvchilar, tegishli ish tajribasiga ega
- Ijtimoiy ta'minot va imtiyozlar
- Yillik ta'til, ishdan bo'shatish nafaqasi, kompaniya oshxonasi (xodimlar oshxonasi), to'rtta asosiy sug'urta rejasi

Ish joyi

자료 : 마이부산 홈페이지([https://mybusan.kr/bbs/board.php?bo_table=job#googtrans\(ko|ko\)](https://mybusan.kr/bbs/board.php?bo_table=job#googtrans(ko|ko)))

[그림 4-4]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통합플랫폼 일자리공고 사례

○ (보완 : 협업 기능 강화)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협업

- 출입국관서는 체류자격 심사·관리 등 외국인·이민정책 집행의 핵심 기관인 만큼, 지역 이민 현안에 대한 정책 협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단순 교류 중심 협업을 '지역 민생경제 이민정책협의체' 운영으로 전환하여,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협의를 추진
- '전북형 비자·정주제도 개선 협의체' 및 '전북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간담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현장 의견과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공유·협의를 할 필요

[표 4-4]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고도화 관련 기존 사업 재구조화

세부 과제	기존 사업	재구조화 방향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계속 추진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외국인력 실태 및 수요 정기조사	외국인 필요인력 실태조사	보완	조사 정례화
지역특수형 비자사업 참여자 만족도 및 패널조사	지역특수형 비자 만족도 조사	확대	패널조사 포함
전북형 비자·정주제도 개선 협의체	전북형 비자 제안 협의체	확대	정주제도 개선 포함, 참여기관 확대
전북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간담회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확대	대상 확대(1외국인센터 → 전 기관)
1시군1외국인센터 내실화 및 표준서비스 구축	체류서비스기관 확대 (1시군1외국인센터)	보완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기관(통역폴) 연계 등
지역정착플랫폼 고도화	지역정착플랫폼 구축	보완	기능 강화(다국어 안내, 취업지원, AI 챗봇 서비스 등)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협업 (지역 민생경제 이민정책협의체)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협업	보완	협업 기능 강화 (단순 교류 → 이민정책 협의)

2) 신규 사업 제안

1-1-4	외국인가족·이주배경자녀 생활실태 정기조사	전북도
-------	------------------------	-----

■ 추진 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 내용

- 최근 가족을 동반하여 체류하는 외국인과 이주배경자녀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다문화가족 중심 통계만으로는 외국인 부부로 구성된 가족, 중도입국자녀, 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 등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움

- 외국인가족과 이주배경자녀의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정책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족구성권과 체류자격, 주거, 소득·고용, 한국어 능력, 보육·교육, 학교생활 적응, 의료서비스 이용, 차별·갈등 경험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조사 결과는 외국인 가족의 정착지원, 이주배경자녀의 보육·교육지원, 임신·출산·양육지원 등 ‘추진 전략 ③ 가족동반 생활정착과 안전망 강화’와 관련한 신규 사업 발굴과 기존 추진사업 개선을 위한 실증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도내 외국인가족과 이주배경자녀를 대상으로 가족구성, 체류자격, 주거, 소득·고용, 한국어 능력, 보육·교육, 학교생활 적응, 의료서비스 이용, 차별·갈등 경험, 지역사회 관계, 정착 의향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 데이터로 축적·활용
- 사업 대상 : 도내 외국인가족 및 이주배경자녀
- 사업 기간 : 2027년 조사 체계 및 조사표 설계, 2028년 최초 조사 시행 후 2~3년 주기로 정기 실시
- 추진체계 : 전북도 총괄, 전북여성가족재단 또는 전문조사기관 설계·분석, 시군·가족센터·교육청·학교·어린이집·출입국관서·외국인 커뮤니티 등 협력
- 사업 시행 방식 : 전북도 자체 예산을 기본으로 추진하되, 조사 설계와 기초연구 등 일부는 전북여성가족재단 연구과제와 연계하여 추진
 - 주요 조사 대상의 국적을 고려하여 질문지를 다국어로 번역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

■ 참고 사항

- 도내 외국인가족과 이주배경자녀의 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가족센터가 보유한 정보와 외국인 커뮤니티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을 거쳐 법무부(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조사 대상자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김포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로부터 90일 이상 관내 거주 취학 대상 외국인 아동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외국인 아동 취학 통지’를 추진한 사례가 있음
(※ 참고 : ‘2026년 제1차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 2026.7.16.)

1-3-4	전북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지정·운영	전북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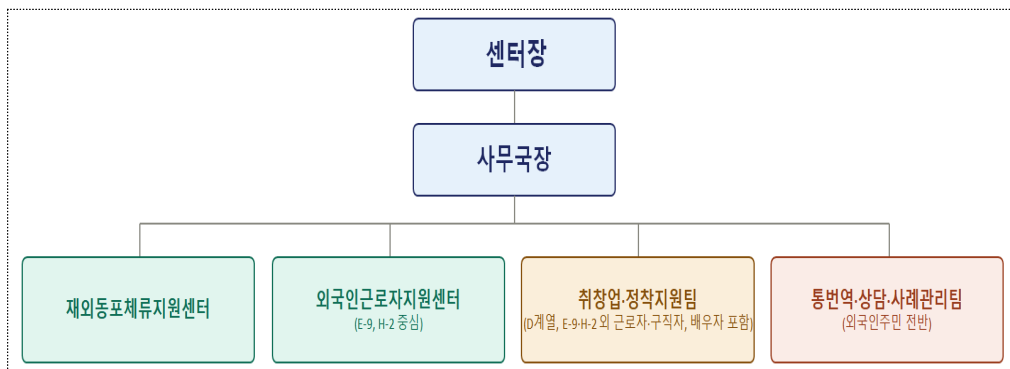
■ 추진 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 내용

- 현재 전북의 외국인정책·추진사업은 여러 부서와 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며, 외국인주민의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기관 간 사업을 조정·연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유사 사업이 중복되거나, 지원 대상과 분야에 따라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근로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유학생·졸업생, 전문·숙련인력, 외국인 구직자, 창업 희망자 등 취·창업 을 기반으로 지역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또한 상담 서비스가 도심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농어촌·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외국인주민의 접근성이 낮은 실정임
- 이에 분산된 외국인 지원 기능을 연계·조정하고, 대상별·분야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북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음
- 종합지원센터는 기존 외국인 근로자 및 재외동포 지원 기능에 취·창업 및 정착지원, 통·번역, 상담·사례 관리 등의 기능을 결합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의 광역 거점이자 정책 실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운영함
- 주요 사업으로는 ‘취창업·정착지원팀’의 유학생·졸업생 성장경로 설계 프로그램과 인력 유치·비자 컨설팅, ‘통번역·상담·사례관리팀’의 권역별 순회 통합상담, 상담 사례 DB 구축 및 정책 환류 등을 제안함

- 이를 통해 유학생·졸업생, 외국인 구직자, 창업 희망자, 전문·숙련인력, 재외동포 등 다양한 외국인주민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전북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재외동포체류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취창업·정착지원팀, 통번역·상담·사례관리팀 등 4개 부서로 구성



자료 : 연구진 작성

[그림 4-5] 전북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조직도(안)

- (재외동포체류지원센터) 재외동포 유치·정착 지원, 생활정보 제공, 지역사회 통합 기능 수행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비전문취업 및 방문취업 근로자 중심으로 노동·생활 상담, 교육, 긴급 위기 대응 등을 지원하는 기능 수행
- (취창업·정착지원팀) 기업·농어업 경영체·소상공인 등 지역 일자리 수요처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시군 일자리센터·대학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유치와 취·창업 및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능 수행
 - E-9·H-2 근로자 외에 취·창업을 기반으로 지역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을 전담 지원함으로써, 기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와 구직자를 공백 없이 지원 가능
 - 종합지원센터는 취·창업 기반 자립·정착지원을, 가족센터는 가족생활과 지역사회 적응지원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되, 대상자의 복합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상호 연계·협력

- 특히 취창업·정착지원팀은 그간 전담 지원체계가 미흡했던 유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유학생·졸업생 성장경로 설계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

- (개요) 학교 밖 노동,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의 유출, 졸업 후 구직(D-10) 단계의 지원체계 부족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유학생·졸업생이 지역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별 경로를 설계하는 프로그램
- (주요 내용) 각 대학 국제교류처 연계 체류자격별 진로 로드맵 구축, 지역특화형 비자 이끄미단 활동 연계 대학별 지역특화형 비자 홍보, 유학생 직무 인턴십 매칭, 창업비자 전환 컨설팅, 유학생 소그룹 기업탐방프로그램(작은 매칭), 전문·사무직 취업을 위한 컴퓨터활용능력 및 직무 역량 교육 등
- (특징) (1) 유학생·졸업생 전담 지원조직, (2) 현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외국인교류팀 기능 확장 고려 가능
- (협력체계) 대학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글로벌대학30 또는 앵커(RISE) 사업과 연계하여 재원을 일부 확보하고, 도는 유학생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유치하는 한편, 채용·장기 근속 인센티브 등 도내 기업 참여 촉진 방안을 마련

- 또한, ‘인력 유치·비자 컨설팅’도 운영

- (개요) 외국인에게 취·창업 관련 체류자격 전환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외국인력 채용과 비자 발급·변경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주요 내용) 기업 대상 외국인력 수요 조사, 외국인 구인·구직 매칭, 취·창업 관련 체류자격 전환 상담, 비자 발급 및 변경 행정 지원, 입국·체류 관리 안내 등
- ※ ‘경남 비자지원센터’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경남비자지원센터는 전문·숙련 외국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남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수요 조사부터 인력 매칭, 비자 발급, 입국 및 체류 관리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통번역·상담·사례관리팀) 외국인주민 전반을 대상으로 통·번역, 생활·노동·체류 상담 및 위기 사례 관리 기능을 수행

- ‘26.3월 기준, 전북 등록 및 거소 외국인의 주요 국적은 베트남, 중국, 네팔, 한국계 중국인,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국, 몽골, 태국 순으로 나타남. 현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 중인 베트남어·미얀마어·몽골어·캄보디아어·스리랑카어·키르기즈어 통역사를 활용하고, 중국어·네팔어·우즈베크어·인도네시아어·벵골어·태국어 등 6개 언어의 비상근 통역사를 추가 채용하여 총 12개 언어로 통·번역 지원을 확대
- ※ 이 외 언어는 다누리콜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하이코리아),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등 전국 5개 콜센터와 연계하여 공백 없이 지원

- 주요 사업으로 ‘찾아가는 권역별 이민자 상담의 날’ 운영

- (개요) 1시군1외국인센터와 연계하여 도심지역 위주의 상담 지원에서 벗어나 농어촌과 산업단지 등 외곽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

- (주요 내용) 권역별로 비자·체류, 노동, 의료, 주거, 자녀 교육 등을 포괄하는 순회 통합상담을 실시, 유학생의 날·외국인근로자의 날 등 체류자격별 상담일을 정기적으로 운영

○ 사업 대상 : 도내 외국인주민 전체

○ 사업 기간 : 2027년 지정·운영

- 단,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 필요 여부 검토 후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제15조(외국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추진체계 : 전북도 총괄,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등 도내 출연기관 1개소 지정·운영

- 조직과 센터의 과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출연기관을 지정하고, 기존 인프라를 연계하여 종합 지원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사업 시행 방식 : 전북도 자체 예산과 고용노동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법무부(재외동포체류지원센터) 국비 보조사업 활용

■ 참고 사항

- 외국인주민의 이용 편의성과 정책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중교통 여건, 외국인 밀집지역 및 주요 산업단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입지 조정 또는 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 사례

-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경상북도는 ‘외국인도 살고 싶어 하는 경북’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유학, 취업, 체류비자, 주거, 보육, 교육, 인권 등 생애주기에 필요한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통합지원플랫폼인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를 개소(‘24.1월,

도비 4억원)하여 운영하고 있음

-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포용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외국인 주민 상담, 언어·직무 교육, 내·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 유관기관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음. 기존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기능을 흡수·확대하여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지원기관에서 외국인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원스톱 사회통합 지원기관으로 전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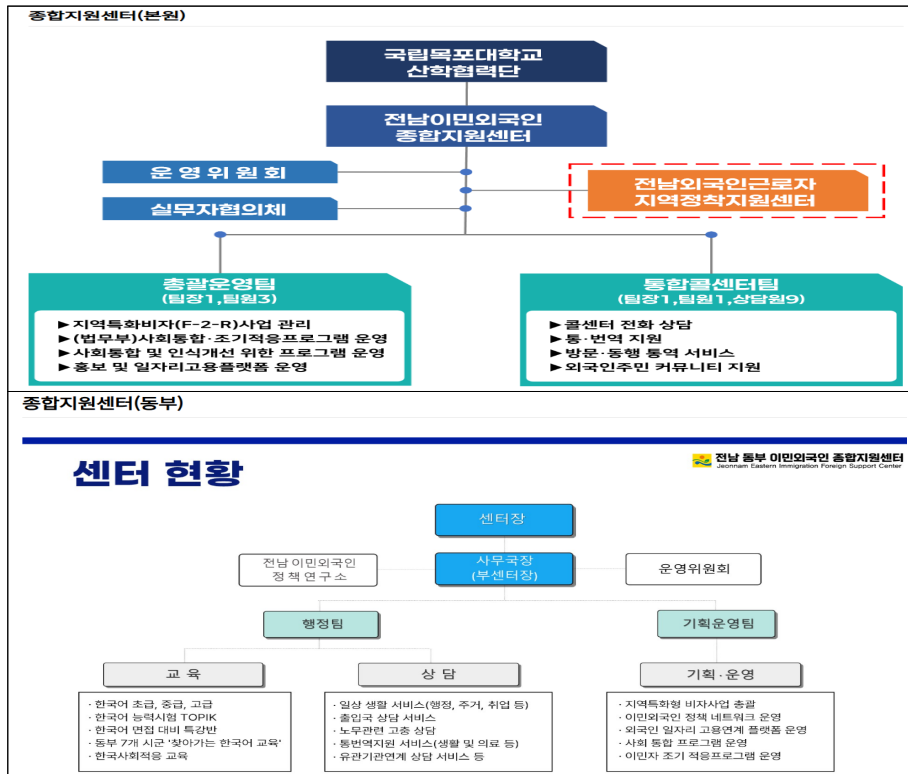


자료 :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girc.or.kr/page/org_chart.php)

[그림 4-6]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사례

- (전남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전라남도는 '24.8월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본원 (영암 대불산단 소재)을 개소한 데 이어, '25.9월 동부센터(여수 소재)를 추가 개소하여 현장 중심의 외국인 종합지원체계를 확대·강화하고 있음
- 본원의 경우, 총괄운영팀과 통합콜센터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관리, 사회통합·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고용플랫폼 운영, 콜센터 운영, 통·번역 지원,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동부센터는 교육팀, 상담팀, 기획·운영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교육, 생활·출입국·노동 고충 상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총괄, 이민외국인 정책 네트워크 운영, 일자리 고용 연계 플랫폼 운영,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자료 : 전남외국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jifsc.com/>)

[그림 4-7] 전남외국인종합지원센터 사례

1-3-5

전북도 외국인정책 전담부서 강화

전북도

■ 추진 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 내용

- 현재 전북도의 외국인정책 관련 업무는 외국인국제정책과, 교육협력과, 여성가족과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서 간 사업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특히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 재외동포 등 정책 대상별 사업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추진됨에 따라 유사 사업 간 연계가 미흡하고, 정책 수요 변화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향후 「인구전략기본법」 제정·시행으로 외국인 인구가 국가 인구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차원의 외국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 외국인국제정책과를 외국인정책 총괄 부서로 개편하여 외국인정책의 기획·조정, 부서 간 사업 연계, 정책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여러 부서에 분산된 유학생·다문화가족 등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전북도 외국인정책 전담 부서의 기능 및 조직 체계 개편
 - 현 외국인국제정책과가 국제교류와 외국인정책 업무를 함께 담당함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정책의 기획·조정 및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류 업무와 외국인정책 업무의 분리 또는 외국인정책 전담 인력·팀 확대 검토
 - 현 외국인정책팀과 외국인지원팀은 유지하고, 교육협력과와 여성가족과에 분산된 유학생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능을 이관·통합하여 유학생팀과 다문화가족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자료 : 연구진 작성

[그림 4-8]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 전담 조직(안)

- 사업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정책 관련 부서(외국인국제정책과, 교육협력과, 여성가족과)
- 사업 시기 : 전북도 조직 개편 시 반영
- 추진체계 : 도 자체 조직 개편(관련 실·국 및 부서 간 협의)
- 사업 시행 방식 : 비예산 사업
 - 단, 전담 인력 증원 또는 조직 확대 시 인건비 및 운영비 반영 필요

■ 참고 사례

- 충북·전남·경북 등은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유학생 관련 업무를 전담 조직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함
 - 충청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은 외국인정책·비자·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다문화가족, 유학생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 (※ 23~24쪽 참고)
 - 전라남도 이민정책과는 비자·통계, 외국인정책, 다문화가족, 광역형 비자(유학생)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 (※ 27~28쪽 참고)
 -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는 외국인정책·비자(유학생 포함), 외국인 지원·근로자,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 (※ 30~31쪽 참고)

나. 전북형 인재 유입·성장·산업활력 기반 강화

- (목표) 외국인재·인력과 지역산업 연계, '취·창업-체류자격 전환-정착' 성장 경로 구축
-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북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유입 이후 교육·양성, 취·창업, 숙련 형성, 체류자격 전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제안하는 세부 추진 과제는 인프라 분야 3개, 취·창업 분야 5개, 체류자격 분야 3개, 기업 지원 분야 3개 등 총 14개로 구성됨

- (인프라) 전북특별법 출입국특례, 계절근로자 기숙사, 공공형 계절근로
- (취·창업) 앵커(RISE) 연계 유학생 지역 취업·정착, 유학생 직무 인턴, 지역특화형 비자 취업·근속 지원, 지역산업 맞춤 직무·안전·한국어 통합교육, 인바운드 창업 지원사업
- (체류자격) 지역기반비자 승급지원금 지원, 숙련기능인력(E-7-4/R) 추천제, 국적 취득 지원
- (기업 지원) 외국인 고용기업 환경개선,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기업 선정, 외국인 고용친화 우수기업 인증제

[표 4-5] 전북형 인재 유입·성장·산업활력 기반 강화 관련 세부 과제(안)

전략 목표	과제 분야	세부 과제
외국인재·인력과 지역산업 연계, '취·창업-체류자격 전환-정착' 성장 경로 구축	인프라	2-1-1. 전북특별법 출입국특례
		2-1-2. 계절근로자 기숙사
		2-1-3. 공공형 계절근로
	취·창업	2-2-1. 앵커(RISE) 연계 유학생 지역 취업·정착
		2-2-2. 유학생 직무 인턴
		2-2-3. 지역특화형 비자 취업·근속 지원
		2-2-4. 지역산업 맞춤 직무·안전·한국어 통합교육
		2-2-5. 인바운드 창업 지원사업
	체류자격	2-3-1. 지역기반비자 승급지원금 지원
		2-3-2. 숙련기능인력(E-7-4/R) 추천제
		2-3-3. 국적 취득 지원
	기업 지원	2-4-1. 외국인 고용기업 환경개선
		2-4-2.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기업 선정
		2-4-3. 외국인 고용친화 우수기업 인증제

1) 기존 사업 재구조화

- (계속 추진) 전북특별법 출입국특례, 계절근로자 기숙사, 공공형 계절근로, 지역기반비자 승급지원금 지원, 숙련기능인력(E-7-4/R) 추천제,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기업 선정, 국적 취득 지원
- 기존 '국적 취득 지원'과 '국적취득 교재 개발' 사업은 '국적 취득 지원'으로 통합하여 계속 추진
-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기업 선정' 사업은 향후 '외국인 고용친화 우수기업 인증제'로 통합·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기업 지원을 일원화할 필요

- (통합·수정 : 유치·양성→취업·정착 방향 전환) 앵커(RISE) 연계 유학생 지역 취업·정착
 - 기존 사업은 해외 인재 유치, 대학 경쟁력 강화, 학업·생활 지원 등 유학생의 유치·양성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나, 졸업 이후 지역기업 취업과 지역 정착으로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사업의 중심을 취업·정착으로 전환할 필요
 - 전북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취창업·정착지원팀의 '유학생·졸업생 성장경로 설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로 설계부터 직무 교육, 인턴십, 취업 연계, 체류자격 전환, 정착지원까지 단계별로 촘촘하게 지원할 필요
- (확대 : 공공기관 중심에서 중소기업까지 참여기관 확대) 유학생 직무 인턴
 - 기존에도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에서의 인턴십 운영을 지향하였으나, 사업명이 '유학생 공공기관 직무 인턴'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 취지에 맞게 '유학생 직무 인턴'으로 개편할 필요
 - 도내 유학생의 인턴십 참여 수요가 높은 편이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기회가 제공되어 참여 규모와 직무 다양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실제 채용 연계 가능성이 높은 민간 부문의 직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인턴십 참여 중견·중소기업과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 채용 기업을 적극 발굴·연계하고, 사업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
- (확대 :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취업·근속 지원
 - '지역특화형 비자(F-2-R) 취업 지원' 사업은 '24년~'25년 총 410명을 모집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제는 이들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후속 지원을 강화할 시점임. 특히 동반 배우자의 취업 연계 필요성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을 동반 배우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체류관리 교육' 및 애로사항 관리와 연계하여 고용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
 - 동반 배우자의 취업 연계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의 '희망이음사업'을 참고 가능
 - 추진 전략 ③과 연계하여 지역 기반 비자 취득자와 동반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
- (확대 : 직무·안전·한국어 등 교육 범위 확대) 지역산업 맞춤형 직무·안전·한국어 통합교육
 - 기존 '지역현장 산업 교육'은 지게차 운전 등 일부 직무의 기술교육에 한정되어 있어,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적응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기술교육, 산업 안전교육,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즈니스 한국어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

○ (확대 :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외국인 고용기업 환경개선

- 기존 사업은 기숙사 임차비 등 주거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근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산업현장의 휴게·안전시설은 근로 여건 개선뿐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정적인 근속을 위해서도 중요함. 이에 지원 대상을 외국인 고용기업으로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를 휴게시설·안전시설 개선비까지 확대하여 근로환경 전반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
- '외국인 고용친화 우수기업 인증제'와 연계하여 인증기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로 활용 검토

○ (보완 : 지역특화 분야 발굴·연계 강화) 인바운드 창업 지원사업

- 농생명·식품·바이오 등 전북지역의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대학·연구기관·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글로벌창업이민센터 등의 자원을 연계하여 외국인 기술창업 인재를 유치·육성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전북 외국인정책의 차별성을 강화할 필요
- 전희진 외(2024:73-76)를 참고하는 한편, 외국인 창업 수요와 정책 지원체계, 유망 업종, 체류자격 연계 방안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표 4-6] 전북형 인재 유입·성장·산업활력 기반 강화 관련 기존 사업 재구조화

세부 과제	기존 사업	재구조화 방향
전북특별법 출입국특례 계절근로자 기숙사 공공형 계절근로 지역기반비자 승급지원금 지원 숙련기능인력(E-7-4/R) 추천제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기업 선정		계속 추진
국적 취득 지원	국적 취득 지원 국적취득 교재 개발	통합 및 계속 추진
앵커(RISE) 연계 유학생 지역 취업·정착	RISE 연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해외인재유치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학업 및 생활 자원을 통한 인재 양성	통합·수정 방향 전환 (유치·인재 양성 → 취업·정착)
유학생 직무 인턴	유학생 공공기관 직무 인턴	확대 공공기관·중소기업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취업·근속 지원	지역특화형 비자(F-2-R) 취업 지원	확대 대상 확대(F-2-R → 배우자 포함), 범위 확대(기업교육·애로 관리 등)
지역산업 맞춤형 직무·안전·한국어 통합교육	지역현장 산업 교육	확대 범위 확대(기술교육 → 직무/기술·안전·한국어 등)
외국인 고용기업 환경개선	중소기업 환경개선	확대 기업·범위 확대 (기숙사 임차 → 휴게·안전시설 포함)
인바운드 창업 지원사업		보완 지역특화 분야 발굴·연계 강화

2) 신규 사업 제안

2-4-3	외국인 고용친화 우수기업 인증제	전북도
-------	-------------------	-----

■ 추진 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 내용

- 도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산업현장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수용 역량은 기업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외국인 고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장기근속 지원, 인권 보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내 외국인 유학생·졸업생의 지역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채용 의사와 수용 여건을 갖춘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들 기업과 외국인 인재 간 취업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관련 인식개선 교육 이수 여부, 외국인 고용인원과 비율, 근속기간, 근로환경 및 인권 보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외국인 고용친화 기업으로 인증하고, 고용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근무환경 개선비·교통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참여를 촉진함

■ 사업개요

- 사업 내용 : 외국인 고용 여건과 근로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도내 기업을 평가·선정하여 도지사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
 - 주요 평가 항목은 사업주 인식개선 교육 이수 여부, 외국인 고용인원 및 비율, 평균 근속기간,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발생 여부, 기숙사·통근 등 근로·생활환경, 통·번역과 직무교육 지원, 인권 보호체계 등으로 구성
 - 인증기업에는 외국인 고용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기숙사·휴게시설·화장실 등 근무 환경 개선비, 통근버스 운영비 또는 교통비, 직무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인재 채용 연계사업 참여 시 우대

- 인증기업 정보는 대학, 시군 일자리센터 등과 공유하여 외국인 유학생·졸업생과 기업 간 취업 연계에 활용
- 사업 대상 : 외국인 고용(예정) 도내 기업
- 사업 기간 : 2027년 20개사 내외 시범 인증 후 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 추진체계 : 전북도 총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운영, 시군·대학·일자리센터 등 협력
- 사업 시행 방식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방안 검토

■ 참고 사항

- 단순히 외국인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을 인증하기보다 근로조건, 장기근속, 인권 보호 및 정착지원 수준 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야 함
- 인증 이후에도 일정 주기(예, 연 1회)로 근로환경과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임금체불이나 중대한 노동법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인증 취소와 지원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 사례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친화 우수 인증’ 사업
 - (목적) 외국인 친화 우수 인증을 통해 외국인 친화적 도시 이미지 구축 및 정착 제고에 기여
 - (내용) 외국인 친화적인 기업·부동산·행정사 등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
 -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

다. 가족동반 생활정착과 안전망 강화

- (목표) 가족동반 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보육·교육·의료·노동권·생활상담 등 정주 인프라 조성 및 생활 안전망 강화

- 외국인의 장기 정착은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생활의 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관됨. 이에 가족 단위의 생활정착 기반을 강화하고, 주거·보육·교육·의료·교통·노동·생활상담 등을 연계한 정주 인프라와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정착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제안하는 세부 추진 과제는 한국어·사회통합프로그램 분야 4개, 근로자 안전망 분야 2개, 가족동반 정주지원 분야 7개 등 총 13개로 구성됨
- (한국어·KIIP) 법무부 지자체 연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 사회통합 운영기관 확대, 권역별·특성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전북 생활·직무 한국어 콘텐츠 개발
- (근로자 안전망)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확대
- (가족동반 정주지원) 119 통역봉사단, 긴급위기·의료 지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외국인 주거개선 지원사업, 외국인 임신부 안심출산·초기양육 지원사업, 가족동반 정착 패키지 시범사업, 외국인 운전면허증 취득 지원사업

[표 4-7] 가족동반 생활정착과 안전망 강화 관련 세부 과제(안)

전략 목표	과제 분야	세부 과제
가족동반 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보육/교육·의료·노동권· 생활상담 정주 인프라 조성, 생활 안전망 강화	한국어·KIIP	3-1-1. 법무부 지자체 연계 사회통합프로그램
		3-1-2. 이민자 사회통합 운영기관 확대
		3-1-3. 권역별·특성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3-1-4. 전북 생활·직무 한국어 콘텐츠 개발
	근로자 안전망	3-2-1.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3-2-2.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확대
	가족동반 정주 지원	3-3-1. 119 통역봉사단
		3-3-2. 긴급위기·의료 지원
		3-3-3.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3-3-4. 외국인 주거개선 지원사업
		3-3-5. 외국인 임신부 안심출산·초기양육 지원사업
		3-3-6. 가족동반 정착 패키지 시범사업
		3-3-7. 외국인 운전면허증 취득 지원사업

1) 기존 사업 재구조화

- (계속 추진) 법무부 지자체 연계 사회통합 프로그램,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119 통역봉사단
- (확대 : 운영기관 및 프로그램 확대) 이민자 사회통합 운영기관 확대
 - 다양한 체류자격 변경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가 활용되면서 교육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시군별 운영기관과 개설 과정이 한정되어 있어 교육 참여와 적기 이수에 어려움이 큰 실정임. 이에 일반운영기관과 지역학습관을 확대하고, 교육 단계별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일 필요
 - 전라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진도군·고흥군 등에 지역학습관을 확대·운영하고 있으므로, 참고 사례로 활용 가능
- (확대 : 교육 대상 및 운영 범위 확대) 권역별·특성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24년~'25년 총 3,261명이 참여하는 등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되었으나, 농어촌지역의 교육 접근성은 여전히 제한적임. 이에 교육 대상 지역을 농어촌까지 확대하여 이동 수단과 근무 시간 등의 제약으로 참여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등의 교육 사각지대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유학생·근로자·동반가족 등 대상별 특성과 학습 목적을 고려하여 권역별·특성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세분화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필요
- (확대 : 교육 내용 및 활용 범위 확대) 전북 생활·직무 한국어 콘텐츠 개발
 - 전북은 새만금 한글학당에서 활용하는 한국어 교재를 고도화하는 등 한국어교육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 다만, 일상생활 중심의 교육을 넘어 취업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비즈니스 한국어 콘텐츠를 개발하여 외국인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통합을 지원할 필요
 - 도내 주력산업별 작업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전문용어·관용표현·작업 지시어 등의 언어적 특성과 소음 등 작업 환경을 반영한 실감형 멀티미디어 콘텐츠(QR코드 연계 듣기 훈련 음원, 현장 영상 등) 개발이 요구됨
 - 개발된 콘텐츠는 '지역정착플랫폼 고도화' 및 '권역별·특성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학습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교육 접근성과 콘텐츠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

○ (확대 : 운영 개소 확대 및 조례 개정)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확대

- 실직·임금체불·산업재해 등으로 긴급 임시 보호와 법률·노무·의료 상담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전주시 1개소만으로는 도내 전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쉼터를 2~3개소로 확대할 필요
- 충청남도 관련 조례 등을 참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외국인 근로자 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0조(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재취업 전 구직지원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 활동은 제외한다.) 제공 2.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적응, 교육활동 등 지원 제공 3.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 적응 및 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 및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10조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 및 쉼터의 운영을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단체가 제7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 및 제9조·11조 각 호에 따른 지원센터 및 쉼터의 기능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확대 :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긴급위기·의료 지원

- 기존 의료 지원은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대상과 규모가 제한되어 있으며, 의료 이외의 긴급한 심리·정서적 위기에 대한 대응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원 범위를 긴급 위기 상담과 의료 지원으로 확대하고, 전북 외국인 종합지원센터·1시군1외국인센터 및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체류자격의 외국인주민이 신체·심리·정신건강 관련 의료·상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권을 보장할 필요
- 심리·정서 지원은 전북 외국인 종합지원센터(통번역·상담·사례관리팀)와 1시군1외국인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상담, 정신 건강 증진·회복 프로그램, 자조 모임 및 사례 관리 등을 운영하고,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찾아가는 이동 상담 버스를 추진
-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사례를 참고하여 체류자격이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

○ (확대 : 지원 수준 및 지역 범위 확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수준이 현재 30%에 그쳐 외국인가족의 양육 부담이 큰 상황이므로, 이를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시군비(50%) 매칭을 통해 도내 전 지역에서 보육료 전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
- 아울러,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의 보육·교육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김제시 사례와 같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제8조(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2.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교육 지원	
②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보완 : 가족동반 가구 우선 지원) 외국인 주거개선 지원사업

- '26년 신규 사업으로, 30백만원의 예산으로 10가구의 주거환경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임. 사업의 취지와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예산과 지원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대상 가구 선정 시 자녀를 동반한 외국인가족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가족 단위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
- '가족동반 정착 패키지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주거지원뿐 아니라 보육·교육, 의료, 생활상담 등 가족의 정착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

[표 4-8] 가족동반 생활정착과 안전망 강화 관련 기존 사업 재구조화

세부 과제	기존 사업	재구조화 방향	
법무부 지자체 연계 사회통합 프로그램		계속 추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119 통역봉사단			
이민자 사회통합 운영기관 확대		확대	운영기관 및 프로그램 확대
지역별 특성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확대	교육 대상·운영 범위(농어촌지역 등) 확대
전북 생활·직무 한국어 콘텐츠 개발	한국어 교재 고도화	확대	교육 내용(비즈니스 한국어)·활용 범위 확대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확대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확대	운영 개소 확대 및 조례 개정
긴급위기·의료 지원	의료지원	확대	대상·범위 확대(의료→긴급 위기·의료)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지원 수준(30%→100%)·지역 범위 확대
외국인 주거개선 지원사업		보완	가족동반 가구 우선 지원

2) 신규 사업 제안

3-3-5	외국인 임신부 안심출산·초기양육 지원사업	전북도
-------	------------------------	-----

■ 추진 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 내용

- 외국인 임신부는 임신·출산·산후조리 및 초기 양육 과정에서 언어장벽,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의료·보건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특히 외국인 부부와 가족동반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임신·출산 및 초기양육 지원 수요도 확대되고 있으나, 기존 지원제도는 주로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외국인 부부,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유학생 가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음
- 임신·출산 및 초기 양육 단계의 지원 공백은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 안정과 지역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외국인 임신부를 조기에 발굴·관리하고, 임신·출산 관련 통역 및 의료기관 동행, 다국어 정보 안내, 초기 양육 상담과 부모 교육, 위기 임신부 사례 관리, 의료비 지원 등을 연계한 종합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사업 내용 : 도내 외국인 임신부를 발굴·등록하고, 임신·출산부터 초기양육까지 필요한 의료·보건·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 보건소, 가족센터,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임신·출산 과정과 건강 상태, 체류·가족 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록·관리
 - 산전 진찰, 분만 및 산후 진료 과정에서 통역과 의료기관 동행을 지원하고, 임신 단계별 건강관리, 출산 준비, 예방접종, 산후 관리 및 영유아 돌봄 관련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
 - 출산 이후에는 수유, 영양, 신생아 건강관리, 예방접종, 부모 역할 등 초기양육 상담과 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역 돌봄서비스와 연계

- 미등록 체류,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단절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임신부는 전담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의료·복지·긴급지원 서비스를 연계
- 단, 소득 수준, 건강보험 가입 여부, 체류자격 및 위기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전 진찰비, 분만비 및 필수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
- 사업 대상 : 도내 거주 외국인 임신부 및 출산 초기 외국인 가정
- 사업 기간 : 2027년 3개 권역 시범사업 추진 후 성과 평가를 거쳐 2028년 이후 확대
- 추진체계 : 도 총괄, 시군 보건소·지역의료원·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연계
- 사업 시행 방식 : 도비와 시군비를 활용하되, 지역의료원 공공의료사업비 및 민간 후원금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소득 수준, 체류자격, 위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과 지원 한도를 설정하여 추진

■ 참고 사례

- 남원의료원(전북 남원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 외국인근로자 배우자(외국인)의 임신과 관련한 산전 진찰 및 출산 지원
 -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 부담
- 서울특별시 ‘출산교실’
 -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가정(연간 25가정 내외)을 대상으로 출산 관련 비대면 교육을 제공함.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재외동포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다문화가족 중심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사례임

**2026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과 함께하는
건강한 출산과 돌봄을 위한
비대면 출산교실**



대상
임산증으로 출산 예정이신분
출산 후 3개월 이내 유학생
결혼이민여성 산모
(25가정, 선착순 모집)

내용
임산 주기별 변화, 분만호흡법, 임신부
신체활동, 산전육아관리 & 모유수유,
약물 복용 주의사항, 임신증-산후
심리사회적 특성, 출생 후 산생아 발달과정,
영양관리 및 이유식, 산생아 마사지, 좋은
부모 되기, 부모가 함께하는 베이비샤워 등

일시
2026.05.14.(목) ~ 05.22.(금)
14:00~17:00

장소
온라인 프로그램, Zoom으로 참여
프로그램 시작 전, 문자로 접속링크를
발송해 드립니다.

신청
각 지역 다문화센터 또는
유관기관을 통해 신청

참가비
무료
참가자들에게
육아용품 제공
*상기 이의사항은 예외입니다.

문의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
02-6960-1045

도착일 신청
 QR 코드를
스캔해서
신청 페이지로
연동됩니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서울특별시

자료 : 서울외국인포털 https://gtbase.glo.kr/web/news/servletContentDetail.do?no=58&post_no=4E88C627D70022E063C0A84023E0F&lng=ko

[그림 4-9] 서울특별시 '비대면 출산교실' 사례

3-3-6

가족동반 정착 패키지 시범사업

전북도

■ 추진 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 내용

- 외국인의 장기체류와 지역 정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생활 정착지원이 필수적임
- 그러나 가족 단위의 생활 안전망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가족을 초청한 외국인은 주거 마련, 배우자 취업, 자녀 보육·교육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특히 전북은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에 해당하지만,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는 여전히 정책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자녀의 교육과 학교생활 적응 문제는 외국인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재이주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가족동반 체류 외국인과 가족 초청 예정자를 대상으로 주거, 배우자 취업, 자녀 보육·교육 등의 지원을 연계하는 ‘가족동반 정착 패키지’를 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주거 분야에서는 주거 상담·임대차 교육, 주거 정보 연계 및 초기 정착 비용을 지원하고, 배우자 취업 분야는 ‘지역특화형 비자 취업·근속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취업 상담·연계를 제공하며, 자녀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과 이주배경아동 교육지원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함
- 아울러, 농어촌 빈집·공공임대주택과 자녀의 보육·교육 여건, 배우자의 취·창업 기회를 연계한 ‘외국인가족 농어촌지역 정착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향후 정식사업 전환 및 확대 여부를 검토함

■ 사업개요

- 사업 내용 : 가족동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거+배우자 취업+자녀 보육·교육’을 연계한 정착 패키지 지원, ▲농어촌지역 정착모델 시범사업 운영
 - (주거) 가족 초청자 대상 주거 상담·임대차계약 교육, 주거 안전 점검 및 공동생활 규칙 안내, 공공임대주택·농어촌 빈집·민간 임대주택 정보 제공 및 입주 연계, ‘가족 함께정착 지원금’ 지급
 -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주택은 임대료 인상 제한, 최소 거주기간 보장, 정당한 사유 없는 중도 퇴거 제한 등의 조건을 임대차계약에 명시하고, 임대인의 위반 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민간 임대주택은 지속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어촌 빈집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한 후 리모델링하여 공공이 보유·관리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임대료와 입주 기준을 공공이 관리하고, 외국인가족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할 필요
 - ‘가족 함께정착 지원금’ : 가족동반에 따른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중개수수료, 필수 생활 물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 비용의 일부(예, 월 20만원×6개월)를 지원
 - (배우자 취업) 배우자의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범위를 고려한 취업 상담·연계, 한국어 및 직업교육
 - 전북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취창업·정착지원팀의 ‘인력 유치·비자 컨설팅’ 사업과 연계 가능

- (자녀 보육·교육)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학교생활 준비 집중교육, 학습·진로 멘토링, 부모 교육,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상담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사업과 연계하여 외국인가족의 보육 부담 완화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의 ‘레인보우스쿨’ 등 국비 공모사업과 도교육청의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현 전주시가족센터, 완주군가족센터, 김제시가족센터, 사단법인 물댄동산 위탁)’을 연계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한국어·학교생활 준비 집중교육과 학습·진로 멘토링 등을 지원
 - 특히 저소득 이주배경아동과 중도입국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진로 멘토링을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심리·정서 상담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정착을 지원
- (외국인가족 농어촌지역 정착모델 시범사업)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빈집 또는 공공임대주택, 자녀의 어린이집·학교 이용, 배우자 취·창업 및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연계하여 가족 단위 정착을 지원
 - 인구감소지역 중 생활 기반과 교육·일자리 여건을 일정 수준 갖춘 시범 지역을 선정하고, 입주 전 지역 정보 제공과 주민 교류, 입주 후 생활 적응 및 갈등 조정 등을 함께 지원
- 사업 대상 : 도내 가족동반 체류 외국인 및 가족 초청 예정자
- 사업 기간 : 2027~2028년 시범 운영 후 성과 평가를 거쳐 확대 여부 검토
- 추진체계 : 도 총괄, 시군·가족센터 운영, 도교육청·학교·육아종합지원센터·LH·일자리센터 등 협력
- 사업 시행 방식 : 도비·시군비 매칭

주거와 지역정착 관련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방안 검토

■ 참고 사례

- (주거) 서울특별시·경기도·전남 곡성군 등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
 -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공인중개사를 선발하거나,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부동산거래 계약 신고서 등을 다국어로 제작·배포하여 외국인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 추진 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 내용

- 전북은 농어촌지역, 산업단지, 중소도시가 넓게 분포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많아, 외국인이 출퇴근, 자녀 등·하원, 의료·행정기관 방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이동의 제약은 고용 유지와 생활 서비스 이용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어렵게 하여 외국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역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외국인은 언어장벽, 국내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시험 정보 부족 등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힘들
- 이에 운전면허 취득 관련 상담, 교통안전 및 도로교통법 다국어 교육, 필기시험 대비 교육을 제공하고, 운전면허 전문학원·시험장과 연계하여 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경제적 취약계층에는 시험 응시료 등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이동권을 보장함

■ 사업개요

- 사업 내용 : 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상담·교육, 시험 및 전문기관 연계, 취약계층 일부 비용 지원
 - 운전면허 취득 요건과 절차, 외국 운전면허증의 국내 면허 교환 가능 여부, 시험 일정 및 준비 방법 등에 관한 상담 제공
 - 다국어로 교통안전수칙과 도로교통법을 교육하고, 다국어 교재와 모의시험 등을 활용한 필기시험 대비 교육을 운영. 운전면허시험장과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연계
 - 소득 수준과 취업·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시료 등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 사업 대상 : 도내 거주 외국인
- 사업 기간 : 연중 운영
- 추진체계 : 도-경찰청-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시군 유관기관 등 협력
 - 일부 시군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 필기교육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
- 사업 시행 방식 : 도비·시군비 매칭

■ 참고 사례

- 남원시가족센터 ‘운전면허 이론교육’,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전면허 필기교육’, 대전외국인통합지원센터 ‘무료 운전면허교육’ 등

라. 상호문화 통합과 글로벌 환류체계 구축

- (목표) 이민자·지역민 간 일상적 교류 및 수용성 제고, 정착 성공사례·재외동포 네트워크 환류로 전북 이민브랜드 확산
-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기여가 새로운 인재 유치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호문화 통합과 글로벌 환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민자와 지역민의 일상적 교류와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외국인의 정착 성과와 지역사회 기여가 전북의 이민브랜드로 이어질 수 있는 환류 체계 구축이 요구됨. 이를 위해 제안하는 세부 추진 과제는 상호교류·수용성 분야 8개, 환류 체계 분야 4개 등 총 12개로 구성됨
 - (상호교류·수용성) 세계전북도민의 날,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사업, 공익단체 활성화 지원,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링, 도민 수용성·갈등예방 상시교육,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 성장지원 사업, 체류 외국인 대상 전북 생활·문화교육, 외국인 인식개선 공익 캠페인
 - (환류 체계)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확대, 고려인·아시아 교류지역 전통문화보급, 전북 이민자 글로벌 앰배서더 네트워크 구축, 전북재외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재외동포 유치-정착모델 발굴

[표 4-9] 상호문화 통합과 글로벌 환류체계 구축 관련 세부 과제(안)

전략 목표	과제 분야	세부 과제
이민자·지역민 간 일상적 교류 및 수용성 제고	상호교류·수용성	4-1-1. 세계전북도민의 날
		4-1-2.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사업
		4-1-3. 공익단체 활성화 지원
		4-1-4.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링
		4-1-5. 도민 수용성·갈등예방 상시교육
		4-1-6.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 성장지원 사업
		4-1-7. 체류 외국인 대상 전북 생활·문화교육
		4-1-8. 외국인 인식개선 공익 캠페인
정착 성공사례· 재외동포 네트워크 환류로 전북 이민브랜드 확산	환류 체계	4-2-1.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확대
		4-2-2. 고려인·아시아 교류지역 전통문화보급
		4-2-3. 전북 이민자 글로벌 앰배서더 네트워크 구축
		4-2-4. 전북재외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재외동포 유치·정착모델 발굴

1) 기존 사업 재구조화

- (계속 추진) 세계전북도민의 날,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사업, 고려인·아시아 교류지역 전통문화보급, 공익단체 활성화 지원,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링
- (확대 : 교육 대상 및 운영 단위 확대) 도민 수용성·갈등예방 상시교육
 - 도내 외국인 인구 증가와 정착의 장기화에 따라 지역사회 내 문화적 차이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기존 국내 체류 동포 중심의 인식개선 교육을 외국인주민 전반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 제고 교육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주민을 수용성·갈등예방 교육 전문 강사로 양성·활용하여 학교·마을·기업 등 생활권 단위에서 지역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교류하는 상시교육 프로그램으로 다변화할 필요
 - 학교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을 전문 강사로 양성·활용하는 ‘다문화이해 교육’ 사례를 참고 가능
- (확대 : 대상 국가 확대)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확대
 - ‘새만금 한글학당’은 ’24년 6개소에서 ’25년 11개소로 확대되며 해외 우수인재의 전북 유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에 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북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유치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

○ (확대·수정 : 신규 센터 기반 유치·정착지원 강화) 전북재외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및 재외동포 유치·정착모델 발굴

- 전북은 그간 재외동포(F-4-R 중심)의 지역 정착을 지원해 왔으나, '24년~'25년 정착지원 실적이 총 6명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26년부터 운영하는 전북재외동포체류지원센터(전북국제협력진흥원)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 재외동포의 유치부터 초기 정착, 장기체류까지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북 여건에 적합한 유치·정착 모델을 발굴·운영할 필요

• 광주·인천·안산 등의 기존 재외동포 집거지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이후 사후 지원이 이루어진 방식인 반면, 최근에는 충북 제천시와 같이 지자체가 유치 대상과 정착 경로를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이에 제천시 사례를 참고하여 정주 인프라 개선과 연계한 전북도 주도 유치·정착 모델을 마련할 필요

• (충북 제천시 사례) 대학 기숙사를 리모델링한 재외동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4개월간 단기 체류와 정착 교육을 제공함. 사업 추진 1년 만에 194가구 502명이 참여하고, 이 중 83가구 205명이 지역으로 이주

- '고려인·아시아 교류지역 전통문화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현지 유치 홍보와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대상 국가·유치 유형·정착 지역·지원 방식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유치·정착 모델은 후속 연구를 통해 마련할 필요

• 재외동포청은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OKFriends)'를 통해 연간 약 2,600명의 재외동포 청소년·청년을 초청하고 있음('26년 96개국, 9개 차수). 연수 일정이 수도권 3박과 지방 3박을 결합한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지방연수 코스를 전북에 유치하여 국비를 기반으로 차세대 재외동포에게 전북을 알리고 향후 유치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전북 자체 프로그램인 (가칭)'새만금 차세대동포 캠프'를 병행하여 전북과 차세대 재외동포 간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 유입을 촉진할 필요

[표 4-10] 상호문화 통합과 글로벌 환류체계 구축 관련 기존 사업 재구조화

세부 과제	기존 사업	재구조화 방향	
세계전북도민의 날		계속 추진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사업			
고려인·아시아 교류지역 전통문화보급			
공익단체 활성화 지원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링			
도민 수용성·갈등예방 상시교육	인식개선 교육	확대	대상 확대(체류 동포 → 외국인주민, 학교·마을·기업 교육프로그램 시행)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확대	새만금 한글학당	확대	대상 국가 확대(11개소 ↑)
전북재외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및 재외동포 유치·정착모델 발굴	재외동포(F-4-R) 체류 지원 발굴	확대·수정	신규 센터 기반 유치·정착지원 강화

2) 신규 사업 제안

4-1-6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 성장지원 사업	전북도
-------	---------------------	-----

■ 추진 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 내용

- 국적별 커뮤니티 리더들은 구성원에게 정책·생활 정보를 전달하고 각종 어려움을 상담하는 역할을 비공식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동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는 부족함
- 이에 국적별 커뮤니티의 현직 리더와 예비 리더를 발굴하고, 행정·노동·의료·안전 등 생활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교육하는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도내 외국인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육을 이수한 리더는 전북 외국인정책 홍보·소통 파트너로 위촉하여 정책과 생활정보를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전달하고, 동일 국적 외국인주민의 정책 수요와 현장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중간지원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또한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소규모 공익 활동, 통역 서포터즈 및 정책홍보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커뮤니티 리더의 활동 역량과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고, 해당 커뮤니티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함

■ 사업개요

- 사업 내용 :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 발굴·교육, 정책 홍보·소통 파트너 양성 및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
 - 국적별 외국인 커뮤니티의 현직 리더와 예비 리더를 발굴
 - 행정서비스 이용, 체류·비자, 노동권익, 의료·복지, 자녀교육, 재난안전, 갈등 조정 등에 관한 리더 아카데미 운영
 - 교육 이수자를 전북 외국인정책 홍보·소통 파트너로 위촉하여 다국어 정책정보 전달, 신규 외국인주민 생활 안내, 정책 수요 및 애로사항 수렴 등의 활동 지원

- 내·외국인 동반 봉사활동, 지역문제 해결, 생활정보 안내자료 제작 등 커뮤니티별 소규모 공익프로젝트를 공모·지원
- 통역 서포터즈 및 정책홍보 활동에 대해 활동비 지급
- 활동 결과와 커뮤니티별 정책 수요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간담회 또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정책 개선에 활용
- 사업 대상 : 도내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 및 예비 리더 20~30명
- 사업 기간 : 연 1기, 6개월 운영
- 추진체계 : 도-시군-외국인 종합지원센터-국적별 커뮤니티 연계
- 사업 시행 방식 : 도비(활동비 지원)

4-1-7	체류 외국인 대상 전북 생활·문화교육	전북도
-------	----------------------	-----

■ 추진 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 내용

- 입국 초기 오리엔테이션에서 기본적인 생활·문화 안내가 제공되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성 교육에 그쳐 체류와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법·질서·금융·세금 납부 의무 등에 대한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기회가 부족함
- 이러한 정보 부족은 의도치 않은 법규 위반이나 체류 관리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생활·문화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도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북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제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을 지원함

■ 사업개요

- 사업 내용 :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전북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시교육 운영
 - 법질서, 금융·세금(납부), 사회보험, 의료·보건, 교통안전 등 생활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생활·문화, 공공시설 이용, 쓰레기 분리배출, 공동주택 생활 규칙, 지역축제·문화시설 등에 관한 지역 생활교육 제공
 - 주요 교육내용을 다국어 동영상과 카드뉴스, 안내자료 등으로 제작하여 온라인('지역정착플랫폼')에 상시 게시
- 사업 대상 : 도내 체류 외국인
- 사업 기간 : 연중 온·오프라인 상시 운영
- 추진체계 : 도-전북 외국인 종합지원센터(전북국제협력진흥원)
- 사업 시행 방식 : 전북도 자체 예산

4-1-8	외국인 인식개선 공익 캠페인	전북도
-------	-----------------	-----

■ 추진 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 내용

- 도내 외국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보가 사건·사고나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전달될 경우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와 공동체 유지, 봉사활동, 재능기부, 문화교류 등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기여를 균형 있게 알리는 노력이 요구됨
- 이에 외국인의 지역사회 기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영상·카드뉴스 등 다양한 공익 캠페인 콘텐츠로 제작·송출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함

■ 사업개요

- 사업 내용 : 외국인의 지역사회 기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익 캠페인 콘텐츠로 제작·송출
 - 지역산업 현장,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활동, 지역사회 봉사, 재능기부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인터뷰 영상, 라디오 캠페인, 카드뉴스, 포스터, 숏폼 콘텐츠 등으로 제작
 - 도정 홍보 매체, 지역 방송·신문,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전개
- 사업 대상 : 도민
- 사업 기간 : 연중
 - 상시 홍보와 주요 기념일·행사 연계 집중캠페인 병행
- 추진체계 : 전북도 총괄,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기획·운영, 시군·지역 언론·외국인 커뮤니티 등 협력
- 사업 시행 방식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방안 검토

■ 참고 사례

-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인식개선 통합지원 공익캠페인’
 - (목적) 내·외국인 간 상호 존중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국인주민 통합지원 홍보로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 (내용) 외국인주민 인식개선 통합지원 공익캠페인(인식개선 캠페인 제작·송출)
 - (재원) 도비 100%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우수인재 공모’
 - (목적) 도내에 정착한 우수한 외국인재와 기업 사례를 지역사회에 확산하여 다문화사회에 대한 포용성을 강화

- (내용) 도내 정착한 외국인 우수인재·우수기업 사례를 공모하여 시상 및 표창
-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

4-2-3	전북 이민자 글로벌 앰배서더 네트워크 구축	전북도
-------	-------------------------	-----

■ 추진 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 내용

- 전북에서 학업·취업·창업·정착에 성공한 외국인은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전북 이민브랜드 확산에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임
- 그러나 현재는 이들의 성공 경험을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하고, 해외 인재 유치와 전북 지역 홍보에 활용하는 환류 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 이에 전북에서 안정적인 정착 경험을 한 외국인을 ‘전북 이민자 글로벌 앰배서더’로 위촉하고, 이들의 전북 생활·학업·취업·창업 경험을 담은 성공사례 아카이브와 국가별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현지 설명회 활동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고려인·아시아 교류지역 전통문화보급’, ‘새만금 한글학당’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현지 네트워크와 도내 정착 성공사례를 결합한 인재 유치·홍보의 환류 체계를 구축함

■ 사업개요

- 사업 내용 : 전북 정착 성공 외국인을 글로벌 앰배서더로 위촉하고, 성공사례 발굴·확산과 해외 인재 유치 활동을 지원
 - 전북에서의 학업, 취·창업, 가족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 경험을 인터뷰·영상·카드뉴스 등으로 기록한 다국어 정착 우수사례 아카이브를 구축
 - 앰배서더의 개인 SNS, 외국인 커뮤니티,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활동 지원
 - 해외 대학·교육기관, 새만금한글학당, 국제교류지역 등과 연계한 현지 설명회에서 홍보활동 지원

-
- 앰배서더 간 활동 사례와 국가별 동향을 공유하는 정기 간담회 또는 성과공유회를 운영하고, 해외 인재의 정책 수요와 유치 과정의 애로사항을 전북 외국인정책에 환류
 - 사업 대상 : 전북 정착 성공 외국인(유학·취업·창업 등) 30명 내외
 - 사업 기간 : 2027년 시범 위촉·운영 후 성과 평가를 거쳐 점진적 확대
 - 추진체계 : 도 총괄, 외국인 종합지원센터·전북국제협력진흥원 운영, 대학·기업·커뮤니티 등 협력
 - 사업 시행 방식 : 도비-전북국제협력진흥원 사업비 연계

참 고 문 헌

REFERENCE

- 경상북도,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2025). 2025년 경상북도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참여자 특성 분석.
- 공공정책연구원. (2025). 충청북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충청북도.
- 관계부처 합동. (2026). 20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 관계부처 합동. (2026). 20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 교육부. (202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교육부. (2025). 각 지역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
- 김혜경, 김민아 & 박민정. (2024). 이민가족의 지역 정착 지원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 및 정책컨설팅[제2편: 광역자치단체].
- 설동훈, 송영호 & 이충훈. (2024). 전라남도 이민·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라남도.
- 유정균, 정대영, 신한나 & 송영호. (2024). 이주배경인구의 다양성과 정책 대응 방안. 경기연구원.
- 전라북도. (2023). 전라북도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 전라북도의회. (2021). 전라북도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전북연구원. (2025). 통계로 보는 전북 청년의 삶. 이슈브리핑 333.
<https://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512>
- 전북특별자치도(내부자료). (2026).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정책 추진계획 사업 목록.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025).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 전희진, 이주연, 조원지 & 전아람. (2024). 지역기반 이민정책 대비 전북형 광역비자제도 연구. 전북연구원.
- 전희진, 전아람. (2026). 전북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착 경험 연구. 전북연구원,
<https://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553>
- 정동재, 윤영근, 염지선, 류현숙 & 김태희. (2022).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설계, 한국행정연구원.

경향신문. (2026.1.23.). “비자부터 정착까지”... 전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 고도화

고용노동부. (2024.4.2.). 4.22.부터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2024.7.19.). 8.5.부터 2주간 올해 3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고용노동부. (2025.12.22.). 내년도 비전문외국인력 19.1만명 도입 추진

관계부처합동. (2025.8.24.). 법무부·보건복지부, 지역 노인돌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결과 발표

관계부처합동. (2025.12.24.). 정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천명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2024.11.26.).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 등 농·어촌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추진

뉴시스. (2026.3.8.). 경북도, 외국인 정착 돕는 맞춤형 한국어교육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 (2024.6.28.). 법무부-보건복지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

법무부. (2024.9.26.).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법무부. (2024.11.27.).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

법무부. (2025.2.20.).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법무부. (2025.4.2.).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본격 시행

법무부. (2025.12.5.). 법무부, 「K-STAR 비자트랙」 선정대학 32개교 지정

법무부. (2025.12.31.). 법무부에서 「지역체류지원과», 「동포체류통합과」 신설

법무부. (2026.3.3.).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충북일보. (2025.8.19.). 충북 외국인통합지원센터 내년 출범

충북일보. (2025.11.11.). 충북 외국인 통합지원센터 설립 박차... 설치·운영 근거

해양수산부. (2026.3.4.).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자로 전남 해남군, 제주 제주시 선정

정책연구 2026-13

전북 외국인정책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발행인 | 최백렬

발행일 | 2026년 7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647-7 95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6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초연구

농촌 식품사막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전북자치도 농촌지역 마을소멸 분석 및 대응 전략: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관세탄력성 분석: 대미수출을 중심으로
202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실태조사
전북형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기획연구

전북자치도 맞춤형 메디컬 푸드 산업 육성 방안 연구
전북 Physical AI 기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전략 연구
전북형 기본사회 추진전략 연구

정책연구

기후변화 및 변화의 시대 농업분야 대응 방안
전북형 수산업 특화 발전방안 연구
전북 지역균형발전 권역 협의체 구성 및 공동사무 발굴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성과관리 방안 연구
노화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방향 연구
전북사랑도민증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농촌주민 역량 강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
청년 정주형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북형 농촌특화마을 클러스터 구축 연구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의 전략적 대응 방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미식관광 활성화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환경영향평가 협의모델 개발
전북 삼천리길 추진상황 점검 및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자치도 산불 예방 대책 및 대응체계 개선
제5차 섬발전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전북도 대응 방안 연구
익산미륵사지휴게소 고속도로 환승시설(EX-HUB) 타당성 검토
전북자치도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기초 연구
전북자치도 신중년 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육성사업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전북형 수출 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전북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연구
전북형 지역거점 창업도시 모델 개발
전북과학기술원 기본방향 설정 연구
피지컬AI 기반 첨단 모빌리티 산업 전환을 위한 전북형 모델 마련 방안
전북형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모델 마련 방안
전북자치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기본방향 연구
스마트농업 혁신 AX 거점 육성 전략 연구
동물헬스케어 산업 발전 방안
곤충산업의 그린바이오산업화 연계 발전방안 및 육성전략
자치단체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 방안 연구
전북사랑도민증 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

현안연구

새만금 RE100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여건 기초조사
통합돌봄 시행 대비 전북형 통합돌봄 지원 실행계획 수립
전북체육역사기념관 설치 적합성 검토 연구
새만금국제공항 사회적·경제적 효과 분석
광역행정통합 특별법 연계 전북특별법 특례 추진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주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9 786966 126477
ISBN 978-69-6612-647-7 (PDF)